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4

JEONBUK STATE INSTITUTE
ARCHIVE 2024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린다

바른
미래를
그린다

바른
미래를
그린다

새로운 전북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4

JEONBUK STATE INSTITUTE
ARCHIVE 2024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MoonShot Thinking, 2024







백년대계를 위한, MoonShot Thinking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1962년 9월 12일, 케네디 대통령이 라이스대학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라는 그의 선언에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회의적인 시선뿐 아니라 허무맹랑하다며 조롱을 보내는 이도 많았습니다.

“이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예, 우리의 기술이 가진 한계를 측정할 기회이기예, 다른 국가도 성공하고자 하는 도전이기예” 기꺼이 도전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약속했던 10년이 되기도 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1969년 7월 16일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MoonShot’이라 불렀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생각이 혁신적이라는 뜻에서 ‘MoonShot Thinking’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MoonShot Thinking은 반세기를 넘긴 지금에도 혁신적인 사고체계를 대표합니다.

MoonShot이 선언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달을 더 잘 보려고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아예 달에 직접 가는 탐사선을 만들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10% 개선하기보다 10배 혁신을 하겠다는 급진적이고 더 과감한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사고가 MoonShot Thinking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꾀꿉이 도전하였습니다. 달을 더 잘 보려고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 직접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과감한 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지 못했더라도 달에 사람을 보내려는 혁신적인 노력은 미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북의 도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도전에 나선 전북의 MoonShot Thinking은 다른 불가능을 헤쳐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전북연구원의 2024년은 전북의 MoonShot을 찾으려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 야기된 적이 없었던 혁신적인 발상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허무맹랑할지라도, 10년 뒤

를 내다보며 국정사업과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습니다. 먼 미래의 일뿐 아니라, 현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계획 역시 촘촘하게 다뤘습니다. 현안부터 미래 의제까지, MoonShot Thinking의 Jthink가 되고자 온 힘을 다한 2024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MoonShot을 찾는 일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오직 전북, 좌고우면하지 않고 초지일관,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그러나 꼭 필요한 그 길에 전북연구원이 늘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생각하는 길이 전북의 미래’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이 남 호 이 남 호



think



contents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4

JEONBUK STATE INSTITUTE
ARCHIVE 2024

006	발간사
010	전북연구원 소개
015	한눈에 보는 전북연구원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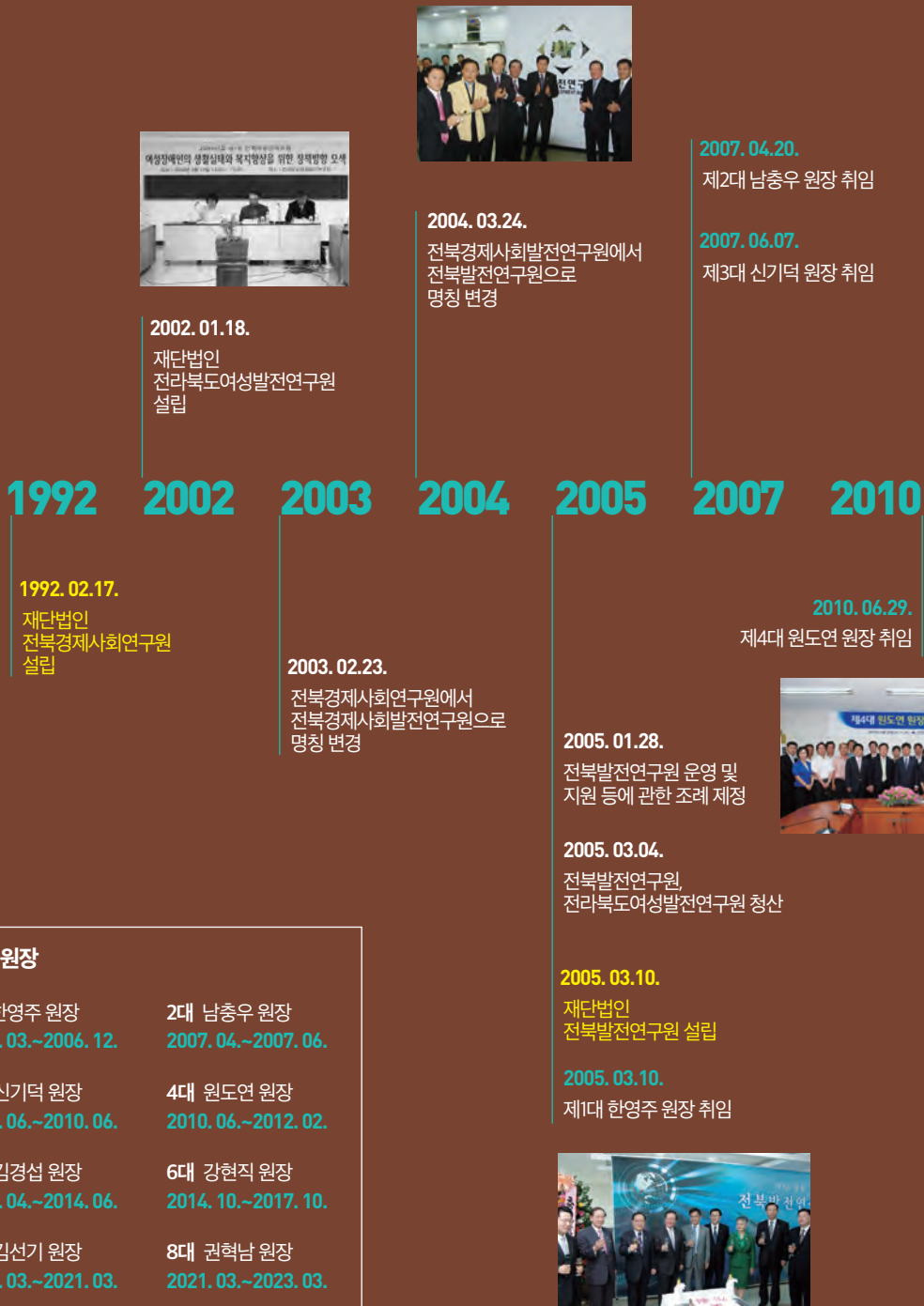
I. 2024년, 이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022	1. 부서별 연구 및 활동 개요
039	2. 2024년 연구과제

II. 2024년,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170	1. 연구 활동
184	2. 지원 활동
190	3. 출판 활동
192	4. 언론에 비친 전북연구원

연혁





2011. 11.28.
청사 이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014. 10.30.
제6대 강현직 원장 취임



2018. 03.19.
제7대 김선기 원장 취임



2023. 06.26.
제9대 이남호 원장 취임

2011

2012

2014

2015

2018

2021

2023

2024

2012. 04.16.
제5대 김경섭 원장 취임



2015. 10.12.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15. 10.16.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북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21. 03.25.
제8대 권혁남 원장 취임



2024. 01.01.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미래전략연구센터 개소

비전체계

MISSION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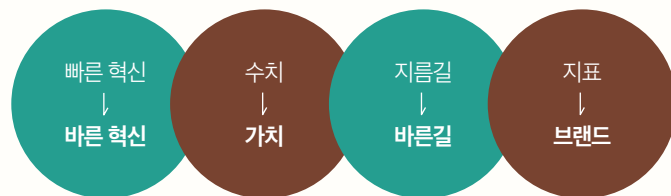
VISION

건강한 **Jthink** 더 특별한**전북**

건강한 Jthink

현안 지원 및 정책 선도뿐만 아니라 전북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단기적 성과 보다는 중장기적 성과를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창출하는 전북연구원

지속가능한 성장방식



더 특별한 전북

전북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Only One Brand' 를 창출하는 전북연구원
전북만이 할 수 있거나,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거나, 전북이 추진했을 때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ESG 경영 비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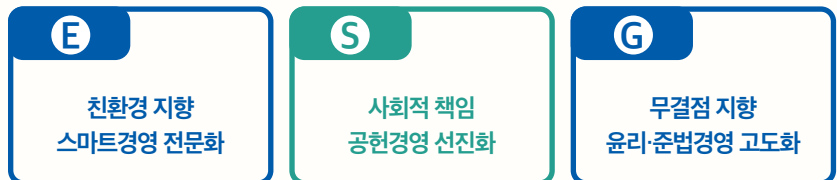
VISION

ESG경영 혁신을 선도하는  Jthink, 전북연구원

핵심가치



추진방향



추진과제



E 친환경 지향 스마트경영 전문화

- 친환경 경영시스템 활성화
- 친환경 정책연구플랫폼 구현 • 친환경 실천문화 내재화



S 사회적 책임 지향 공헌경영 선진화

- 동반성장 사회공헌추진체계 강화
- 상호존중 조직문화 구현 •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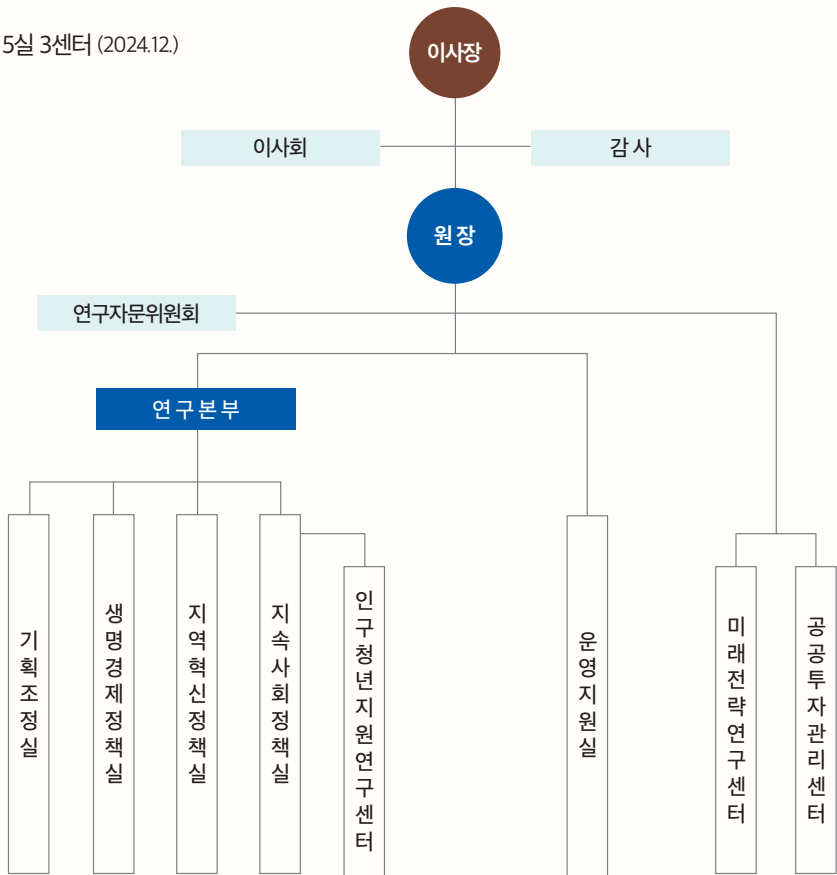


G 무결점 지향 윤리·준법경영 고도화

-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강화
- 정보공개 투명성 및 적시성 확보 • 인권존중 및 인권경영 강화

전북연구원 조직 및 예산

조직 1본부 5실 3센터 (2024.12.)



인력 정원 83명, 현원 81명, 결원 △2명 (2024.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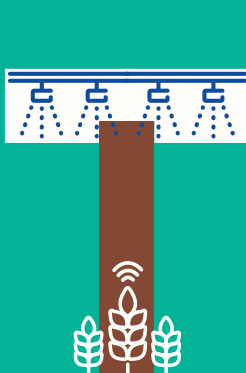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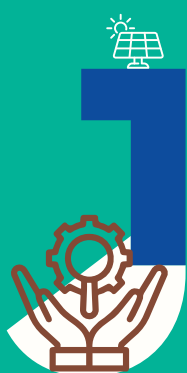
구분	계	원장	연구직	관리직 정보직	전문직	공공투자 관리센터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운영직
						연구직	센터장	연구직	관리직	
정원	83	1	32	9	30	2	1	4	1	3
현원	81	1	31	9	30	2	(1겸임)	4	1	3
결원	△2	-	△1	-	-	-	(△1)	-	-	-

* 기간제 별도(8): 탄소중립지원센터(4), 새만금연구센터(1), 전북학연구센터(1), 가야고분군(1), 의병운동(1)

예산 12,184백만원

수입			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비율(%)	구분	예산액	비율(%)		
계	12,184	100.0%	계	12,184	100.0%		
출연금	6,740	55.3%	인건비	5,853	48.0%		
사업수입	4,750	39.0%	연구비	3,421	28.1%		
기타수입	694	5.7%	운영비	2,910	23.9%		

한눈에 보는 전북연구원 2024년





전체 수행 연구과제

171건*

기초·기획·미래과제 24, 정책과제 36, 현안과제 16,
TFT과제 36(국책사업 분과별 과제 제외), 협약과제 15, 수탁과제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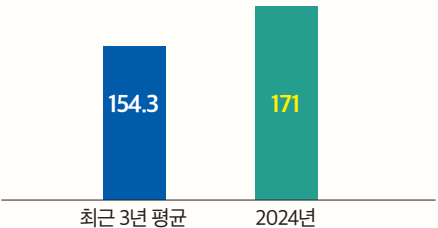


박사 1인당 책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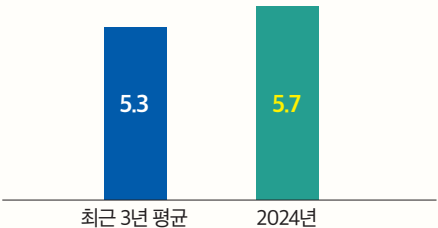
5.7건

2024년 10월 기준 박사급 연구직 30명

연간 전체 과제(건)



박사 1인당 책임과제(건)



*2024년 시작 과제와 2024년 종료 과제 포함



국책사업 발굴

30건
25,203억원*

* 발굴 국책사업 예산안 중 국비 추정액



국가예산 사업

14,694억원*

* 국가예산 확보 및 대응 지원(사업계획 예산)



백년대계를 위한 백년포럼

21강, 4,599명 참석



현안 세미나와 포럼

98건

백년포럼 21, 조인트세미나 10, 정책 세미나 17,
국제포럼 1, 국내포럼 세미나 44, 국회 세미나 1, 권역별 정책세미나 3

시군과 함께 하는 전북연구원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군산시

10개 시군 **44**건 현안 컨설팅 지원



정읍시



익산시



부안군



고창군



김제시



시군 요청 정책과제

3건 수행 지원



권역별 정책세미나

3건 개최 지원

중부도시권, 서부권, 동부권



백년대계를 선도하기 위한
인력 확충

2023년

68명



2024년

81명



혁신의 결과, 기관경영평가 최우수



2023년



2024년

I

2024년, 이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1. 부서별 연구 및 활동 개요

생명경제정책실 / 지역혁신정책실 / 지속사회정책실 /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 미래전략연구센터 / 공공투자관리센터 /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 새만금연구센터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 전북학연구센터 / 기획조정실 / 운영지원실

2. 2024년 연구과제

기초·기획·미래 과제 / 정책 과제 / 현안·TFT·협약 과제 / 수탁 과제 / 이슈브리핑·정책브리프

1.

부서별 연구 및 활동 개요



생명경제정책실

1

생명경제정책실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전북자치도가 강점을 지닌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와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연구 수행

- 디지털 환경변화 및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의 선도 사례 분석과 핵심 도정 분야별 여건을 분석하여 중장기 대응 방향 제시
- 전북자치도 조선산업의 환경규제,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산업업을 위한 성장·발전 모색 연구

전북자치도가 강점을 지닌 에너지분야의 산업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새만금산단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수행

- 전북자치도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국내외 현황 분석, 육성정책 수요분석, 정책 동향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시
- 전북자치도 특례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촉진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유화기금 사례 및 효과 분석과 도입방안 구상
- 전북자치도 새만금산업단지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대응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응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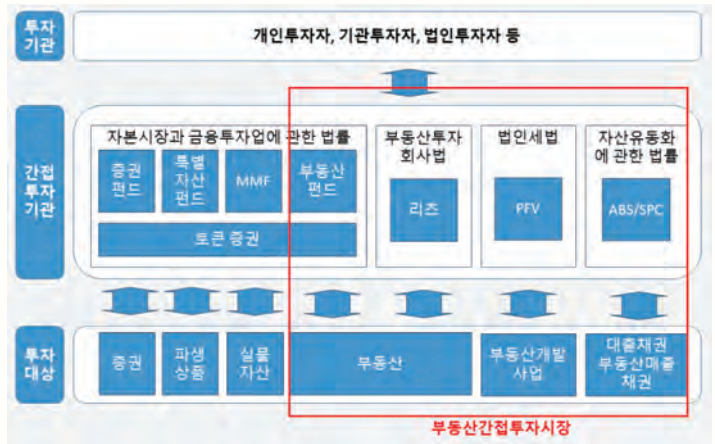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모색

전북자치도의 바이오 분야 새로운 먹거리 기회를 찾기 위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방향', '의료용 대마 산업화 구축방안' 등의 연구와 '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대응 TFT' 운영

- 국내외 첨단 기술 기반의 바이오 유망 신산업 분야를 검토하고 전북 여건에 맞는 첨단바이오산업 도출 및 산업 육성 전략 도출
- 전북자치도를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거점 조성 기본구상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마련
- 천연물 산업 고부가가치 소재로 주목받는 대마에 대해 전북자치도에서 의료용 목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도내 '의료용 대마산업' 육성하려면 선점 전략 구축을"

전북연구원, 심포지엄 개최	중 대마산업을 전북의 특화바이오산업의 주축으로 전이할 여건이 확보해야
다양한 의학의 효능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용 대마를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시켜 지역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지방은 물론, 중앙 정부 규제가 없는 선결과제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국대 약학대학 정재영 교수는 신약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도 대마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사 개인이 활발해져야"고 지적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5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의료용 대마 산업화 촉진"을 주제로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히,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정재환 박사는 식물세포주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배양기술을 설명했고, 전북대 생물학과와 의정환 교수는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대마 신물질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히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학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약개발연구소 등 각계 20여 명이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의료용 관련 연구기반이 높고 새만금 등 대마 수지 생산이 가능한 토지여건과 개발과 조화를 위한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의료용 대마 산업화 위한 토대, 총합효능으로 나눈 진통성 심포지엄에서 전북연구원, 의생명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도지와 다른 것은 국내 의료



전북특별자치도 창업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전북자치도 정보통신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 운영' 연구와 전북자치도의 부동산 개발 및 간접투자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내 한계기업의 실태와 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지역 한계기업 현황과 과제' 연구 수행

- 과기부 사업인 「디지털 혁신 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전북자치도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기획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제시
- 전북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전북자치도 특례 조항 보완 방안 제시
- 한계기업 전환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북자치도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 제시

지역경제 모니터링 강화 및 순환경제 활성화

전북자치도 경제현황의 변화와 경제 위기시 대응을 위한 '전북자치도 경제모니터링' 과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북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와 소득구조 분석' 연구를 수행, 전북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수행

- 전북자치도 경제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경제위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전북자치도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 일자리와 소득 부분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속보성이 매우 우수한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정책발굴 기초자료로 활용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근거로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 종합전략과 중점과제, 세부사업 내용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 근거 및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대학
동반 성장·발전 모색 연구**

전북자치도 발전의 주체인 지역의 대학과 인재의 지원을 통한 선순환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지역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여도 분석을 위한 '전북지역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실태 분석', 지역산업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수행

-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RISE 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전략 및 프로젝트 도출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등 지역대학의 기여도를 파악하고 지역발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역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분석 및 맞춤형 교육 운영방안 마련

**쌀 경영안정 정책기획과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개선방안 마련 연구**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생산자 경영안정을 위한 '전북형 쌀 경영안정기금 조성·운영 방안 수립' 연구와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 목적으로 추진해온 '전북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수행

- 전북형 쌀 경영안정 기금 조성의 목적, 기본개념, 운영전략, 운영체계, 근거 마련 등 기본구상 제안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품목확대 등 개선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안정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 제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과
청년농업인 유통 조직화 전략 연구**

수출 여건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연구와 청년농업인의 혁신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조직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

- 수출 농산물 품목 조사분석, 농산물 수출 시스템 과제 도출, 유망품목 발굴, 단지화를 통한 수출전문조직 육성, 주요 품목 수출전략 등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재배 현황과 유통경로 등 실태 파악을 통해 소비자 선호에 맞춘 계획생산 생산·유통 전략 방안과 통합마케팅 참여 유도 방안 등 마련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역농업 연계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안 김치클러스터 조성' 연구 수행

- 지역농업으로 생산한 원물이 식품기업으로 투입되어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반 발전을 위한 방안 도출
- 부안군의 특화 상품인 곰소 젓갈과 천일염을 활용한 김치 생산·유통·판매 기지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농업·농촌 전통자원과 농생명 미래 자산을 발굴·연계·육성하기 위한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에코뮤지엄 구축 방안’ 연구와 시군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위한 ‘지역자원 활용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한의약 육성 법률 및 조례 제정에 대응한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연구’ 수행

- 농업·농촌의 유형형 유산과 농생명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자산 (종자·미생물 등)을 발굴하고 보전·육성하는 방안 모색
- 전북자치도 내 시군의 반려산업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펫케어 관련 동물용의약품, 펫푸드 등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 마련
- 한의약 육성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한의약 육성 전략과 분야별 과제, 세부 사업 등을 마련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농촌활력 전문조직 설립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전북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 업무 매뉴얼 제작 연구’를 수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시행에 대응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대응지원 TF’ 운영

-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을 위한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등 분야별 발전방향 및 계획내용 마련
-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업무매뉴얼 개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및 실행 가치에 따른 지자체 담당자 업무추진 프로세스별 중점 사항 작성
- ‘지방자치단체 출차·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도출연 재단법인 설립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식의자료 작성 및 심사 대응 등 지원

소멸위기에 대응 농촌공간 혁신과
계절노동력 확보 방안 연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영·관리방안' 연구 수행, 전북자치도 특례 방식의 농업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 인력 계절근로자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수행

-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군 계획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은 물론 광역위원회의 심의·승인 원칙으로 활용
- 농업 인력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계절근로자제의 도입·운영 관련 모델 개발과 함께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전북 농생명의 미래 혁신 전세계 알렸다

제1회 전북포럼 성과 보고회 개최
장마틴 등 주요연사의견 수용해
스마트팜 확대 첨단농기계 발전
글로벌푸드 중심지구출발 추진

‘생명 강제’ 실행을 주제로 추진한 제 1회 전국포럼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가치, 방향성과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강제’의 미션을 ‘**안전·**’라는 주제로 차

달 개화한 바 있는 해외 진보포럼 [DFP]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정은 경제박사 지사를 비롯해 도열 자연의원, 이인선, 임복래 원장, 민영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해외 진보포럼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연사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토의와 함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핵심국장 빈센트 조지 마틴 등 주요 연사들이 해명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전략회의의 의신과 기하, '자연 존

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대응 전략
등과 관련 스타트를 확대, 자원형 등
가게 실험장을 거점으로 한 농가
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4대산업을 중심
으로 안락, 수조, 수조, 수조 등을 주
전과 나가는 계획이다.

북미, 이반 포에에 참여된 인사들
이 "전통식품자원의 새로운 출발
을 앞두고 집합이 농정정책 수립
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번째로
함으로서 이념이다. 내일같이 등 배
고 해외산업을 농정정책 원본 등 200
대까지 참여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

고 광가치 만물,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과 같이 국제행사로서 정책성을 확립해 전국민의 고수 브랜드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차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농업과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차와 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인류가 농생명산업 혁신의 적대자를 대역외로 만들라는 기회의 창"이라며 "앞으로 정책포럼을 전국민의 축복함과 상징성을 지닌 글로벌 포럼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후플레이션 대비 대체식품 개발 속도 내야”

지역농산물 수급 영향 등 불가피
전북도, 농식품산업 전환 제언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확산과 식량 소비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수급缺口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이집트 전직총리(현직 이집트 농업부 장관)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농산물의 생산환경과 소비 시장의 변화변화가 새로운 식량정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부

이와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식량정책을 위한 농식품산업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는 곡물·축수 등에 변화

중국의 저마다 전통삼과 같은 특
산물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슬기나, 파파초와 같은
한국의 선과 수확이 전통삼을
일종의 생산자와 가축사육자를
이웃으로

자녀와 함께하기도 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전통삼의 생산이 30°C
로 상승하면, 신선성을 할기까지
3.0%로 떨어진다. 이는 같은 해에
기온이 월평균 30°C까지 지수다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많이 찾아
온다.

현재 2월에 발간된 IPCC(Intergov-
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 4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를 수
평으로 보면 1990년 이후 1.5°C
에 달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1990년
전반에 걸친다는 농업 생산량의
손실과 함께 농업의 사용된 물을 20
년은 20% 이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대식육물은 단백질 공급 수단일 뿐 아니라, 콩, 조, 호박, 미늘발과 같은 다양한 배합을 5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가래와 농성분 실험을 통한 단백질 조성을 보다 정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식물성·단백질원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방 저지방 단백질을 원료로 한 배합을 개발해 가래에 혼합하여 연고로 건조한 연고용 조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저지방 단백질을 원료로 한 배합을 개발해 가래에 혼합하여 연고로 건조한 연고용 조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저지방 단백질을 원료로 한 배합을 개발해 가래에 혼합하여 연고로 건조한 연고용 조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지역혁신정책실

2

지역혁신정책실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모색 연구

2025년까지 진행될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방안' 연구와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향 기초연구' 수행

-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전북자치도 차원의 사전 대응방안 모색
-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개항에 대비하여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등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급 개선 및 재난안전 강화 방안 관련 연구

전북자치도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연구와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센터 운영 및 발전 방안' 연구 수행

-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 개발계획 검토와 물 수요량 분석을 통해 용수 수급 계획을 점검하고, 새만금 MP 재수립시 용수확보 방안 마련
- 국내외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현황 및 도내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등을 위한 기본구상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특화 콘텐츠 및 관광자원 개발과 수산 경쟁력 강화 연구

전북자치도의 자산을 활용한 관광 및 콘텐츠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유무형자산의 글로벌 콘텐츠화 전략' 연구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화 관광자원 개발' 연구를 수행, 전북자치도 수산자원을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 산업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연구 수행

- 전북자치도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모색
-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관광활성화 차별화 전략으로 관광자원의 특화 개발 방안 마련
- 상업화 단계의 육상 김 기술(종자·생산)을 개발하고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 아쿠아팜과 육상 김 전용 가공·유통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역내 가치사슬 형성 및 순환적 발전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설 정책 및 혁신도시 성과 공유 관련 연구

전북자치도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와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 방안' 연구 수행

- 1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으로 사회주택 정책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대지의 조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도시차원에서 대지의 조경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지속사회정책실

3

지속사회정책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포럼 운영 및 성과체계 구축 연구

전북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포럼 기획 TFT'를 운영, 외부 법정평가인 국무조정실 성과평가에 대응하고, 특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부 자체평가인 자체 성과모니터링 평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수행

- 제1회 전북포럼(JeonBuk State Forum)은 전북자치도의 현안인 '농생명산업'을 주요 주제로 하여 국제적 연사들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생명경제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 실천전략을 모색
- 전북자치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평가체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성과 목표 및 지표,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의 효용 체감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방안 마련

전북특별법 실행계획 수립·추진방안 연구 및 추가 특례 발굴

2024년 12월에 시행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국제 문화관광거점 조성 관련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특례'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과 지정 방안 등 연구

'전북특별법' 추가 개정(2단계)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관련 특례 발굴' 연구를 통해 도시군 특례 발굴과 제3차 법개정을 위한 법률안 마련을 지원,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 및 이민 관련 아젠다·특례발굴을 위한 공동 국회세미나 개최

- 24.6.19~20. 전북·강원 국회의원 개최,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주관 / 재정(전북연구원 주관)·외국인분야(강원연구원 주관)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특례화 방안

미래사회의 선제적 대응과 현대사회의 사회적 질병 대응 연구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4일제 사회와 관련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고 전북의 기회로 활용할 전략을 구상하는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연구 수행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및 생활인구 유입방안 마련 연구

저출산 현상의 핵심에 있는 청년층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와 법무부의 인구감소 대응과 기업 인력난 해소 정책에 대응해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방안 연구', 혁신적 청년활동을 기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반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와 정부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수행

- 저출산 심화 원인을 진단하고 청년층의 결혼·출산·양육 인식과 정책 수요를 토대로 한 저출산 완화 대책 마련
- 재외동포 거주 현황 및 기본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재외동포 유입·정착 방안과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제시

- 새롭게 유입되거나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청년활동 기반 지역인구활력 사업발굴 활용
- 전북자치도의 생활인구 현황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정책과제 도출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인구 정책방향 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인구 감소 대응 지원

인구·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및 지역 이민을 통한 인구 활력 방안 제고를 위한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수행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특성분석과 정부의 인구정책 및 타시도 인구정책센터 사례연구를 통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의 중장기 운영전략 마련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는 투자사업 발굴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결과도출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컨설팅
-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김제시의 새로운 인구활력의 주체로 외국인에 대한 일자리와 정착 등 통합적 정책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고용기회 분석 및 여성청년인구 확대 방안 모색

지역의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 한 도내 청년 고용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청년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시장 실태 및 청년 고용기회 분석’ 연구, 청년 여성의 인구유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확대방안 연구·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

- 지역 청년의 고용기회 및 노동시장의 실태분석을 통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 고용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일자리 활성화 전략 마련
- 청년의 유출입 규모 및 유출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청년 친화 일자리 유형 제안
- 여성 청년인구의 현황 및 지역 여건분석을 통해 자연적·사회적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안심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청년여성인구 유입방안 모색

전북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모색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 수행,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인권정책 방향과 세부 실천과제 도출을 위해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연구 수행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인구의 돌봄수요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돌봄정책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등 긴급한 돌봄이 요구되는 돌봄 수요층에 대한 통합적 돌봄지원 방안 모색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 구상 마련
- 국내외 장애인 인권동향 진단과 전북자치도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 장애인의 예방적 인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모색과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분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와 프로스포츠클럽 유치 효과분석 및 프로스포츠클럽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수행

- 도민의 생활체육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 발굴
- 프로스포츠클럽 리그 현황, 유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리그 확장과 전력평준화 간 관련성, 구단과 연고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및 유치방안 관련 정책적 시사점 도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테크 및 정책기반 연구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 수립 이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24.2.) 및 기초자치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전북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세부과제를 확정하였으며, 14개 시·군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수행

전 지구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수립' 연구 수행

- 기후테크 산업 정책동향 분석, 핵심아이템 발굴, 지원정책 제언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테크 선점을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도출

기초자치체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 아이템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와 환경정책 및 생명경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자발적 실천문화 기반구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수행

- 도시는 밀도와 효과 측면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핵심공간으로, 도내 탄소중립 녹색도시 확대를 위한 선도도시 모델 제시
- 전북자치도 특례(환경교육도시 조성)와 연계한 환경(탄소중립)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 및 정책과제 모색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전략과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방안 연구

생태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기여 등 다기능 공익형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수행

- 생태·환경자산과 지역의 생태계서비스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보전·관리하고, 민간의 인식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활성화를 위한 특례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전북 지역의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국내외 정책동향, 전문가 포럼,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시·군별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확대 등을 통한 생태관광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도출

4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개요

전북자치도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정책 대응을 위해 필요한 DB구축, 현황조사, 연구지원 등을 통해 인구활력 제고방안 마련

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확대방안 연구(청년여성을 중심으로)를 포함하여 기초연구1, 기획연구 1개, 미래연구 1개, 정책연구 2개, 현안연구, 협약·수탁연구 2개 인구정책관련 총 8개 과제 수행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및 인구감소지역 출산보육통합센터 등 공모사업 지원
-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공동 세미나 개최(이민정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 방안)

5 미래전략연구센터



개요

전북자치도의 미래비전과 장기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센터 설치로 미래연구 기능 강화

활동

- 백년포럼운영
- 이슈 & 트렌드 분석 : 정부정책 동향 주 1회, 국회정책 동향 월 1회
- 국책사업발굴 추진단 운영
 - 분과구성(10개) : 기업유치, 미래첨단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건설교통, 새만금해양수산, 도민안전, 환경산림, 복지, 교육·외국인
 - 국책사업아이템발굴 : 시군 발굴 72건, 분과별 전문가발굴 52건
- 네덜란드 포럼 구성 및 운영 : 원내 5개 분과(농업·농식품, 물 환경, 화학·에너지, 물류·금융, 지속사회) 스터디 그룹 운영

6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타당성조사 결과 검증 등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지방 재정 효율적 운용을 도모

활동

- 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 반영
-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발족식 참석(5.23.)
- 하반기 운영 방향 협의(전북자치도 예산과, 5.28.)
- 인력 채용 공고(투자분석 분야 박사급 2명, 7.1.)
- 2024년 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사업 사전타당성검토(9.27.)
- 신규 인력 임용(투자분석 분야 박사급 2명, 10.1.)

7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개요

지역경제와 관련된 동향 파악과 기초자료 구축을 통해 전북경제 종합정보 제공과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활동

- 2023년 4분기 전북경제동향 작성
-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참석(매월)
- 2024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경제 인포그래픽스 작성(소비자물가)
- 2024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경제 인포그래픽스 작성(생활업종)
- 지역경제 통계 및 동향 분석 회의 참석(행정안전부 주관, 5.13.)
- 2024년 1분기 전북경제동향 작성
- 2024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경제 인포그래픽스 작성(도시화 현황)
- 2024년 2분기 전북경제동향 작성
- 2024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경제 인포그래픽스 작성(주택가격)

8 새만금연구센터



개요

새만금 관련 국내 유일 연구조직으로 연구원이 보유한 새만금 분야의 축적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지속성 확보, 새만금 관련 현안 대응 체계 구축 등 새만금 선도 연구기반 마련

활동

- 새만금전문가협의회 운영: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주요 분과별 대응
- 새만금 30년사 도민백서: 새만금 관련 기록 정리 및 활용을 위한 백서 작성
- 새만금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모델 구축사업: 수질조사
- 새만금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구축 운영사업: 새만금유역 수질 및 환경관련 자료 빅데이터화 등

9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개요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지원

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2.28.)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지원 간담회 개최(1차 4.11.)
- 민간협력 사업: 친환경물감 스티로아트 탄소중립 사생대회 개최(6.2.)
- 전북 탄소중립 포럼개최(9차 5.8./10차 6.4./11차 7.8./12차 8.27.)
-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 발굴사업 컨설팅(6.18.)
- 2021년 기준 전북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보고서 작성
- 전북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9월)

10 전북학연구센터



개요

전북자치도 각 분야의 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개최 등을 통해 전북학을 정립함으로써 도민 자존감 고취 및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

활동

- (전북학 학술대회 지원사업) 한국고대사학회,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 2개 기관 선정 (각 300만원 지원, 총 600만원)
- (전북학 연구인력 양성과 학술연구지원 사업) 석사 2인, 저서 2인, 논문 5명(총 39명 지원 중 9명 선정)
- (전북자치도 문화유산 현안 대응 및 지원)
 -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 개최: 5월 29일~30일, 제주문화관 및 제주 일대, 약 90명 참석
 - 임진왜란 재조명, 무민공 황진 장군 학술심포지엄 개최: 6월 26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
 - 전북자치도 학예사 세미나 개최: 7월 5일, 전북연구원, 약 45명 참석
- (전문학술지 『전북학연구』 발간)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전북학연구』 학술지 11-12권 발간: 5편 게재(14편 투고, 5편 게재)
- (시·군 지역학 지원사업) 한국문인협회 군산지부, 전북대 이야기연구소, 오래된 미래연구소, 전북잡지의제발굴연구회 5개 기관 선정(각 500만 원, 총 2,000만 원 지원)
- (찾아가는 전북학) 전북학 5개 종합대학(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교육사업 실시(각 500만원 지원, 총 2,500만 원)
- (전북학주간) 1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발표회, 유명 강사 초청 대중 강연, 개국과 호국 관련 전시회 등 진행(9월 12일~14일, 전라감영 일대)

11 기획조정실



활동

- 경영평가·경영계획·연구사업 운영, 연구기획·운영 지원, 연구정보·자료 수집·관리, 간행물(연구보고서, 이슈브리핑 등) 출간·관리, 직원·연구과제 평가 관리, 대외협력(도의회, 권역별 정책지원단, 도민 소통), 연구원 홍보, 자료실 운영, 연구성과물·자료 축적 및 DB화 등 담당

12 운영지원실



활동

- 이사회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연구 관련 회계 사무, 위·수탁 용역·공사·물품·계약, 연봉, 급여 등 총액인건비 관리, 자금 및 기금운용, 교육, 복무·노무관리, 서무, 청사, 시설 관리 등 담당

2. 2024년 연구과제

연구과제 목차

1. 기초·기획·미래 과제

045	기초과제 23GI05 인구감소대응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046	기초과제 23GI06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047	기초과제 24GI02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048	기초과제 24GI04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용담댐을 중심으로
049	기초과제 24GI06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 방향 기초연구
050	기초과제 24GI1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고용기회와 노동시장 실태분석
051	기획과제 23GI16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052	기획과제 24GI01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053	기획과제 24GI03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지원 타당성 조사 연구
054	기획과제 24GI05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연구
055	기획과제 24GI07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전략
056	기획과제 24GI09 전북자치도 주력산업 디지털 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057	기획과제 24GI10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058	기획과제 24GI11 국가인문정원 구상 연구
059	기획과제 24GI15 벨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전북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분석
060	미래과제 24MI01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061	미래과제 24MI02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062	미래과제 24MI03 「태조 이상계」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063	기초과제 24GI1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063	기초과제 24GI1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064	기획과제 24GI16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에코뮤지엄 구축 방안
064	기획과제 24GI17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2. 정책과제

067	23JU18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068	23JU19 신해양시대 대응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공간 확보 방안
069	24JU0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070	24JU02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071	24JU03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072	24JU04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도입방안 연구
073	24JU05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
074	24JU06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075	24JU07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연구
076	24JU0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077	24JU09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연구
078	24JU10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079	24JU11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방안 연구
080	24JU12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081	24JU14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082	24JU16 전북자치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083	24JU17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084	24JU18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085	24JU19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086	24JU20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및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087	24JU22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 방안
088	24JU23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 발굴
089	24JU25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정책 구상

090	24JU26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091	24JU27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092	24JU28 전북자치도 정부 R&D 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093	24JU30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094	24JU31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3. 현안·TFT·협약 과제

097	24DA01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097	24DA0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098	24DA03 전북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098	24DA04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099	24DA05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
099	24DA06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100	24DA07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방향
100	24DA08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 운영
101	24DA09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적용을 위한 건설에너지리빙분야 연구조사
101	24DA10 전북 정책네트워크 인적자원 구축 연구
102	24DA11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사업 사전검토 기준 마련 및 3차 투자심사 대응
102	24DA12 지역기반 이민정책 대비 전북형 광역비자제도 연구
103	24DA1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과 미래 전망
103	24DA15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104	23TF03 2023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104	23TF18 탄소제로 건축 촉진 TF
105	23TF19 전북연구원 ESG 경영 전략 수립 TFT
105	23TF20 전북연구원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TFT
105	23TF21 전북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7)
106	23TF22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3
106	23TF23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대응지원 TFT
106	23TF24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포럼 기획 TFT
107	24TF0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지원 연구
107	24TF0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대응
107	24TF03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108	24TF04 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대응
108	24TF05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TF
108	24TF06 2024년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TFT
109	24TF07 2024 전북연구원 연구성과 확산 및 환류사업
109	24TF08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체계 진단 및 개선방향-금강수계 시도연구원 공동연구
109	24TF10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 운영 TF
110	24TF12 2024 권역별 정책지원단 운영
110	24TF13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대응
110	24TF14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총괄분과
111	24TF15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기업유치분과
111	24TF16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미래첨단산업분과
111	24TF17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농생명분과
112	24TF18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건설교통분과
112	24TF19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새만금해양수산분과
112	24TF20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도민안전분과

3. 현안·TFT·협약 과제

113	24TF21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 환경산림분과
113	24TF22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 복지분과
113	24TF23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 교육·외국인분과
114	24TF24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 문화체육관광분과
114	24TF25	2024년 네덜란드 연구포럼 운영 TF
114	24TF26	전북자치도 저출생 극복 위한 대책 마련 대응
115	24TF27	새만금국제공항 물류포럼운영 TF
115	24TF28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 TF
116	24TF30	전북 중추도시 육성 지원 TFT
116	24TF31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계획서 작성
116	24TF32	전북특별자치도 생물문화다양성 증진지역 도입방안 연구
117	24TF34	2024년 금강권 연구포럼 운영 TF
117	24TF11	2024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117	24TF29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기본소득 추진방안 TF
118	24TF33	전북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
118	24TF35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 설계 방향 연구
118	24TF36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시도편, 권역편) 대응 TF
119	24TF38	2025 전북연구원 연구성과 확산 및 환류사업
119	23HY13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19	23HY14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120	24HY01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사업 (2024년)
120	24HY02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모델 구축사업
120	24HY03	새만금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구축 운영사업
121	24HY04	전북학연구센터 사무위탁
121	24HY05	2024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동향 모니터링 사업
121	24HY07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122	24HY08	전북물포럼 운영지원 사업(2024년)
122	24HY09	제1회 전북포럼 운영
122	24HY10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123	24HY11	2024년 농생명산업포럼
123	22HY01	전라도 천년사 편찬

4. 수탁 과제

125	22SU32	전북특별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125	23SU08	무주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용역
126	23SU10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126	23SU1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127	23SU19	장애인일자리 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127	23SU27	2025~2030 김제시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연구
128	23SU28	2024~2028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28	23SU30	군산시 신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용역
129	23SU32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129	23SU33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용역
130	24SU01	김제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130	24SU02	부안군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김치 클러스터 조성) 수립 연구
131	24SU03	왕궁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복원 추진방향 수립 용역
131	24SU04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132	24SU06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

4.수탁 과제

132	24SU07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33	24SU08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연구
133	24SU09 2024년도 지방(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134	24SU10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134	24SU11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35	24SU12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135	24SU13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36	24SU14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2024)
136	24SU15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137	24SU16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137	24SU20 지역먹거리계획 업무 매뉴얼 제작 연구
138	24SU21 폐·유희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138	24SU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5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139	24SU28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통계 작성 용역
139	24SU29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계획서 기반 경기·지원시설 구축 연구용역
140	24SU30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방안 연구
140	24SU05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 및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141	24SU17 완주군 도시성장 및 지역특화 발전 전략 연구용역
141	24SU22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142	24SU24 군산시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연계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142	24SU26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143	24SU27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43	24SU31 부안군 미래 아젠다 발굴과 신성장 전략 구상
144	24SU32 군산시 국책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

5.이슈브리핑·정책브리프

147	이슈브리핑 295 2024 전북특별자치도 10대 연구 아젠다
148	이슈브리핑 296 항공 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
149	이슈브리핑 297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
150	이슈브리핑 298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151	이슈브리핑 299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
152	이슈브리핑 300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광역 지역브랜드 개발
153	이슈브리핑 301 인구감소 대응 및 콘텐츠관광 전략으로서 장소 기반 <K-실감산수 콘텐츠>거점화
154	이슈브리핑 302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북자치도를 공동체형 햇빛·바람 로컬에너지의 중심지로!
155	이슈브리핑 303 '전고체 배터리', 이차전지의 한계를 넘어서다.
156	이슈브리핑 304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157	이슈브리핑 305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 개선방안
158	이슈브리핑 306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159	이슈브리핑 307 농촌지역 '식품사막화(Food Desert)'의 의미와 과제
160	이슈브리핑 308 그린암모니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열쇠
161	이슈브리핑 309 지역인구감소의 새로운 대응전략, 장소기반산업(Place-Based Industry)
162	이슈브리핑 310 농생명분야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전략 및 운영 방안
163	이슈브리핑 31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164	이슈브리핑 312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전환
165	이슈브리핑 313 농촌소멸대응, 마을단위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시작됨
166	이슈브리핑 31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167	정책브리프 6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기초·기획·미래 과제

기초과제

연구원이 전북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과제로 기획연구과제의 사전연구 성격의 연구과제

기획과제

연구원이 전북의 중기(2~3년)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로 미래전략과제 또는 정책과제의 사전연구 성격의 연구과제

미래전략과제

연구원이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의 장기(3~5년)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과제



인구감소대응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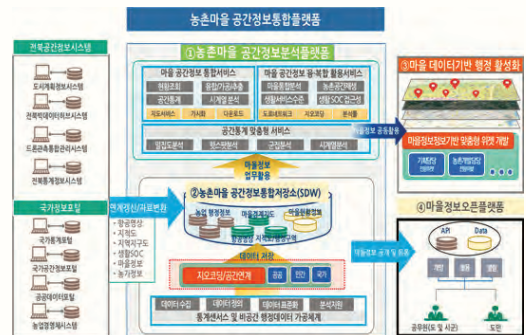
임승현(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지속적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밀착 맞춤형 계획 수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왔던 농촌지역 개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 지역밀착형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농촌마을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게 함으로써 사업 효과 증대를 꾀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농업·농촌에 대한 상세 정보부재, 지역맞춤형 계획 지원 시스템 미비로 인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과거의 정책 결정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마을 경제지도와 결합해 농업 농촌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 관련 데이터 유형을 발굴하고 농촌 마을단위 공간정보 및 활용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내용적 범위는 ① 농촌개발 정책현황 파악, ② 농업·농촌관련 시스템 및 DB구축 현황분석, ③ 농촌마을 공간정보 상세설계 및 시범구축, ④ 마을단위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방안이며, 시범 구축 범위는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 연구방법은 농업·농촌 관련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과 농촌마을 단위 공간정보 시범 구축을 위해 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 ArcGIS 공간분석기법,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마을 단위 공간정보 및 활용체계 구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접근 및 정책화가 필요하다.
-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한 농촌마을 단위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구축하는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농촌마을 공간정보 활용체계가 완성될 수 있어 통계청의 협조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원시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정은천(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점진적인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 세입은 축소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세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더불어 재정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기반이 위축됨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중은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체 사업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기에 전북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이에 이 연구는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효율성 현황조사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출된 시사점은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을 분석함으로써 여건을 파악하고, 둘째, 재정효율성 추이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재정효율성 수준 및 문제점의 진단과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재정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넷째, 재정운용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먼저 재정운용 효율성 실태분석에서는 문헌자료 조사와 원자료를 수집해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도 내부자료를 활용하고, 다음으로 재정효율성 실증분석에서는 재정효율성과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재정 현황조사 결과, 전북자치도 본청 재원별 수입은 다

소 안정적이었으나, 시군에서는 다소 불안정하였으며, 본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체 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재정운용 효율성 추이 및 현황조사 결과, 본청의 지방세 수입비율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았고, 대다수 시군이 전국 시군 평균 및 동종의 유형 평균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으로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수입비율의 제고와 세출관리 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흡한 수준인 지방보조금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 결과, 순세제잉여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지표인 지방세 수입(비율)을 감소시키고,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지표인 지방보조금(비율)을 분석 대상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 순세제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해 첫째, 잉여재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자치도형 세수추계 모형 개발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세수추계 확정이 필요하고,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과 연례적인 재정관리 분석, 셋째, 불용에 의한 이월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첫째, 지역간 재정격차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액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율 지원제도 개선과 둘째,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통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고희운(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3고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효율적인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한계기업의 현황 및 생존패턴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한계기업의 발현은 저수익·고부채·저성장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기업이익의 한계와 비용의 증가가 재무적 성과지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계기업은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높은 부채의존성과 함께 높은 이자비용의 부담, 낮은 유동성, 낮은 영업효율성과 동반한 저수익성, 저성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존패턴 분석 결과 한계기업은 한계기업의 진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관리와 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매출 성장이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였다. 결정요인 분석은 ROA, 부채비율, 매출액, 평균차입비율이 한계기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조정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이며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한계기업의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과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첫째, 정책 수혜 기업의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구축 및 부실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평가체계 구축은 정책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실 전염을 통한 연쇄 반응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더불어 부실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 정책 시행으로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 수행 가능하다. 둘째,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전환의 가능성을 보고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제 상황 혹은 산업(업종) 특성에 맞게 한계기업 혹은 정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금융기관 연계 강화 및 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부실 위험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서는 재무데이터의 관리와 금융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관계형 금융 강화하여 기업 특성과 니즈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제공 및 지원되어야 한다.

<최근 3년(COVID-19 기간)의 한계기업 비중 변화>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용담댐을 중심으로

김보국(수석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자치도에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과 섬진강댐은 지역내에 위치해 있으나 유역변경식으로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어 수자원 수요 여건이 변화된 유역권내 타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자원 재분배를 요구받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수요 및 지역내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자원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대부분 전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변 지자체의 수자원 여건변화, 공급과 이용 현황을 비교하며 수행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북 중심의 일방적 주장을 탈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자체간 수자원 공급 및 이용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물수요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자체간 이해를 증진시켜 물갈등을 사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용담댐의 물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충청권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새만금 산업단지 수요증가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 및 공급방안에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존 수자원 계획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법정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자원 수요예측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전국오염원조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실무부서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용담댐 물공급 및 이용 현황) 충청권은 대청댐, 용담댐(서천군, 금산군), 보령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의 인구증가로 광역상수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2020년 기준 2012년에 비해 300%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청댐 용수공급량은 용담댐이 완공된 2001년 이후 2%에서 평균 18%까지 증가하였다. 용담댐이 대청댐 운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운영에 따른 대청댐 용담댐 건설 전후 대청댐 유출량은 평균 12.2 m³/s, 유입량은 10.9 m³/s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홍수기에는 용담댐 유출량이 대청댐 유입량의 12% 정도이지만 홍수기 이후에는 40%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용담댐이 대청댐의 저류지 역할을 하며 홍수조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문헌(박영기 외 2021)에 의하면 용담댐 건설 후 대청댐 평균 저수용량이 832.08백만 m³에서 858.95백만 m³으로 약 2천 m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 용수(생활, 공업) 수요량 분석)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이차전지 업체의 입주완료 및 예정으로 이차전지 업종의 공원용수 원단위 재산정 및 재산정된 이차전지 업종의 공업용수 원단위를 적용한 수요량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용지의 이차전지로의 업종변경 및 산업용지 확대에 따른 시나리오별 추가 산정된 공업용수 수요량은 0.93~4.97m³/s이었으며 재수립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근거를 제시하였다.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 방향 기초연구

나정호(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새만금국제공항은 여객 수송을 중심으로 하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여객 유치 경쟁과 불확실한 수요 환경을 고려한 공항 활성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항공물류 산업 경쟁력은 낮지만, 지역 내에는 한중 국제카페리 항로, 특송 화물 통관장,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특성화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새만금국제공항에 항공물류 기능을 도입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항공물류 전략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기회와 장점을 강화하고, 상대적 약점과 외부 위협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특성화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을 제안하였다. 새만금 관문형 복합물류거점으로 항공, 해상, 육상 복합운송 체계 구축, 트라이포트 전략으로 물류 효율성을 높여 서해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중심지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새만금국제공항, 군산항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물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Sea&Air 서해 중부권 특송물류 거점으로서 새만금국제공항과 군산항 연계 Sea&Air 복합운송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고부가가치 화물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신선물류 거점이 될 수 있다. 스마

트팜·아쿠아팜, 콜드체인 시스템을 연계한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선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출을 지원할 수 있다.

-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항공물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산업 다변화, 물류비 절감 효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유입,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물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라이포트 전략을 통한 물류 효율성 향상,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별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새만금, 서해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군산항, 새만금신항 등 물류 네트워크 확장으로 고부가가치 물류가 가능한 서해 중부권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넷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물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선 농수산물, 의약품, 첨단 산업 등 고부가가치 화물에 대한 처리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친환경 물류 시스템과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친환경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확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연구 결과를 통해 여객과 물류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항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 전북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새만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기업, 전문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포럼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고용기회와 노동시장 실태분석

전희진(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축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양질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인해 청년 유출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비경제활동 인구와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동시장 구조와 청년 고용 기회를 심층 분석하여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 연구방법은 정책분석, 통계분석, 심층면접으로 수행되었다. 정책 분석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을 분석해 효과성과 한계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계 분석에서는 전북 청년 고용 현황, 임금 수준, 노동 조건,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등 주요 지표와 첫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전북 지역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구직 경험, 근무환경 만족도, 희망 일자리 조건 등을 조사하여 전북 청년들의 노동시장 경험과 요구를 기반으로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굴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20~29세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교육 및 일자리 부족 등 지역 내 환경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노동시장은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고용 구조와 특정 산업 편중 문제로 인해 청년들에

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첫 일자리에서 전공 적합성이 부족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 심층면접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들은 구직 과정에서 실무경력 요구와 자격증의 낮은 실질적 효용성,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 이주를 고민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 접근성 부족과 맞지 않으면 빠르게 이직하는 직장관이 결합되어 청년 고용 안정성 낮은 상태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청년 고용 안정과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 연구과제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사회연금 제도 설계, 구직-구인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쉬었음’ 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친화적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지역 특화 산업 다각화,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하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청년 노동시장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구직 활성화와 정책 접근성 확대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김시백(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에너지 부족현상 심화, 고령화 사회 가속화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생물제 정보 분석, 각종 기능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진단 및 치료제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 11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바이오산업은 2023년 5월 추가로 지정하였다.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심화되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신산업분야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향후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신청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바이오 기반 유망 신산업 및 기술을 검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점 기술 중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략 도출을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전략 방향에 맞춰 오가노이드 기반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데이터 기반 바이오기술 상용화 전략, 플랫폼 기반 기업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거점별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는 첨단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가

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오가노이드, 재생 의학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가노이드 기반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데이터 기반 바이오기술 상용화 전략, 플랫폼 기반 기업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거점별 개발 전략을 제안하였다.

- 오가노이드 기반 첨단바이오 육성 전략으로 오가노이드 상용화 난제 해결을 위해 바이오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천연소재 기반 오가노이드 시장의 선제적 개척, 제한적인 내부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 구축, 글로벌 혁신 허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기반 바이오기술 상용화 전략으로 바이오 공공데이터 구축을 통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 데이터 수집·저장·분석부터 새로운 치료법 개발까지 절차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플랫폼 기반 기업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전략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저장·검증·학습의 과정을 자동화해 생물학 실험과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바이오 자동화 플랫폼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혁신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감안하여 전주, 익산과 정읍을 각각 소부장 산업화 촉진, 제품 생산, 바이오 공급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개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 이 연구는 이후에 바이오특화단지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반적으로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인 연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 전략 및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천정윤(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최근 국내외에서 생태·환경자산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전북의 특성을 살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하되 시범연구 성격을 감안하여 생태·환경자산 분석과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은 전주시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책동향과 주요 추진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립생태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주시와 익산시의 생태·환경자산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자료기반 분석과 수요기반 평가를 실시하였다.
- 연구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과 정책동향 및 국내외의 추진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시범대상지역인 전주시와 익산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여건을 생태·환경자산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자료기반 분석과 시민참여 기반 평가를 통해 파악하였다. 셋째,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으로서 시범대상지역에 지역특화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대상자가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지역은 주로 보호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기

지원도 제한되어 있다. 향후 지역 특화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현재 국내 30개 지자체, 전북 5개 지자체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주로 철새도래지에 집중되었다. 반면에 철원(두루미)과 순천만(흙두루미) 등 국내 우수사례는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불제 외의 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국외사례는 생태계서비스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공급에게 지급하는 연결체계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 전주시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생태·환경자산의 변화(1990→2020년)와 생태계서비스 11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물 공급량 감소, 탄소저장량 감소, 질소와 인 저류량 증가, 열섬조절량 감소, 경관가치 감소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전주시는 ‘하천 환경 정화’,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익산시는 ‘경관숲 조성·관리’,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관목 덩굴 조성·관리’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자료기반 분석(Top-down)과 수요기반 평가(Bottom-up)를 종합하여 시범대상지역에 필요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전주시 9개 항목, 익산시 14개 항목을 발굴하였다. 둘째,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 계약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② 단계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사업 제안,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정책과 제안, ④ 재원확보 방안, ⑤ 기업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⑥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⑦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안을 제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지원 타당성 조사 연구

이성재(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자치도는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시군당 700억 이상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서남권은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지원 정책 요구가 증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내 시군 간 지역발전 격차 분석 등을 통해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 제도, 사업예산, 사업분야 등을 제안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동부권 사업(1·2단계) 평가결과, 식품·관광 중심의 대표 자원 중점 육성으로 식품산업 매출액과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으며, 고용유발계수가 1.73명(전국 평균 0.77명)으로 높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식품분야 사업 확대와 관광분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의 필요성으로 정부와 도정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강화가 필요(국정목표_지방시대, 서남권이 성장축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다. 균형발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 외 14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관할 시도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선정·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KDI 지표에 따른 도내 14개 시·군의 상대적인 지역낙후도지수 분석 결과 동부권과 더불어 고창군, 부안군 등 서남권의 지역낙후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비율 및 전북 인구감소 내 비중 등이 서남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서남권의 인구매력 역할 강화 등 신속한 골든타임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 서남권 지원 제도 검토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통합)신규 제정될 예정이다. 시기는 1안

으로 동부권특별회계 기간 종료 후인 2029년과 2안으로 동부권 지원 조례 종료 후인 2031년이다.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지역 선정,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위원회 운영 등이다.

- 신규 조례 시행 전 서남권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부권 포용성(동부권특별회계), 서남권 시급성(우선지원 지역), 도 재정 건전성(재원 및 예산규모)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계별 지원안으로 1안은 순 도비 지원('25년~'28년)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29년~), 2안은 순 도비 지원('25년) →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도 광역지원계정('26년~'28년)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29년~)을 제안하였다. 지원 규모는 도내 인구감소지역(11개 시군)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광역지원계정의 3개년 평균 지원 금액 고려해 년 20억원 규모로 제안하였다.
- 연구 결과를 통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부권 4단계 사업 추진 시 식품 기반 산업 육성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분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시군별 유사·중복사업을 지양하고 한정된 예산의 실효성과 시너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시군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전북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넷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시 사업기획부터 예산반영 및 집행, 성과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성과 환류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연구

장남정(선임연구위원), 라영(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탄소중립의 핵심 공간인 도시에 대한 법령과 제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적합한 모델을 탐색하고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명시된 탄소중립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 1항에 의거한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정책 동향, 관련 법령, 제도, 사업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도시 모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통해 전북형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략도출을 위해 문헌 및 정보 검색과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 형태 및 도시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및 세부 과제 수립을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한 탄소중립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한 생명경제 녹색도시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녹색도시' 개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14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적 개념을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 공간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탄소중립 녹색도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선도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 국내외 탄소중립 녹색도시 관련 정책 동향과 도시 사례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한 목표 및 구체적인 계획수립 체계 존재, 둘째,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구축, 셋째, 다양한 부문의 탄소중립 수단을 복합적으로 적용이다.
-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북형 탄소중립도시 모델 구축, 둘째, 광역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셋째,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1) 기반구축, 2) 지속성 확보, 3)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별 세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전략1] 기반구축을 위해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을 지속하고 전북형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정제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탄소중립 중간 지원조직 및 조례, 위원회 구성 등의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체계 구축,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부처별 정책사업에 대한 정기적 정보제공 루트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사업을 제안하였다.
- [전략2]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탄소중립 녹색도시 평가 지표 및 환류 체계 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녹색도시 이행평가, 인식 전환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 공동체 선도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등의 주민 주도형 도시조성 프로그램, 다주체 참여형 도시조성 프로그램 등을 도출하였다.
- [전략3]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GCoM, ICLEI 등 국내외 탄소중립 협약 참여, 탄소중립 정책결정자 네트워크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도시 전복협의체 출범, 탄소중립 녹색도시 페스티벌 등 정기적 축제를 통한 선진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전략

하의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대마 식물(Cannabis sativa L.)에서 자연 발생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은 다양한 의료적 효능과 함께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은 2022년 6.7조원에서 2032년까지 24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미국의 CBD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5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대마(Cannabis)의 환각성분인 THC 0.3% 이하인 헴프(hemp)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재배를 허용하고, 의료·식품 등 다양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산업용 헴프 실증과 기관 협의체 등의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쟁력 분석과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조사 등을 통해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목표와 방향 설정, 추진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4년을 기준으로 2025~203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정보조사, 사례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산업 분석과 육성 전략을 도출하며,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AHP조사를 활용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의 여건 및 경쟁력, 정책요인 등을 고려하여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비전은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의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허브 육성”으로 수립하였으며, ① 첨단바이오 산업 중심의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육성체계 구축, ② 의료용 대마(헴프) 핵심기

술 확보, ③ 의료용 대마(헴프) 핵심기업 투자 유치, ④ 대마(헴프)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의 현황, 경쟁력, SWOT 분석,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산업육성체계 구축) ①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헴프) 규제 완화, ②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 ③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전문인력 육성, (핵심기술 확보) ① 고부가가치 대마(헴프) 품종·육종 개발, ② 유효성분 분석·평가 체계 구축, ③ 대마(헴프) GAP(Good, Agriculture Practice) 시설 구축, (핵심기업 투자 유치) ① 의료용 대마(헴프)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 구축, ② 임상시험·연구장비 등 지원 정책 확대, (유통·관리체계 구축) ① 헴프개발공사 설립, ② 의료용 대마(헴프) 인증제도 도입





전북자치도 주력산업 디지털 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이지훈(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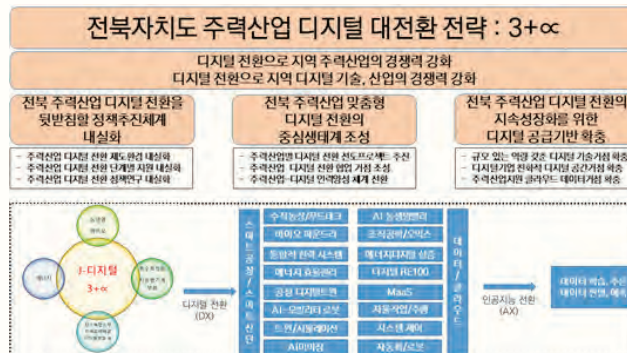
1. 연구목적 및 방법

- 세계적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속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융성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부 연구목적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연구질문은 주력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전북자치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산업의 여건은?, 전북자치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력산업, 비디지털 산업의 여건은?, 전북자치도 디지털 전환의 위한 신규 정책수요와 중장기 정책적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다.
- 이 연구의 차별성은 전북자치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점과 전북자치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역 주력산업의 정책수요를 파악한다는 점에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자치도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획연구 과제 특성을 살려 2024년 이후 중장기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문헌, 정부부처 자료 및

통계 등의 정보조사, 전문가 설문과 자문(주력산업 분야별)과 인터뷰 등으로 추진하여 여건분석, 대응방향 등 도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자치도 디지털 대전환 대응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추진체계의 내실화 : 제도환경의 내실화,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내실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연구의 내실화 등 정책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북 주력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의 중심생태계 조성 : 단기적으로 생태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산업별 선도프로젝트를 발굴과 추진, 산업별 연계를 위한 협업 거점 조성, 모든 산업별 디지털 전환의 기초로 볼 수 있는 인력양성 추진 등에 있다. 셋째, 디지털 공급기반의 확충 :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며, 관련 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거점 확충,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공간적 환경 조성, 디지털 기업이 집적화공간 확충, 데이터의 학습, 공유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거점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장남정(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테크(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모든 범위의 기술이다. 기후테크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육성 정책(23.3)을 발표하였다.
-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테크 산업의 정책동향 분석, 여건분석, 정책사업 제안, 핵심기술 검토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테크 선점을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기후테크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문헌)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5대 핵심기술별 대표 기업을 조사하여 기후테크 기술현황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도내 기후테크 기업의 현황과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 대상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4개 분야 21개 항목, 모바일과 메일 응답, 유효응답 60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여건 종합분석을 위해 SWOT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여건분석, 기본방향에 기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5대 핵심분야별 전북도가 주목해야 할 기술(안)을 검토하고 분야별 여건을 고려한 산업육성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세계 주요국가는 기후테크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체계 전환, 무역규제 강화, 우수 인재양성 및 영입 등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탄소중립의 역할과 책임이 지자체에 함께 주어진 만큼, 자

체 차원의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 전북자치도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기후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우선과제로 1순위 기술개발(R&D) 지원사업, 2순위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으로 나타났다. SWOT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기후테크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실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미래 유망기술 발굴 및 선점, 실증단지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단계별 맞춤형 R&D지원 등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대표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전북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의 비전은 '기후테크 산업육성과 탄소중립을 통한 생명경제 실현'으로 설정하고, 비전실현을 위한 목표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기후테크 산업육성 선도'를 제시하였다. 목표달성을 위한 3대 전략은 1)실증기반 기후테크 산업생태계 조성(기술), 2)핵심기술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기반), 3)기후테크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강화(기업)를 설정하였다. 기후테크는 혁신기술 선점이 시급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등 산업 초기단계 기후테크 기술확보에 전략을 집중하고, 이후 안정화 단계에서는 아이템별 구체적인 산업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여건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3대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 12건을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내용은 행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책사업 카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후테크 5대 핵심분야별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목해야 할 아이টে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산업육성 여건, 전략, 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 목록>

전략1. 실증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전략2. 맞춤형 인프라 구축 (기반)	전략3.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기업)
01. 기후테크 핵심기술 실증단지 구축	05. 기후테크 컨트롤타워 구축	09. 기후테크 데모데이 개최
02. 기후테크 메가클러스터 조성	06. 기후테크 산학연 프로그램(RISE) 운영	10. 기후테크 박람회 개최
03. 기후테크 신산업 창출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07. 기후테크 초연결 얼라이언스 구성	11. 재생에너지 연계 기후테크 펀드조성
04. 기후테크 규제자유특구	08. 핵심분야별 기후테크 지원센터	12. RE100 투자유치 연계 창업클러스터 조성



국가인문정원 구상 연구

김동영(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정부와 지자체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자연, 역사, 문화자원의 총합으로써 인문자원에 대한 특화된 사업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의해 역사적·인문적·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문화산업, 관광진흥 등의 특례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전북자치도의 인문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 문화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인 인문자원을 특화한 「국가인문정원」의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문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국가인문정원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인문자원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시범사업으로써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 지역을 설정하고, 국가인문정원의 개념설정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북자치도 내 문화유산(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관광자원 등), 자연유산, 민속유산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인문정원 조성을 위한 전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문자원을 활용한 국내의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진체계는 1단계 국가인문정원 개념설정 및 사례분석, 2단계 전북특별자치도 인문자원의 현황분석 및 특성 도출, 3단계 국가인문정원 조성방안으로 설정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인문정원이란 특정한 공간에서 인문자원을 잘 가다듬어 배치하고, 해당공간에서 시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적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정신적 고양을 느끼게 하는 곳이

다. 인문자원은 역사적 자원, 사상/철학적 자원, 종교적 자원, 예술적 자원, 문학/언어적 자원, 문화적 자원, 자연자원으로 구분된다. 인문정원을 위한 자원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인문적,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 국가인문정원 조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문정원 조성을 위해 사회·문화·경제적 가치가 집적된 지역,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확충된 문화기반,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국가인문정원 조성을 위한 목표와 가치는 국가유산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 국가인문정원 조성은 인문자원의 분포와 가치특성에 따라 중점지구형, 거점개발연계형, 선형으로 제시하였다. 중점지구형은 역사문화권 중 유일하게 가야, 백제, 신라, 후백제 4대 역사문화권이 공존하는 장계지역을 중심으로 아이언로드 복원, 가야·백제·신라 유적공원, 백두대간 봉화탐방로, 축성술의 보고 침령산성 복원 등이다. 거점개발연계형은 공동체정신의 뿌리가 된 도작문명의 개화지로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논·농의 확장을 보여주는 부안장뜰과 계화 방조제, 벽골제와 청호저수지 등의 수리관개시설, 무안 우등마늘의 공동노동과 공동놀이, 당산제와 줄다리기 등의 공동신앙, 반계서당과 같은 토지사상, 김제동헌 등의 통치체제와 유고질서를 거점별로 조성하여 이를 연계하는 것이다. 선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인문자원을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남원시 광한루원, 구룡사, 덕지리초가, 박초월생가, 운봉향교, 운지사, 황산대첩비지, 흥부골 등의 역사자원 연계 길 조성이다.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전북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분석

김시백(책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제조업 내 비중이 큰 일부 대기업들이 역내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반면, 반대로 제조업 내 정유산업의 비중이 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정유산업의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의 존재가 지역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의 제조업 내 업종 비중과 무관하게 신성장 제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중기적 성장성)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10년간 중기적 성장성) 산업이라 정의하고, 전국 제조업 80개 소분류 업종 중 10개의 신성장 제조업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은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총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조업은 대분류 1개, 중분류 25개, 소분류 85개, 세분류 183개, 세세분류 47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분석의 편의상 제조업 소분류 80개를 추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부가가치 비중 및 증가율의 중요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이라 정의하였고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신성장 제조업을 추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2012년과 2022년 사이 10년간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반도체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 제조업은 85개 제조업 소분류 업종 부가가치 중 17.5%를 창출하였고, 2012년과 2022년 사이 10년간 부가가치 비중 증가율을 보더라도 108%를 기록하여 그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라권은 오히려 부가가치 비중이 반토막이 난 상황으로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기반 구축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의료분야 업종으로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52% 커졌고,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68% 커졌으며, 기초 의약품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은 무려 200%나 커졌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큰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향후에도 의료분야 제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의료분야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 제조업과 이차전지 제조업 등이 고도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전라권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라권이 이 업종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의료분야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앞으로 1인 가구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타 식품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시된 3개의 유치 유망 제조업별로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집중 연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김동영(책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첫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이후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유치경쟁은 국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경쟁과열에 의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등록상의 정주민구 유입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생활인구'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기 전부터 체류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추진을 고려했음에도 생활인구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종합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로 정부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여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이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화 일점표, 고드름 도표 및 텐드로그램 등을 토대로 군집의 수를 유형화하였다. 각각의 군집을 정주 인구, 통근·통학 인구, 방문 인구, 외국인 인구 등 생활 인구와 관련된 13개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토대로 그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 검증하였다.
- ### 2. 결론 및 정책제언
- 생활인구를 유형화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지역 생활인구 13개 지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정읍시와 김제시는 전 연령대의 정주민구와 외국인이 많은 지역,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은 4050대의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 무주군은 2030대가 당일 체류하는 지역, 진안군, 장수군, 임실

군, 순창군은 고령화가 심하고 체류인구도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방향은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수용성 확대, 체류기간 증대, 지역활력 인구유입, 정주화 유도 4대로 설정하였다.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위해 다양한 가치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방성을 높이고, 단기체류보다는 중장기 체류를 통해 사회활력과 경제활력을 활성화하고, 단순 방문보다는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혁신인구 유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로 유입된 방문객의 지역이주를 통한 인구유입전략이 필요하다.
- 추진과제는 4대 추진전략과 생활인구 유형화 및 공통과제 100여개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20개를 선도사업으로 제안하였다. 군집1은 생활인구 수용성 교육, 외국인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시청년 지역탐색 지원, 지역특화형비자 정주특례를 제안한다. 군집2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테마형 체류마을, 중장년 혁신거점 조성, 산악·해안활용 이주지원을 군집3은 친환경 여행인프라 구축, 1+1투어 프로그램, 계절별 한달살이, 월세1만원 청년임대주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4는 예술가레지던시, 체류형관광특화지구, 외국인사회적농장, 은퇴설계학교 및 은퇴자마을을 제안하였다. 공통적으로 복수주소제 도입, 위성사무소지구 조성, 장소기반산업형 청년업무지구, 지역이민청신설(안)을 하고자 한다.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장세길(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가까운 미래에 주4일제가 시행된다는 전제 아래, 주4일제에 따라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전망하고, 주요 분야별로 전북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뒤, 선도적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할 분야를 선정하여 다른 지역에 앞서는 전략 방향을 수립하도록 돕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 이 연구에서는 주4일제가 되면 출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여가시간이 늘어난다고 전제하고,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늘어난 여가시간이 전북의 여가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4일제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즉 이 연구는 주4일제에 따른 전북의 대응 방향을 중장기 관점에서 모색하는 기초연구 성격을 지닌다.
- 연구 범위는 첫째, 주4일제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둘째, 주4일제 실험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주4일제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북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 분석, 주4일제에 대한 실험과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여가·관광, 사회·문화, 정책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패널로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주4일제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에 관한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주4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전북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045명(전북 거주 주민 533명, 전북 외 거주 주민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는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여가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도민 삶의 질 측면에서, 문

화·관광·체육을 아우르는 전북의 전략산업으로서 주4일제의 중요성과 함께 전북의 선도 대응 분야로 ‘여가’를 설정하고,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4일제에 대응하는 전북의 방향과 전략 SWAOT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강화 전략(SO)은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건강·힐링·문화·레저 활용 거점 사업 추진, 고가의 건강·힐링·레저 콘텐츠 개발과 여행상품 발굴, 트라이포트에 맞춰 고가 및 중저가 체험 상품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과 함께 교통과 전북의 여가를 연계하는 상품개발이다. 보완 전략(WO)은 전문인력·기업을 육성하고, 여가 기반 시설에서 종사할 인력을 대학(RISE 사업)과 연계하여 양성,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야간관광 거점 조성 등 전북특별법 특례 사업 확대, 여가 양극화를 극복하는 도민 대상 여가 교육 프로그램 강화이다.
- 극복 전략(ST)은 특화 콘텐츠 개발로 고급 여가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 해소, 혁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연계 강화,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기반 관광산업 발전 모델과 부정적 영향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이다. 방어 전략(WT)은 도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현대의 문화가 지역사회로의 확산 노력, 여가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교육·치유와 여행이 결합된 복합적인 여가 콘텐츠 확대, 럭셔리 복합체험 여행객 유치 전략 추진이다.
- 전북이 대응할 6대 여가 분야로 관광·여행, 오락·취미, 스포츠·운동, 자기관리·개발, 휴식·치유, 사회교류·활동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가사회에 대한 지역의 기반으로서 SOC 구축, 전북 권역 및 자원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 현안사업과의 연계, 도민의 여가 역량 강화, 현대의 문화 확산, 주4일제 선도 지역화 등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장충희(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문화 자산의 76% 보유하고 있으며, 광역적으로 분포된 이성계 관련 설화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관련 문화산업의 활성화가 부족하고 인지도와 공감대에 비해 결과물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전주시 '왕의공원'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광역 단위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활성화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향후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광역 지역브랜드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으로 설정, 시간적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사례분석은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연구 방법 중 문헌조사는 태조 이성계 관련 연구성과 분석 및 조선왕조실록 등 1차 자료를 검토하여 전북과 태조 이성계와의 연계성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도민 및 전문가를 대상(각 210명, 10명)으로 각각 인지도와 활용당위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TEXTOM, 빅카인즈 활용을 통해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자치도에는 전국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 67개소 중 51개소(76%)가 위치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태조 이성계' 키워드와 전북 관련 키워드 간의 강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 랜드마크의 태조 이성계 관련 개칭: 주요 공공시설물 명칭을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명

칭으로 변경 (예산: 5억원), ② '뜬봉샘 - 전북특별자치도' - K-생명경제 이미지 개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문화자산인 '뜬봉샘'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예산: 10억원) ③ 태조 이성계 관련 복합문화시설 및 랜드마크 건립: '해동육룡이나라샤 테마파크', '新조선 역사관', '태조 이성계 전당' 등 건립 (사업비: 1,000억원), ④ 산재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문화자산의 연계활용방안 모색: 통합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예산: 20억원), ⑤ 기 확보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문화자산의 OSMU: 웹툰, 영상 콘텐츠, 캐릭터, 게임 등 다각적 활용 (예산: 30억원), ⑥ 태조 이성계 전문 연구기관 확충: 지속 가능한 지역 콘텐츠 유지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예산: 50억원), ⑦ 문화향유 후속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청소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 25억원)

- 이상의 정책과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광역 지역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며 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조 이성계 관련 스토리텔링(설화) 채록지 현황(전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김수은(책임연구위원)

- 지역 내 대학의 역할에 관한 관심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에 관한 연구나 관련 데이터에 대한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RISE 체계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내 대학의 역할 분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계·협력은 매우 중요해질 전망으로 지역발전계획 내 대학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에 기반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분석한다.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측정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진단모형을 개발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이주연(책임연구위원)

- 전북자치도는 저출생을 극복하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3번째에 불과해 저출생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생 정책은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특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결혼·출산·양육의 핵심 계층인 청년세대의 인식(태도)의 변화 내용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방향과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저출생 원인 진단과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태도) 및 정책적 수요를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대표사례를 적용하여 권역별 인프라 조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일자리, 일·생활균형제도 등 생애주기별(취업-결혼 전후-양육 등) 중점 과제와 전북만의 특화 과제를 제안한다.

* 출간일 기준 종료되지 않은 과제로 연구계획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에코뮤지엄 구축 방안

배균기(책임연구위원)

- 전북자치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외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농촌 유산이 있다. 농생명 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종자·미생물·엑테크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 다양한 공간과 형태로 존재하는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들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고, 이를 활용해 활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는 전통농업유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농생명 자산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에코뮤지엄 등을 검토하고,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김형오(선임연구위원)

- 이 연구에서는 전북자치도 특화자원 중에서 내재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종합 분석에 근거하여 관광콘텐츠 선정원칙 및 과정을 통해 글로벌 핵심 콘텐츠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K-컬처 본류(本流)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시키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국제적인 관광 트렌드를 탐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주요 자원의 경쟁력을 검토하여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분석하는 이 연구는 자연관광 콘텐츠, 문화관광 콘텐츠, 스포츠관광 콘텐츠 등으로 구분하여 글로벌 관광전북이 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북자치도를 창조·생산·체험·소비의 주요 거점으로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간일 기준 종료되지 않은 과제로 연구계획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정책 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배균기(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자체 농정으로 추진해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품목 확대 및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정책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중점과제였다.
- 연구방법은 관련 법률·제도와 연구·정책에 대한 문헌조사, 정책관계자·전문가 대상 자문회의가 진행되었다. 지원사업의 소득지지 효과와 소득안정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업이행률 등 분석하였다. 지원대상 품목 발굴을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재배현황과 가격변동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자료 활용 품목별 재배 면적·농가수 정리(노지 46개, 시설 23개) → 1차 품목 선정(18개) → 허핀달-허쉬만지수(HHI) 활용 품목별 시·군 집중도 분석 / 품목별 시장가격에 대한 변이계수 분석(상대적 가격변동성 비교) → 2차 품목 선정(12개) → 품목별 시뮬레이션 분석(지원사업 발동여부 등)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를 통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참여 확대 및 계약이행을 제고가 필요하다. 지원 품목·대상·범위의 확대와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농업과 경영안정 기여를 가져와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효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 통계자료의 한계와 불완전성 해소가 필요하다. 지역농업 특성이 반영되고 실질 생산비 보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정책의 보충성 제고가 필요하다.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연계협력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원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의 농가·생산 구조 변화를 반영, 시설재배, 과수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검토되어야 한다. 보편성을 살펴보면 시·군별 고르게 적용가능, 품목별 농가수 기준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분석하였다. 노지채소는 고구마(820), 양

배추, 가지, 당근, 시금치 순이었고, 시설채소는 오이(1,060), 호박, 상추, 방울토마토, 딸기 순, 노지과수는 대추(1,200) 블루베리, 자두, 단감, 매실, 복숭아, 배, 포도 순이었다. 변동성은 가격변동폭이 클수록 가격하락 위험이 높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품목으로 장기(16년간)적으로 살펴보면 여름배추(0.152), 양배추, 여름무, 사과(홍로), 애호박, 포도(-0.019) 순, 중기(10년간)적으로는 여름배추(0.143), 양배추, 여름무, 사과(홍로), 포도, 애호박(0.035) 순, 단기(5년간)적으로는 여름배추(0.147), 사과(홍로), 여름무, 포도, 양배추, 오이, 애호박(0.005) 순이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여름무(4회 발동), 배(3), 포도(3), 여름배추(2), 오이(2), 고구마(1) 순으로 나타났다.

- 농가 참여 활성화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통합마케팅 연계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사업계획평가, 성과평가에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반영되어야 한다. 전문조직 지원대상·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생산자조직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선별비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대상을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먹거리 종합계획 참여농가 지원이 필요하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학교급식 출하 농업인이 확대되어야 한다.
- 통계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산비 조사, 품목 확대를 위한 유통비 조사 진행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추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농가 특성(경영규모 등)을 반영한 조사 설계,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중앙-지방정부 연계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노지채소 계획 생산·출하 시범사업 보완되어야 한다. 대상품목 중점관리 7개 품목으로 확대, 가격차 보전비율 90%로 상향, 예산비율 조정(지방비 10%↑, 농업인 10%↓) 등이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전국범위 확대되어야 한다. 중점관리 7개 품목 + 광역자치단체 선정 3개 품목, 가격차 90% 보전, 품목당 10,000㎡ 상한, 국비 50%·지방비 50% 지원 등이다.

신해양시대 대응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공간 확보 방안

임승현(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상경계의 획정을 통해 해양공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전북은 해상 도계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참여한 분쟁사례가 없어 해상경계 설정 관련 자료 축척 미비와 실무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이 연구의 목적은 관련법 제정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기본방향 설정, 경계획정 전략과 세부 방안 마련 등 전라북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해상경계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응한 전라북도 해양공간 확보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을 적기에 마련하고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에 대한 논리로 활용함으로써 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 내용적 범위는 ①국내·외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된 법적 기준 파악, ②분쟁사례 검토 및 주요 쟁점 분석, ③전북자치도의 해상도계 획정 근거자료 수집 및 DB구축, ④전북자치도 해상경계 획정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 ⑤시나리오별 최적 획정 방안 및 논리개발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해상경계 획정에 관련된 연구논문 및 정책자료, 언론보도, 분쟁사건 판례 등을 통한 문헌 조사와 전북자치도 해상경계 획정 기본방향 및 대응 전략, 시나리오별 획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와 관련법률(안)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준에 대해 ArcGIS를 활용한 지도와 및 시각화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해상경계 획정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기구들은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어느 한쪽이 심각하게 불균형하지 않도록 많이 고심하

고 있으며, 국가 간의 분쟁에서 해양경계 획정에 반영되고 있는 ‘등거리선-관련사항’ 방식과 ‘관련 사항’에 대한 합리적 평가 사례들은 현재 전북자치도 상황에서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향후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판례에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에 대한 불문법상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매립지 귀속 결정을 제외하고 모두 시·도 간의 해상경계획정과 관련된 사례이며 시·군 간의 분쟁에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등거리중간선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조용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해역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단발성의 정책연구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안제정과 국가의 추진계획에 따른 해역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비하여 다양한 연구뿐만 아니라 전담연구조직과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전북자치도의 해양관할구역 적정 확보 및 타지역의 관할구역 침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전북자치도 대상해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사전 대응 용역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한 국해양수산개발원(GeoCap)과 국립해양조사원(Caris LOTS)이 보유한 등거리 중간선 획정 전산프로그램 사용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등거리중간선 획정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S/W를 반드시 구입·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천정윤(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고, 향후 10년간 생태관광 조성사업(‘25~’34)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제도 개선사항 등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으로는 정보조사와 조사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정보조사는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태관광 및 연관 분야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계획, 관련 통계자료,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 및 관련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1단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에서는 생태관광자원 지도 구축(GIS)을 실시하였는데, 생태·환경자산(자연생태), 역사·문화자산(인문사회), 마을자원 등 생태관광 자원 현황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자원별, 시군별 지도로 구축(외부 원고자문 실시)하였다.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의견 수렴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시·군 생태관광분야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12개소)’와 ‘전북 천리길(44코스, 405km)’가 조성되었고 기초 인프라(방문자센터, 생태체험관, 탐방로, 주차장 등)가 확보되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활동가(에코메니저, 해설사)를 양성하고 통합브랜드(초록원정대) 개발과 홈페이지, 가이드북, 팸플릿 등 홍보수단을 확보하였다. 생태관광 교육, 평가, 홍보,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생태관광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시군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국가생태관광지 3곳 지정, 국가지질공원 3곳 인증, 고창 운곡 랍사르 습지의 최우수 관광마을 지정 1곳 등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 생태관광 사업의 한계로는 첫째, 시·군의 정책 추진의지와 여건, 지역주민 참여도에 따라 시·군간 격차가 발생했으며, 10년간 동일 대상지에 동일 유형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차별성과 경쟁력 확보는 부족하다. 둘째, 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여 인적자원 증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부족으로 일부 마니아층에 국한된 방문객으로 신규 수요층 확보와 경제적 효과 창출에 한계가 발생한다. 셋째, 생태관광분야의 독립적 사업 추진으로 지질공원, 대표관광지 등 타 분야(관광, 산림, 환경 등)와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가 발생한다.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북자치도의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의 개념은 지역이 보유한 생태·환경자산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구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이다. 핵심키워드는 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관광, ②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③ 생물문화다양성 증진, ④ 연계와 통합, 권역화이다.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 활성화 사업, 타 부처 연계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북자치도 생태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목표, 추진전략>

비전	자연, 문화, 지역을 더한 글로벌 전북 생태관광+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생물문화다양성 기반 생태관광+ 브랜드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운영기반 확립
추진 전략	1	생태관광 자원을 점-선-면으로 연결·확대	
	2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생태관광 수요 창출	
	3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관광 실현	
	4	민·관 협력의 생태관광 거버넌스 체계 구현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오병록(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국가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등은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 전출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전북 인구의 수도권 전출은 청년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주거 정책을 다음 우선순위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청년은 주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전북에서는 이들의 노동력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양호한 주거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 연구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계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택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한 해결이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여건을 반영한 전북형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보고서를 검토하고, 사회주택 공급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지역별, 사회주택 유형별, 공급주체별 사회주택 공급 특성을 파악하였다. 사회주택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전북 사회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고 타 지역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 그리고 주택공급사업으로서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사회주택을 공급했던 주체로부터 실무적 차원과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정책적 차원의 자문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 방안을 도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형 사회주택’은 전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산을 활용하여 전북도만의 특징을 갖는 사회주택으

로 개념정의 하되, 주택부문에서 전북도 유일의 특징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되는 사회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전북형 사회주택의 특징은 사회주택 공급주체로서 전북개발공사의 참여, 그리고 청년과 함께 농업인력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사회주택 공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청년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주택 수요 대응, 사회적경제 주체의 활동, 사회주택 공급 경험을 토대로 전북형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을 전북형 사회주택의 공급 방향으로 하였다.

- 도 및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활용하여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공유지임대 사회주택사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빈집 재활용과 저렴한 주거공간 확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빈집재생 사회주택사업,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사회주택사업을 전북형 사회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기반으로서 사회주택 관련 사업기획,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주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주택사업 지원의 근거로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사회주택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주택기금을 운용하고, 각종 정보를 축적 및 제공하는 사회주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회주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주택사업의 전 과정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주택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은성태(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농산물 공급 증대와 기능성 지표물질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작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목적과 운영 현황 분석과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발전 방향 설정 및 혁신클러스터 내 보유 장비·기술 활용, 산업정책 동향 정보제공을 통한 농식품기업 유치 확대와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준공 이후 국내 식품산업 성장을 이끌었고 (2단계) 확장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하였다. 지역 농산물의 식품기업 공급을 위한 원료중계공급센터와 기능성 소재 발굴을 통한 제품화를 위한 기능성 원료은행 조성은 입주·입주 외 식품기업과 지역 농식품기업의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모델 개발 도움이 된다.
- 전북자치도 지역농업과 농식품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건 분석과 혁신클러스터 경제성 분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근거를 제시하였다. 전북자치도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식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및 정책동향 분석, 그리고 계약재배 개선과 지역 특화작물의 지표물질 발굴을 통한 기능성 식품개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북자치도의 1인당 지역 총생산(GRDP) 경제성 분석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산업 성장에 미친 객관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2단계) 확장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강화와 함께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농업 활성화와 기능성 식품개발로 인한 농식품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북자치도형 원료중계공급센터 조성 방안 제시하였다.
- 전북자치도에 특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목표와 구체

적인 추진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북대병원,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산업/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자치도가 보유한 농업 자원 활용성 제고를 통해 지역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지역 농산물의 식품기업 공급확대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 강화와 효율적인 계약재배 방식의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가 제고되어야 한다. 전북자치도 지역 농식품기업의 역량강화 및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화작물이 보유한 지표물질 발굴과 사업화, 그리고 소비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R&BD 모델을 개발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농업과 농식품산업 발전방향 제시와 함께 전북자치도형 원료중계공급센터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발전 동력 확보하였다.
- 전북자치도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식품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가 주도하는 계약재배 방식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계약재배 농가들의 조직화를 통한 회원제도 구성을 통해 계약당사자의 책임 이행에 따른 권리 확보 강화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시군 보유 특화작물의 지표물질 발굴을 통한 기능성 소재 개발과 관련 주체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사업화 모델 개발, 그리고 타 광역시도에서 출시된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북자치도 지역농업 활성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산물 공급방식 개선과 지역 농식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 및 전북자치도형 원료중계공급센터 조성해야 한다.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도입방안 연구



이지훈(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공유화 기금은 지역의 공공자원인 바람, 햇빛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바람과 햇빛 자원이 특정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공유 개념에서 출발한다. 공유화 기금의 도입으로 속도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역소멸 대응, 지자체의 새로운 재원 확보 등이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특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도입 방안을 정책연구의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북자치도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 연구는 공유화 기금의 이론적 고찰, 전북자치도의 도입여건 분석,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도입방안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전북자치도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운영방식 설계 등 연구결과물 직접 활용 기대된다. 14개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굴, 개발 촉진으로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자원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과 전북자치도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는 전북자치도의 공유화 기금 도입의 기본적 방향으로 공유자원의 공유성, 이해관계의 공생성, 적정수익과 이익공유의 공존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수익성을 갖춘 풍력, 태양광의 공유자원을 기초로 공공주도, 적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자의 발전단지를 공유화 기금 적

용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금의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으로 제시하였다. 공유화 기금(40,000kw 이상)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주민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제도와 환경 조성 필요하다. 공유화 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크게 추진근거의 확보,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과 피드백의 3가지로 나누어 도출, 제시하였다.

- 추진근거 확보 분야에서는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발전지구의 조례 제정이 제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이와 연동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추진계획 분야에서는 발전단지종합계획의 수립, 관리기관의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 및 피드백 분야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후 발전단지종합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성과, 한계를 파악하여 차수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추진근거, 추진계획, 추진 및 피드백 순으로 정책 추진 이행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



조원지(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광역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및 광역 차원의 계절근로자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해외 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운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단계별(유치 이전, 취업·체류, 귀환) 실태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안정적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하여 광역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지원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는 광역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자체의 사업 운영·관리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원조직의 설치 목적과 목표에 근거하여 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기능은 교육지원, 관리지원, 통·번역 지원, 의료지원, 상담·중재, 홍보이다. 교육지원 측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실무자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관리지원 분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최소화,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 등을 위해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근로여건 등을 관리하는데 지원해야 한

다. 통·번역 지원 측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주의 갈등 해소 및 소통 증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실무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을 위한 통·번역이 지원되어야 한다. 의료지원은 응급 건강 위기 상황 대처, 의사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 상담·중재의 역할도 필요한데 계절근로자, 고용주, 실무자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위기 상황 시 대처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중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보 측면에서는 농촌사회의 과소화·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난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 지원조직 설치·운영: 교육지원, 관리지원, 통·번역 지원, 의료지원, 상담·중재, 홍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홍보: 리플렛 제작, 홍보영상 제작, 유관 기관과의 협력·홍보, 유치 이전 ② 업무협약서(MOU) 보완 및 자문: 입국 전 사전교육 조항 추가,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 지자체 책임 강화, 업무협약서 자문, 취업·체류 ③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재 보강·배포, 찾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학당, 고용주 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인력풀 마련, ④ 업무협약 체결 외국 지자체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외국 지자체 공무원 초청 사업, 신규 외국 지자체 발굴, ⑤ 통·번역 지원 서비스: 통·번역사 인력풀 마련, 찾아가는 통·번역 서비스 제공,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 병원 동행 지원,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도내 의료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시·군 의료공제회 가입 지원, ⑧ 계절근로 콜센터 운영: 전담인력 배치, 핫라인 설치, 유사 대처 매뉴얼 발간·보급, ⑨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실근무 평가제 운영: 성실 근로자 평가지표 마련, 계절근로자 대상 안내서 배포, ⑩ 성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작업반장 활동 지원, ⑪ 전북형 농업비자(특례) 사증 발급: 특례 조항 신설, 전북형 계절근로 사증 변경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시백(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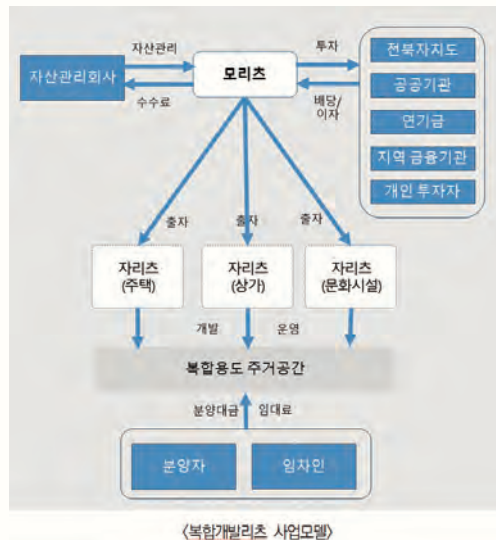
- 이 연구는 전북특별법의 부동산간접투자활성화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수행하였으며, 부동산간접투자 환경 마련 방안과 추가적인 특례 발굴로 전북특별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북특별법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투자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50% 이상을 전북도민의 지분 50% 이상인 금융기관이 매수할 경우, 일반청약 및 지분 한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4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어 위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례 요건에 맞는 금융기관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아 부동산간접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공모 예외 조건은 전북 도민의 50% 금융기관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한 공모 예외 기관이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여력으로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공모 예외 조건 확대와 상호금융기관의 여유자금 투자 한도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특례안을 제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의 범위와 타 지역의 부동산 투자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는 특례(안)을 제안한다.
-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시장 형성 방안을 제시함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유형은 복합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 미분양사업이며, 이들 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액 투자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를 지역 단위에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리츠와 투자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세제감면과 앵커리츠 설립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간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리츠 활성화를 위해 공모 리츠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특별법의 공모 예외 특례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금융기관을 지역 개발에 동참시켜 전북특별자치도의 부동산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전북특별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펀드, PFV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연구



나정호(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김 육상양식 기초기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사업화 실증을 통해 대한민국 김의 세계시장 초격차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는 육상양식 기술을 기반으로 R&D, 생산, 가공,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집적화를 도모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은 통계분석, 문헌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전략의 비전은 “세계시장 초격차를 실현하는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로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시장 초격차 실현을 위한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스마트 김 육상양식 R&D 센터 조성”,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완성화 확장” 등 기술 개발→기반 조성→활성화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 첫째, 세계시장 초격차 실현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은 김 육상양식 대량생산 기술 개발, 김 육상양식 첨단양식 국산 기자재 개발,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운영 계획 수립 등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 둘째, 스마트 김 육상양식 R&D 센터 조성은 스마트 김 육상양식 R&D 센터 운영, 육상양식 김 종자 공급 시설 운영, 김 육상양식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등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 셋째,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완성화 확장은 김 육상양식 스마트 아쿠아팜 운영, 육상 김 특화 가공·유통단지 조성, 김 육상양식 창업캠퍼스 운영 등 과제로 구성하였다.

- 추진전략과 과제별 전문가 평가 결과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스마트 김 육상양식 R&D 센터 조성, 집적화 단지 완성화 확장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는 대한민국 김의 세계 초격차 실현, 친환경 기여, 국민 건강증진과 식량 안보, 지속 가능 수산업,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효과와 어업소득증대, 수출 증대 및 외화 획득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를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 수산업 정책 목표 달성과 전통적인 김 산업 틈새시장 공략, 성장 유망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
- 둘째,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장기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공무원 순환근무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 셋째, 김 육상양식 가치사슬 플랫폼을 개발하여 소비자 안심을 위한 인증 효과, 세계시장 초격차를 선도하는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 넷째,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시설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해조류 육상양식 시장을 선점하여 세계 소비자에게 고품질 해조류 제품을 공급하는 중심으로 도약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전희진(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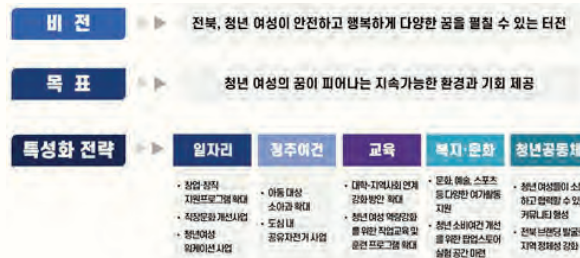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 저출생 위기의 상황에서 고령인구증 증가는 지속되는데 비해, 청년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동부권과 서남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이 연구에서는 청년여성의 지역 유출에 대한 여성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문헌조사는 인구·청년정책 선행연구 검토,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 국내외 인구·청년정책 및 사업 분석을 진행하였다.
- 청년 여성의 유출과 지속 정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 여성들의 정책 및 사업 방향 발굴을 목적으로 전북 출신 20-30대 청년 여성 FGI 및 면접조사 시행하였다. 전북에서 출생하여 전북으로 다시 되돌아온 경우, 전북 지속 거주의 경우, 타지역 출신으로 전북에 정착한 경우, 전북 출신으로 타지역에 정착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농촌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의 사례로 포함하여, 이동의 경험과 이동 결심 사유, 지역간의 장단점 비교, 정주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로 19명의 청년 여성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청년 여성들이 전북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기 위한 비전은 “전북, 청년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으로, 목표는 “청년여성의 꿈이 피어나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회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 특성화 전략으로 일자리 분야는 창업·창직 지원프로그램 확대, 직장문화 개선 사업, 청년여성 위케이션 사업을 제안하고, 정주여건 분야는 도심 내 공유자전거 사업과 아동대상 소아과 확대 사업을 제안이다. 교육 분야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확대와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사업 제안이다. 복지·문화 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 제안이다. 청년공동체 분야는 청년여성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과 전북 브랜딩 발굴로 지역 정체성 강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연구



김형오(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맞춤 콘텐츠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특화 관광자원 활용하여 지방소멸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사계절 누구나 편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관광자원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통한 더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 이 연구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과 함께, 시·군 연계관광 개발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를 통해 타 시도와의 차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연계관광 개발 사업 개념, 정부 정책동향, 국내 사례 등은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각종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전북여행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직후인 1차(2020년 1월~2022년 12월) 분석 후,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2022년 11월)과 더불어 최근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2차(2023년 1월~2024년 4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검색어로는 전라북도 여행, 전북 여행, 전북특별자치도 여행, 전라북도 관광,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전북여행 등이며 제외어로는 광고, 홍보, 네일, 출장, 상담 등 광고 및 홍보성 키워드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거점 육성’의 3대 목표 12개 과제 구상과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

시된 해양·생태관광권, 역사·문화관광권, 휴양·레저관광권 3개 권역설정을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연계관광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북권의 자연 및 지형현황, 관광자원, 시·군의 관광개발거점을 바탕으로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3개 권역 설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권역명은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K-전통문화체험권역, K-해양레저체험권역, K-산악예술체험권역으로 설정하였다.

-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K-전통문화체험권역은 역사, 문화, 종교자원 등을 활용한 한국 역사문화 일반지 조성이다. 개발방향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지이다. 대표사업으로는 K-뮤지엄밸리 구축, 금마 전통체험문화단지 조성, 정읍 복합문화창작 공간 조성, 근세 종교문화유산 재조명이 있다.
- K-해양레저체험권역은 해양, 레저, 음식자원 등을 활용한 서해안 해양레저 거점 조성이다. 개발 방향은 해양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지이다. 대표사업으로는 고군산군도 아트·나이트 아일랜드, 만경강 힐링복합레포트타운 조성, 곰소만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고창 ‘소금염원’ 프로젝트이다. 마지막으로 K-산악예술체험권역은 산악, 산림, 휴양자원 등을 활용한 동방(東邦)의 아트힐스 조성이다. 개발방향으로는 산악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치유, 휴양, 예술 등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관광지이다. 대표사업은 섬진강 패밀리 아트파크 조성, 금강변 수상&예술 체험벨트 조성, 용담호 감성예술 관광벨트 조성, 금강 하늘아래 첫물길 조성, 옥정호 아트밸리 조성, 섬진강 아트스테이션 조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하의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은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산업생태계 위기로 글로벌 조선산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과 추진 과제 발굴을 통해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산업 인프라 투자/구축, 인력양성/투입, 기술개발 및 상용화, 규제 해소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조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과 산업 육성 정책,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 국내외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선산업의 개념과 현황,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연구 및 보고서, 각종 법률과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 조사와 국내외 및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통계자료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기업, 경제지표 등을 활용한 정보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조선산업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등 조선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조선산업은 각종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건조 및 수

리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조선기자재 산업을 포괄하며, 전·후방 연관 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특징으로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기술·노동·자본 집약적 성격이 강해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다. 글로벌 조선시장은 호황기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추진과 R&D 투자 및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는 차세대 조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선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규모, 성장성, 특화도 측면에서의 경쟁력과 혁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SWOT 분석 결과, 미래선박 기술확보, 핵심 분야·산업 연계 강화,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체계 구축, 산업생태계 다각화, 조선산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의 여건과 전략과제를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비전은 “조선산업 고도화 및 생태계확장을 통한 글로벌 조선산업 주도권 확보”로 수립하였으며, 비전 달성을 위하여 산업 고도화, 인력 양성, 생태계 확장 측면의 정책요인을 반영한 추진목표를 도출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로 ① 조선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 조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핵심 분야/산업 연계 강화를 위한 고도화 플랫폼 구축’, ② 안정적인 조선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조선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인력공급 체계 마련’, ③ 산업 확장과 다각화를 통한 조선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미래선박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선산업 확장’과 ‘조선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방안 연구



이주연(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도의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연계 지역 특성 맞춤형의 외국인력 유입을 하나의 대응책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외국인 규모가 타 시도 대비 절대적으로 적고, 특히 정주형이민(재외동포, 영주, 결혼이주민) 대비 유입형이민(비전문취업·유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집중되어 있어 인구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주 가능성이 높은 정주형이민자 유치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 추진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중 동포가족(2유형) 유치 성과의 중요성과 유입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
- 그러나 전북도 차원의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대상의 정착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동포에 대한 현황과 실태 관련 기초자료 또한 거의 부재하다. 전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재외동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착지원 정책 방안 모색과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연계 동포가족(2유형) 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보고서, 논문, 자료집 등 문헌과 부처별 행정자료 검토, 둘째, 법무부·행정안전부의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 및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의 원자료 분석, 셋째, 전북 거주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대상의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및 현장·학계 전문가 대상의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국내·전북지역으로의 점진적 이주 증가 현상과 인구정책 관점에서 중국 및 고려인 동포에 대한 관심 증가 대비 전북지역 거주 동포 관련 통계·실태 파악과 정착·정주지원 정책 미흡한 상황이다.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이 아닌 재외동포 정책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동반 가족과 함께 가족 연쇄 이주를 반영한 가족 정주형 정책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 대상의 지원 기관과 연계 강화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하고, 동포지원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개선 및 원스톱지원기관 필요하다.

-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크게 (1) 재외동포 초기 적응 및 정착 지원 확대, (2)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연계 확대 방안,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제고, (4)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 강화 등 4개로 구분하고, 세부 정책과제(안) 16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
초기 적응 및 정착지원 확대	찾아기는 통번역지원지원 서비스 운영 (러시아어 통번역 지원 시급)
	초기 적응 통합지원 멘토단 운영 (이주 1년간 집중 지원)
	찾아기는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 지원사업 상담·지원 정보 공유 홍보)
	영유아 자녀 보육료·유치원비 전액 지원 및 초등학생 학습 지원
	전북 재외동포 도민증 발급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연계 방안	지역특화형비자사업 홍보 다각화
	재외동포 전용 취업 연계지원 플랫폼 구축
	해외새만금 한글학당 조성 F4R 희망 동포 밀착 유입·정착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전북 재외동포 포럼 운영
	동포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재외동포지원센터 설치·운영(거점 익산, 군산, 고창)
	행정인력 전문성·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 교육
	재외동포 개인·가구별 통계 생산·구축 및 정기적 실태조사
	재외동포 리더·자조단체·지원기관 및 러시아어 통번역가·DB 구축
	재외동포 커뮤니티 지원 공모사업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장남정(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24년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및 2050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전북의 환경교육 여건 및 이슈를 분석하고 지역환경교육 거점공간으로서 환경교육도시(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모색하는데 있다.
- 정부의 환경교육 정책동향 및 전북도 환경교육 현황분석을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환경교육도시 참여 지자체의 정책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조성 여건 및 이슈분석을 위해 환경교육 기관 관계자 및 공급자(강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SWOT분석을 통해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을 종합분석하고 기본방향 및 전략 설정 후, 전략별 세부 정책사업을 제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심층인터뷰 주요결과, 환경교육 기반은 예산·전담조직 부재, 인식 부족, 업무체계 한계, 협력체계 부족, 교육시설 부족 등의 응답이 많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 성과 관련하여 일부

우수사례 및 선도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환경교육 정책의 우려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뢰성 있는 강사 관리강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방안으로는 기반구축(예산확보, 전담부서, 시장형성, 기반시설 확보 등), 성과확대(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 메시지 전달, 전북도 정책과 연계추진 등), 협력강화(정보공유, 네트워크 강화, 도·교육청 협력강화 등) 관련 다양한 정책수요를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전략 및 정책사업에 반영하였다.
- 환경교육도시 조성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 [목표1]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통한 환경교육 거점지역 조성: 시범도시(특례)는 지자체 기반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환경교육도시(환경부) 지정을 통한 거점지역 조성, [목표2] 전북형 환경교육 모델구축을 통한 성공사례 확산: '지정'의 의미보다 지속가능한 인식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 정책모델 구축, [목표3] 타분야 상생협력 및 소통을 통한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부문별(에너지, 산림, 문화관광 등) 교류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및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의 장 마련을 제안하였다.

전략1: 기반구축	전략2: 성과확대	전략3: 협력강화
1. (특례)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6. 전북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강화	11. 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
2.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7. 지역 환경교육 축제 개최	12. 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3. 필수요건 지원1 (지역조례)	8. 환경교육 확대 연계협력 프로그램	13. 도·교육청 협력사업
4. 필수요건 지원2 (지역센터)	9. 환경교육 특화마을 조성	14. 전북 환경교육 포럼 운영
5. 필수요건 지원3 (지역계획)	10. 지역맞춤 1시군 1환경교육 사업	15. 환경교육 ESG경영 협력사업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장세길(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전북특별법」 제49조에 명시된 국제교류지구 지정 특례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구상 연구이자, 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서로서 국제교류지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또는 국제기구·단체 간 교류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 국제교류지구의 비전은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전문화, 자원화, 세계화’로 설정하였다. 전략은 첫째,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전문화에 대한 전략으로 “해양문화유산의 교육플랫폼 구축”을 설정하였다. 둘째,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자원화에 대한 전략으로 “해양문화유산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셋째,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대한 전략으로 “해양문화유산의 국제 교류 거점화”를 설정하였다.
- 지구의 권역 설정은 다음과 같다. 국제교류지구 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중문화유산의 존재 유무이다. 따라서 수중문화유산 발굴 유적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제교류지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현재 발굴 수중문화유산은 비록 없지만 향후 발굴 및 사료 조사를 통해 수중문화유산을 발굴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2차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 핵심 국제교류지구는 현재 수중문화유산이 발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활용 가치가 큰 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400km²이다. 예비 국제교류

지구는 현재 수중문화유산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이 커 향후 핵심 국제교류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구역이고, 전체 면적은 1,170km²이다.

- 지구 활성화 계획은 해양문화유산 발굴·복원 및 활용, 해양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해양문화유산 활용 체험관광 활성화, 해양문화유산 국제기구 설립, 남북 해양문화유산 교류협력으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을 제안하였다.
-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국제교류지구 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지구 지정과 동시에 국제교류지구를 활성화는 세부 사업을 발굴하는 활성화 계획수립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 지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외에 해양수산부 관련 정책(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항만 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등)에 국제교류지구가 포함되도록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 침식 관리구역에서의 해제 및 행위 제한 완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완화 등 특례를 발굴하여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 가칭 ‘세계해양문화유산센터’(ICMCH) 설립의 법적 인 뒷받침으로서 해양유산 관련 법률에 명시하거나 「전북특별법」 제49조에 명시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은성태(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자원 파악과 자원 간 연계성을 통한 특화산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여러 광역시·도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중인 만큼, 임실군 역시 지역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 임실군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이 보유한 자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지역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특화된 산업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산업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려 인구와 반려동물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확보

가 필수적이다. 또한, 반려동물 유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무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지켜야 할 ‘펫티켓’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여 사회적 공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임실군은 국내 희귀 품종인 ‘오수개’를 세계식량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의 희생과 교감을 상징하는 설화 ‘오수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반려인이 동반 여행 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임실군은 반려동물 친화적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실군동물혈액은행’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 혈액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반려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비반려인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비전

반려동물·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하는 전북자치도

목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특례 발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반려동물 관련한 지역 동계시스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간 지역 연계를 위한 주도적 역할

분야

반려동물 연관산업 법·제도 개선과 지역 연계 협력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위한 지역 연계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장성화(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 제도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이 연구는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정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사례 시군의 계획 내용 분석을 통해 시군 및 도 차원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계획수립 단계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는 2024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농촌특화지구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 농식품부의 정책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연구목표와 방향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지침 등)의 확정과 연동하여 농촌특화지구를 포함한 농촌공간계획 전반의 계획수립 및 심의·승인 기준, 추진체계 등에 대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용역 포함)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공간계획의 법적인 위상 부여 및 범위 확정) 농촌공간계획은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부분을 보조(완화 또는 강화)하고 공간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관리·성장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계획 수립 절차 개선) 현행 법령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 혼선과 계획기간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기능을 자문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의 기능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사업계획은 기본·시행계획과 수립 목적 및 범위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계획수립 취지를 고려한 과도한 현황분석 항목의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계획수립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황분석 관련 항목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완화 또는 삭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분석,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생활서비스 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은 현행 지침에서의 위상을 축소 조정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기준에 포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의 경우,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설정, 세부사업의 입지선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보조자료로 활용을 제안하였다.
- (농촌특화지구 관련 기본·시행계획의 내용 범위 명확화) 기본계획에서는 농촌특화지구 후보지역을 도출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구의 선정 및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시군의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의 취지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농촌특화지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배균기(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여건분석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을 확대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신선농산물 수출 관련 연구·정책·통계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도내 주요 7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단가·내수가격 비교, BCG 매트릭스 등을 분석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프리미엄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고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고품질·고가격 신선농산물 생산·수출 전문단지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지원내용은 기반조성·선도유지·상품화·역량강화·경로관리 지원,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연계이다.
- 수출용 국산 신품종·묘목 전환 지원은 비용절감, 수출경쟁력 강화 품종 개발 및 보급이다. 수출품목 다양성 확보, 수출국 소비자 선호와 기후 특성에 맞춘 품종(묘목) 개발 및 국산 전환을 추진한다. 청년농 수출 영농승계 지원 프로그램은 고품화 대응 수출단지 유지 및 신규 농가 확보가 가능하다. 수출농가 인력지원 확대는 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전문인력 고용안정 보장 등 지원이다. 지역인력(E-9) 체류기간 상한 확대 및 숙련인력 전환요건 완화, 계절근로제(E-8, C-4),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 프리미엄 상품화·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수출전략 품목 육성 패키지 지원은 고품질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다. 고구마(공덕농협, 익산원협), 딸기(부안, 완주, 무주), 포도(김제, 남원), 당조고추 등을 제안한다. PLS 교육 프로그램, 선별장 및 전처리 시설·장비, 프리미엄 포장재 개발 등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다. 신규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지원 : 시장개척 성공확률 제고를 위한 테스트 기회 제공한다. 초기 테스트 활동(시장

트렌드·선호도조사), 샘플물량 선도시험, 파일럿 프로모션 등 소요비용 일부 지원한다.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 지원 : 채소절단 및 소포장, 과일세척 및 냉동포장, 작 급류 등 단순 가공(선별·세척·절단·포장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가공설비 구매 및 업그레이드, 현지기준 위생관리 및 규격화 인증, 품질관리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이다. 신선농산물 품질인증 개발 및 지원 : 수출 품질, 생산과정, 안전성 보증 등 인증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조직 인증 획득 및 갱신 지원, 전북자치도 자체 신선농산물 품질인증제 개발 및 도입이다.

-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하다. 새만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단지 조성은 확정된 국가정책 사업 연계 모델, 계획단계에서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단위 APC 네트워크(권역 허브) 구축은 도내 30여개 APC 중 권역 스마트 APC 네트워크를 형성, 농산물 관리, 물류 연계·지원, 수출 및 부가가치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해외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확충으로 선도 유지, 물류비 절감, 현지시장 접근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인프라 네트워크가 구축(기존 사무소·시설 활용, 물류센터 신설)되어야 한다.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맞춤형 수출개척 비즈니스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 광역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수출지원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광역단위 수출지원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수출지원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은 수출농가, 수출업체, 물류업체, 연구기관, 정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분과운영(품질관리·시장개척·물류관리 등), 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수출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야 한다. 광역단위 수출지원 전담조직 운영은 수출 관련 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전담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 수출관리 및 품질관리, 시장개척 및 마케팅, 교육·컨설팅, 수출물류 최적화, 데이터분석 및 정책 등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임승현(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는 대형화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기기의 등장으로 생활패턴 변화와 대형 문화스�포츠 행사로 신종재난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매년 반복되어 정부정책은 강화되고 있으나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안전 관련 대도민서비스는 답보상태이며 이에 안전 서비스 향상 및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해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마련 필요하다.
- 이에,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뿐만 아닌 지역의 안전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의 조사와 축적, 그리고 다양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센터 설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재난 예방 및 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의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시의적절하게 재난안전정보를 생산하여 전북자치도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더불어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재해재난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 및 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과 운영,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광역시도단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운영은 국가정책 부응과 도정평가 대응, 전북자치도 재해발생 증가 등에 따른 필요성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판단된다. 센터 설립은 기후위기와 신종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

절한 정책이지만 설립에 따른 운영예산, 성공적 운영 방안, 기능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 발전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본문에 수록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책연구 및 사업지원에 특화된 지역내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문에 제시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설립 및 운영예산은 재난안전 관련 전문성이 우수한 인력을 최소한의 규모로 확보하고 센터의 정책연구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보조 방식은 출연금이나 민간보조가 아닌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독립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운영 지속성 및 안정성,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 사업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 5가지 핵심가치를 센터 운영에 반영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센터의 설립 근거와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관련 조례에 담아 제도화함으로써 센터의 위상을 확보하고 기능과 업무를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센터가 행정업무 지원만이 아닌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재난안전 전담연구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및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김재구(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목적에 부합하고 새만금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기업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사업추진 및 정책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 새만금지역 산업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관광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세부사업의 변경 및 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23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새만금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연구방법은 기존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계획 등 법정 계획 검토, 국토종합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등의 문헌조사와 새만금사업법, 국토기본계획, 전북자치도법, 국가재정법 등 새만금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지침 검토 관련 법률검토를 수행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과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상위 계획 검토를 통하여 기본계획 재수립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서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 및 수정계획 등의 검토와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 그리고 항만, 공항, 도로 등 교통인프라 계획 등을 검토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권역별 개발계획 및 용지별 개발면적 등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기업유치 현황 및 지역거점산업과 함께 현재 논의중인 신규 사업계획도 검토하였다.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최초 새만금 기본계획(2011) 수립 이후 새만금사업의 비전 및 목표 등

사업추진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여 재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새만금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방향을 제안하였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이 추구해야 하는 중장기 개발 및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단계별 개발계획(면적), 기반시설 개발계획 등 시기별 개발계획 검토를 통한 장기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새만금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 방향 및 구상을 제시하였다.

- (새만금 기본계획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대응방안 모색) 새만금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 가능한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시행주체를 선정하여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 미반영 사업 포함 및 연계 사업 검토,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연계하였다.
- 연구결과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 여건 변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새만금사업의 방향성을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제시하여 새만금사업 활성화 및 지역 내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의 방향 및 연계 발전 등의 대안 제시를 통해 새만금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를 인접 시군을 포함한 전북자치도로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있어 기본계획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맞추어 특별자치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 등 장기간 진행되는 새만금사업의 계획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제시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 방안



이중섭(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23.2%이고 1인 가구도 35.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도 약 5%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의 맞벌이 가구는 2021년 말 기준 24.6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54.3%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와 함께 주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아동돌봄이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도 일시적인 돌봄의 부재가 발생하는 등 돌봄욕구의 다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타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주도의 돌봄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를 진단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전북의 돌봄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 돌봄정책 현황과 운영사례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정책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세가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정책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북형 돌봄체계는 국가돌봄과 기존 지역돌봄과 연계하여 3단계로 다층의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의 돌봄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으로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으로 국가돌봄과 연계한 돌봄의 확장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돌봄수요 즉, 새로운 돌봄수요 대응 돌봄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돌봄사각지대

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돌봄안전망 구축 추진이다. 즉, 돌봄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돌봄수요(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소외 중장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정책이 가능하도록 민관의 다양한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고립의 심화에 따른 고립은둔 청년 및 소외 중장년 가구 등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북형 돌봄체계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 즉, 돌봄필요도에 따른 돌봄수요층 대상 통합 돌봄과 중위소득 85% 이하의 모든 도민에게는 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돌봄 추진이다. 돌봄필요도 조사에 기반하여 돌봄필요정도와 돌봄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되 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기준 487만원) 돌봄수요가 있는 중산층 등의 도민에게는 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서 전북자치도는 국가의 돌봄체계와 연동하여 모든 도민에게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전북형 돌봄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특별돌봄서비스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단계적 전면시행의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북형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과 전담 조직 등 세부적인 실천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 전담조직은 반드시 노인만인 아닌 장애인과 아동, 청년, 일반 지역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설계와 운영과정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천지은(연구위원) 민기(석좌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며, 현행 전북특별법은 지방교부세 등 핵심 재정특례를 포함하지 않아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단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대할 구체적 재정특례 개선안을 도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 특별자치도(제주, 세종, 강원)의 재정특례 사례를 문헌 및 법령을 통해 분석하고, 전북 도본청 및 시군 재정자료를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재정특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특례(안)를 설계하고, 입법 및 제도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는 다음 근거를 바탕으로 전북 도본청과 14개 시·군의 재정통합을 통한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첫째,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에서 부여된 특례를 활용할 경우 현재보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가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기초수입액이나 보정수입액이 증가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전국 비중이 2009년 11.2%, 2008년 11.8%에서 2024년 9.6%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몫을 법정률로 정할 경우 보통교부세 수입의 하락을 방지하고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기초수입액, 보정수입액의 산정에 고려되

는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에 대한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법적 또는 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기초수입액, 보정수입액의 산정에 고려되는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감면과 세율조정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과세 부담의 완화나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정입법형성권을 전북특별자치도가 확보할 수 있다.

- 종합하여, 전북특별법 재정특례 제도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도와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0분의 ○○○○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 ② 도에서는 제1항의 보통교부세를 도와 시·군의 재정수입·재정수입·인구감소·지역간 불균형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배분한다.
- ③ 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불구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제2항의 보통교부세 산정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 ④ 보통교부세 산정·배분 방법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⑤ 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등 재정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제1항의 보통교부세 산정률 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입법전략 관점에서,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개선안을 입법화한 이후 도세와 시·군세의 통합, 세액감면권 또는 세율조정권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율조정권 등 여타의 특례를 논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과 같다.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정책 구상



장세길(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위험에서 비롯된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북도의 문화적 치유 정책 방향과 과제를 구상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북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로움의 실태를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417명에 대하여 지역·성·연령별 국가 인구통계(2024.10)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사회적 연결 척도 분석 결과, 문체부가 개발한 사회적 연결 척도 유효화에 따른 전북도민의 사회적 연결 지수는 39.6점으로, 지역문화진흥원 조사(2024)에 따른 전국평균 31.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전북도민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연결이 약하고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민의 5개 그룹별 응답률은 1그룹(심각 집단) 17.3%, 2그룹(경계 집단) 18.5%, 3그룹(주의 집단) 26.1%, 4그룹(관심 집단) 29.2%, 5그룹(자립 집단) 8.9%이었다. 전국평균 값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도민은 사회적 관계(특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회적 자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자기 가치감의 상대적 약화로 이어지면서 외로움 지수를 더 높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 비전은 "문화로 연결, 외롭지 않은 전북"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는 사회적 연결지수 개선으로 설정하고 전국 평균 수준인 30점 이하를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 문체부의 정책은 치료를 제외한 문화적 연결에 집중한다. 이에 반해 전북의 정책 방향은 치료를 전제로 하는 보건정책과 연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체부

정책 방향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략은 정책 기반 마련이다. 두 번째 전략은 예방과 치유이다. 외로움에 따른 정신·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외로움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여 치유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은 연결망 강화이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과 더불어, 외로움의 해소방법이 연결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제고 되도록 사회적 인식·활동을 개선·확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 발굴된 정책과제 중에서 광역 단위의 외로움 치유 플랫폼인 '문화로안녕센터(가칭) 조성 사업',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지원체계와 문체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체계를 융합한 '외로움 치유 보건 시범사업' 등의 국가 사업화를 제안하였다. 농업치유,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에 따른 치유 정책이 추진되나, 문화 분야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일반적인 문화 활동처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바, 문화 치유, 특히 외로움과 관련한 문화적 치유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비전		문화로 연결, 외롭지 않은 전북				
목표		사회적 연결지수 전국평균 이하 달성				
		(전국 평균) 2024년 지역문화진흥원 31.0점 / (전북 평균) 2024년 전북연구원 39.6점				
전략	정책기반 마련		예방과 치유		연결망 강화	
	① 외로움 조례 제정 ② 전담부서 및 중앙계획 ③ 문화치유활동가 양성 ④ 전북형 지수 개발	① 전북도민 실태조사 ② 외로움 치유물 자원 문화로안녕센터 운영 ③ 문화·복지부 연계 외로움치유 보건사업 ④ 문화치유콘텐츠 개발	① 타분야협력체계 구축 ② 외로움없는주간개최 ③ 심리방역안전기지운영 ④ 확대의문화 확산			
추진 단계	2025년		2026년		2027년	
	① 단계					
	② 단계					
	③ 단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오병록(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정착으로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주와 완주의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으며,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외에 기업이 입주하여 고용 효과를 창출하였다.
-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혁신도시의 성과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하여 혁신도시가 위치하지 않은 12개 시·군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공유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혁신도시기금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8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으로써 존속기한의 도래에 따라 기금의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혁신도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 인식, 기금의 분배 기준 및 방식, 기금 사업 수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운용 방안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혁신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기금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군 수요조사는 혁신도시 조성 성과 인식, 혁신도시기금 활용 방안, 혁신도시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도청의 행정공문을 통해 각 시군의 기획부서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기금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있다. 이들 기금은 대부분 용도에 따라 계정을 구분하여 활용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전환사업 보전계정으로 나뉘 각각 사업비 보조, 융자 지원, 군특사업 비용 보전을 담당한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기초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금인 지역자율계정과 지역특화 및 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지원계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 수준의 기금으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 있으며, 이는 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육성계정과 혁신도시 외부 지역을 지원하는 성과확산계정으로 운영된다.

- 기금의 지원 대상은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지역발전 전반에 걸쳐 있으며, 주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 및 인프라 조성에도 활용된다. 기금 배분기준은 기금별로 상이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력지수에 기반한 역지수를 활용하여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에 각각 100%, 200%, 30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기초계정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배분계수를 기반으로 한다.
- 혁신도시기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한 시군 수요조사에서는 혁신도시와 연계된 공공기관 협력 사업과 정주 및 교통 기반 조성 등이 중요 사업으로 제시된다. 또한, 균등분배보다 지방소멸지수와 같은 데이터를 반영한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동시에 기금 적립과 사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기금 규모의 확대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기금은 혁신도시와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도시연계계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분배기준은 지방소멸위험지수 외에 재정력역지수, 지방소비세 분배기준, 그룹별 인구규모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도시기금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이지훈(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자치도는 수소산업을 지역 미래 신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중심의 그린수소 클러스터 등 수소산업 집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의지가 높아 향후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입지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수소특화단지 신청 요건 확인 및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제, 수소특화단지에 적합한 최우선 입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육성 계획서 수립 시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소특화단지 개념과 동향 분석은 문헌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입지여건 분석은 통계조사를 수행하였고, 타 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북자치도 수소특화 경쟁력 분석 역시 통계조사를 활용하였고,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방향 제시 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개요) 명칭은 특화단지를 관할하는 기초지자체, 특화단지의 핵심부문 등을 포괄하여 '완주 + 수소 + 상용모빌리티 + 특화단지'로 명칭을 병기하였다. 입지는 완주군 봉동읍 기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특화산업은 입지 내 기업, 산업적 특성을 반영 수소활용-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특화단지 특화산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소특화단지 연관산업 발전방향) 첫째, 수소특화단지의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특화단지와 지리적 근접성을 갖춘 연계 산업과 기술, 다수의 정책 지정 클러스터와 연계를 추진한다.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전북연구개발특구,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하여 수소상용모빌리티의 생산 밸류체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수소상용모빌리티 내 수소버스, 수소트럭 뿐만 아니라 수소건설기계, 수소특장차, 수소농기계 등 상용모빌리티 분야로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 (수소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육성계획 방향) 수소특화단지 입지, 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산단의 수소특화단지로의 전환, 단지 내 수요 연계 기술확보, 전문기업 육성 지원 등 3대 중점과제 10개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비전	
글로벌 수소상용모빌리티산업의 핵심거점	
목표	- 수소전문기업 30개 이상 - 수소관련기업 100개, 수소관련기업 매출 10조원 이상 - 수소유통 및 저장·핵심 소재-원재료 연계 수소상용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중점 과제	주요 내용
1. 수소특화단지 전환	준비된 완주산업단지 활용, 신속한 수소특화단지로 전환 - 노후 산업단지 공간혁신으로 수소에너지 첨단산업단지 전환 - 내연 모빌리티 기술혁신으로 수소상용모빌리티 혁신성장산업 전환 - 수소 전문기업 재조력으로 전북첨단 미래기술공간 전환 - 수소 인프라 통합관리로 수소안전 특화단지 전환
2. 수요연계 기술확보	수소특화단지 내 수소전문기업 수요연계 친숙한 기술혁신생태계 확보 - 기술경쟁력 강화 전북수소산업연합 공동 연구개발 시스템 확보 - 특화단지 인종-평가센터 협력으로 오픈형 기술성장 플랫폼 확보 - 전북연구개발특구(테크노부지 특구)가 지정 연계 기술사업화 기반 확보
3. 전문기업 육성지원	연계일원으로 수소특화단지 내 전문·관련기업 스캐일업 지원 - 특화단지 내 수소상용모빌리티 시범사업·시범보급 지원 - 전북소재 대학 연계 산학융합형 특화분야 인력공급 지원 - 전문기업 글로벌-광역일원으로 네트워크 역량강화 지원

전북자치도 정부 R&D 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안수용(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가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해 기획 및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산업육성 측면의 정부 R&D 참여 제고를 위한 R&D 추진체계와 지속 가능한 전북자치도 R&D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국가전략기술, 초격차기술 등 연구개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신기술 등장 속도가 빠르다는 R&D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라는 단기적 관점에서 정부 R&D 정책 변화 검토, 전북자치도 R&D 현황 분석, R&D 대응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정부 R&D 과제 및 전북자치도 R&D 추진 현황 및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북자치도 R&D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중앙 R&D 전문가 및 지역 R&D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개발 활동은 기술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크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실패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 R&D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R&D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획·관리체계 고도화,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지역 R&D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 이 연구를 통해 전북자치도 정부 R&D 수행 여건과

대응전략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비전은 “기획·관리체계 고도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R&D 추진체계 구축”으로 수립하였으며, 비전 달성을 위하여 기획·관리체계 고도화,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지역 R&D 역량 강화 측면을 고려한 추진목표를 도출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로 ① R&D 기획 및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상시 사업/과제 기획체계 구축’과 ‘전주기적 사업 관리 프로세스 마련’, ② 중앙-지역간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도내·외 전문가 집단 DB 구축’, ③ 지역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연구수행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과학기술전담부서 및 사업부서 전문성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비전

기획·관리체계 고도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R&D 추진체계 구축

추진
목표

- ▶ 상시사업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R&D 기획 및 관리체계 고도화
- ▶ 과제 기획수준 제고를 위한 중앙-지역간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 ▶ 수행주체별 역할을 고려한 지역 R&D 역량 강화

추진
과제

1. (기획·관리) R&D 기획 및 관리체계 고도화
 - ① 전략적 상시 사업/과제 기획체계 구축
 - ② 전주기적 사업 관리 프로세스 마련
2. (네트워크) 중앙-지역간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 ③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④ 도내·외 전문가 집단 DB 구축
3. (역량강화) 지역 R&D 역량 강화
 - ⑤ 지역 연구수행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⑥ 과학기술전담부서 및 사업부서 전문성 강화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천정윤(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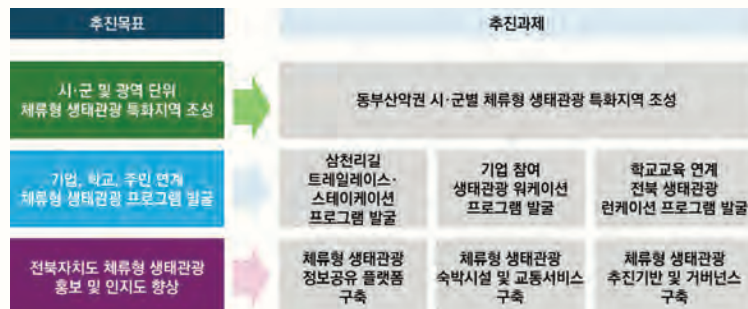
1. 연구목적 및 방법

- 최근 국내외에서 공원, 정원 등 자연공간을 활용하여 체류인구를 유입하고, 지방소멸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부산악권 생태관광 자원과 삼천리길, 주변의 생태·환경 및 역사·문화 등 연계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 전북자치도 생태경제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동부산악권에 체류형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첫째, 이론적 검토 및 사례분석, 둘째,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여건 분석, 셋째,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로 나뉘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론검토/사례분석) 체류인구, 체류형 관광 등 개념 검토와 주요 추진사례를 분석하였다. (여건분석) 동부산악권 생태관광 자원(생태·환경자산, 역사·문화자산, 연계 자산(먹거리, 관광지, 거점 자산 등) 등 체류형 생태관광을 위한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인터뷰) 생태관광 방문자와 해설가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과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연계자원을 활용한 개선방향 도출 등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동부산악권 6개 시·군별 체류형 생태관광 특화지역과 프로그램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 중간지원조직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체류형 생태관광 이론검토, 사례분석) 체류형 관광은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는 관광 형태로 위케이션, 런케이션, 스테이케이션, 야간관광을 통해 지역의 생태, 환경, 역사,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숲 속 결혼식, 트레일레이스, 기업 유연근무제와 연동한 위케이션 및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연계한 런케이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여건분석) 동부산악권은 생태관광지, 전북 천리길, 삼천리길, 지질공원 등 자원 외에도 연계자원으로 보호지역, 수목원·정원, 임도, 생생마을, 역사·문화자산, 야영장, 관광숙박업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와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자원은 많으나 상호 개별적으로 동떨어져 있어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코스를 중심으로 권역화가 필요하고, 체류형 생태관광 확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다.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김동영(책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군산시의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관외 거주 근로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제시와 이를 통한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여 산업단지 종사자 중 30%에 이르는 관외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도출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 등 기본 정보, 출퇴근 방법, 관외 근무 장점과 단점, 관외 근무 사유와 주소 이전 요인, 정책 제언 등 관외근로자의 군산시 정주화를 위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군산시 산업단지 관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외근로자의 거주 현황, 산업단지 거주 환경, 전입 의사 및 정책 요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류시간 연장이다.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지역의 생활 환경, 문화, 인프라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체류인구가 군산시에 대한 호감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정착 의사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도시매력도 증대이다. 장기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거지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정주는 선택이 아닌 매력의 결과라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지역정착 지속성 확보이다. 군산시 산업단지 체류인구의 정주화는 단순한 일회적 주소이전을 넘어 장기적으로 군산시에 정착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군산시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소지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좋은 일자리, 주거안정성, 생활인프라, 주소이전 편의성 4개의 요인과 외국인 근로자라는 4+1 정책요인(대상)을 도출하였다. 군산산업단지 체류인구 정주

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좋은 일자리) 기업 유치 투자지원 내용에 주소 이전 비용 차등지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주소 이전) 인센티브 지원이다. (주거안정성) 산업단지 장기근속자 주택(아파트) 우선분양 및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 이자 지원이다. (생활 인프라) 명문학교 재도약 및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원서비스 확충이다. (주소이전 편의성) 산업단지 근로자 주소이전 현장서비스 및 전입지원금 지급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공공기숙사 건립 및 내·외국인 근로자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다.

- 이 연구에서 제안된 좋은일자리, 주거안정성, 생활인프라, 주소이전 편의성, 외국인근로자 5개 분야별 정책 외에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 정책과제는 도정정책 및 군산시 민선8기 정책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각 사업은 생애주기별 또는 대상별 전체 사업의 한 분야로 이해될 때 전체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 차원에서 도정정책과 군산시 민선8기 주요시책을 연결하여 수요자에게 패키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등록제를 통해 지속적인 체류인구의 관리와 정착지원 등의 정책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생활인구 활성화정책에 맞춰 생활인구 등록제와 같은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등록제를 통해 체류인구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의 효용성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대응담당관과 정책 실행부서와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모든 사업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각 사업의 시행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기에, 각 사업의 추진부서의 시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인구대응담당관의 사업총괄기능 부여가 필요하다.

현안·TFT·협약 과제

현안 과제

전북특별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협약 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협약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 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특별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희진(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특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외 유사 특례법의 실행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 지역 특구와 산업단지에서의 외국인 체류자격 및 기간 관련 특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활용하여 농생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지정 지역에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상한 조정과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우수 인재 유입 방안, 지역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협력 강화, 지역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 특례를 통해 외국인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및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이중섭(선임연구위원)

-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인권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인권정책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정도과 유형에 따라 정책욕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장애인인권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우리 지역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상황을 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인권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제안하였다.
- 이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과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인권정책 개발을 위해 첫째, 기존 장애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정책의 방향과 세부사업들을 비교분석하여 전북 장애인 인권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셋째,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 장애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기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인권친화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4개 핵심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북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김동영(책임연구위원)

- 인구정책에서 대부분 순이동자 수의 결과 값에 집중하면서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미래의 인구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매년 유입되는 7만 여명의 청년이 있으며 이들을 통한 인구활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가 새로운 인구정책의 핵심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된 1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22명에 대해 청년활동 실태와 지방소멸 및 정책·사업의 개선 및 정책수요에 관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 심층면접 결과 청년의 지역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 일자리, 다양성에 대한 포용, 청년의 시도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주거는 중장기적인 체류를 통한 지역탐색과 실험 등을 위한 공간과 실제적으로 정착을 위한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의 기업과 청년의 매칭 지원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입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유입된 청년에 대한 수용성과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의 지역유입이 의미 있는 이유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지역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이지훈(책임연구위원)

-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일반 제조업 보다 전기 소모가 많은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약 10조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발생하면서 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 보장과 추가적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본격 가동에 앞서 특화단지 내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폐소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성을 기반으로 전력인프라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인프라 구축의 사업 계획과 관련 수요 분석, 둘째, 본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주체를 제안하였다. 셋째, 본 사업의 사업기간과 예산, 넷째, 사업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위한 보조의 근거, 보조금 관리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는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 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된 기획재정부 보조금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되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

전희진(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제도시 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북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외 국제교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세미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5대 핵심산업(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과 연계된 국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별 교류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바헤닝언, 문화관광 분야에서 일본 규슈와의 교류를 포함한 다각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바이오산업, 자동차 산업, 전통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주 빅토리아주, 미국 미시간주, 일본 이시카와현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술 교류, 공동 연구, 인재 양성, 교역 확대, 지역 간 문화·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교류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역 핵심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오병록(책임연구위원)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녹지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건축물 대지의 조경은 경관, 생태계 보전,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대기정화, 산소 생산 등의 막대한 편익을 발생시키는 도시내 주요한 녹색인프라이다. 그러나 대지의 조경 관리가 미흡하여 녹색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의 대책이자 도시경관과 도시서비스 자원으로서 건축물 대지의 조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지의 조경이 녹색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대지의 조경이 조성된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에 따라 상업용과 주거용, 그리고 조경의 배치 형태에 따라 직선형과 블록형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또, 대지의 조경에 대한 식재종류, 일조환경, 조경 연결성, 접근성 등 조성 현황과 대지의 조경 유지 상태와 조경 생육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대지의 조경은 비교적 설계된 바와 같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고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면적이 축소되었거나 제거되어 공터로 남아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대지의 조경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관리체계 구축,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지의 조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내 녹색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방향

하의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4.12.27)에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주요 연구내용은 무인이동체 산업의 개념과 현황 및 정책 사례 분석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분야를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적합한 무인이동체 산업 목표와 구체적인 육성 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 운영

김시백(책임연구위원)

- 세계 경제는 대기업보다 벤처·창업기업이, 단순 제조업보다는 디지털과 가상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 전환 및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역 주력산업과 결합한 융합산업으로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창업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및 적정 입지 제안,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의 기능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정보통신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분석하여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북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전주, 군산, 익산의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입지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입지를 제시하였으며, 과기부 및 중기부의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북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의 특화 운영 방안으로 전북자치도의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전북특별법에서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만 제시되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국가의 행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적용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분야 연구조사

오병록(책임연구위원)

-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로 기반시설 건설 등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높은 대형 외지 건설기업이 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지역기업의 참여가 어려워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우대하고 있지만 건설엔지니어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새만금사업에서 지역기업 우대 범위에 건설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 논리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전북지역 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업체 수, 전문분야, 기술자 인력, 건설 실적 등 현황과 그간의 새만금사업에서 지역업체 우대 적용으로 참여율 및 수주금액의 확대 등 건설엔지니어링 지역업체 우대 시 전북 내 건설산업에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만금사업에 지역기업 우대에 따라 전북 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만금사업법의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에서 건설엔지니어링의 우대를 적용하는 것은 전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실적 확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북 전체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써 비수도권 타지역에서도 당해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우대하는 선례를 제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북 정책네트워크 인적자원 구축 연구

박자경(연구위원)

- 지방시대를 목표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자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등에 대응해 전북의 백년대계 구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북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다. 전북 도정 현안과 미래 비전 의제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예산확보 등에 활용할 전북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내용은 국가 및 시·도별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 전북 정책네트워크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전북 정책네트워크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전북 연고 도외 활동 인적자원과 명예 도민증 수여자 등 총 7,926명의 정책네트워크 인적자원 DB를 구축하였다. DB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속, 연고, 관리정보 등 구축 틀을 견고히 하였다. 향후 도정의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현안사업 해결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사업 사전검토 기준 마련 및 3차 투자심사 대응

김시백(책임연구위원)

- 202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는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부터 상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존에 수행해오지 않았던 업무로서 주로 정량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검토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주요 연구 내용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앙투자심사 및 타 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사전 검토 항목들을 조사하여 전북자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검토 항목들을 정리하고 사전검토서 양식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사전검토항목을 중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 54개의 전북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다. 사전검토 항목을 총 6가지로 ① 사업 규모의 적정성, ② 비용 산전의 적정성, ③ 관리운영방안의 적정성, ④ 경제성 분석, ⑤ 경제적 파급효과, ⑥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항목으로 의뢰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경제효과가 부풀려진 사업들을 추려낼 수 있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지역기반 이민정책 대비 전북형 광역비자제도 연구

전희진(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비자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북의 특성에 맞는 광역형 비자제도를 개발하여 외국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의 산업 및 인구 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비자 설계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세미나를 통해 법무부의 정책 변화에 부응하는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존 비자제도에 대한 전북형 보완책을 도출하였다.
- 연구 결과,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노동자 비자, 창업준비 비자 등 전북의 핵심 산업에 적합한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실행 방안으로는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산업 맞춤형 비자 요건 설정이 포함되었다. 특히, 법무부의 광역비자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형 광역비자안을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전북형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전북의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과 미래 전망

장세길(선임연구위원)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024.12.27)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2025.1.18)을 맞아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래상을 도출하고, 도민·공무원의 인식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방향 및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도민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연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 동안 도민의 인지도와 공무원의 기대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를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1년 사이에 17.7% 증가(2023년 7.6%→2024년 25.3%)한 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의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공무원조사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특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 5~7년 응답이 가장 높고(58.5%) 10년 이후 응답도 15%라는 결과는 조급한 효과 기대보다 중장기적 준비가 중요함을 의미하였다. 전북특별법의 5대 전략 분야의 주요 특례 실행 이후 기반 시설 구축 등 사업 기간에 누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6,29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1,68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며, 주요 특례 실행 이후 기업 활동 등으로 연간 발생하는 효과는 5조 8,658억 원의 GRDP 증가 효과와 74,148명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김시백(책임연구위원)

- 경찰청은 2024년 7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모집 공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원시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1차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어 충남 아산시와 예산시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1차 선정된 남원 입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여 남원시 입지에 대한 비용과 편익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로 최종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설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경찰청에서 수행할 예정인 타당성검토 용역에 앞서 전북자치도에게 불리한 항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여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연구 내용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토지매입비, 공사비와 운영비의 규모를 추정하여 경쟁 지역 대비하여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편익 항목을 분석하는 단계로 이용가치항목과 비이용가치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익의 규모를 산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비용 절감, 편익 증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시로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김상엽(선임연구위원) 천지은(연구위원)

- 이 연구는 전북 정책의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 의견수렴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민과의 실질적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의견 교류를 통해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의 운영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며, 18세 이상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모니터링, 도민 의견수렴, 연구원 홍보, 도민 의식조사 등이 포함된다. 설문조사는 모바일 및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며, 답례품 제공과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연구 참여를 독려했다.

탄소제로 건축 축조 실연 TFT

장남정(선임연구위원)

- 최근 탄소중립 흡수원 확대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목조건축 사업이 활발하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하여 목재산업 진흥과 산림자원 선순환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북연구원 본관동 신축을 위한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 탄소중립을 선도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 TFT활동을 통해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예산지원을 위한 타당성 근거, 논리개발, 사업개요 구상 등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2024년 산림청 예산(국비 50%, 도비 50%)을 확보하였다. 목조건축 전문가 위탁연구를 통해 전북연구원 본관동 목조건축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연구원 규모를 고려한 배치도 구상, 목조건축 타당성, 소요예산, 로드맵 등을 마련하였다. 전북연구원 본관동은 목조건축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목재문화 진흥 및 동부권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연구원 ESG 경영 전략 수립 TFT

장성화(선임연구위원)

-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하에서, ESG는 기업·기관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주목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ESG 개념을 경영 목표의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전북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 전략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과 부문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북연구원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TFT

이중섭(선임연구위원)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권고에 기반하여 전북연구원의 조직특성에 맞는 인권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권경영을 유인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전북연구원의 인권경영 추진계획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서 인권경영제도와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장기 실천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전북연구원의 인권경영추진계획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람중심 인권경영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권경영체계 강화, 인권경영 내실화, 인권경영확산 및 환류 등을 핵심목표로 제시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인권경영현장 개정 및 선포, 인권경영규정 제개정 및 제도강화, 구제시스템 효용성 평가, 인권경영시스템 확립 및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전북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7)

이성재(선임연구위원)

- 전북연구원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자체 중장기 발전방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전북도정 운영방향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북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 정립과 비전체계 및 경영전략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대내외 여건 및 연구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타 시도연구원 사례와 전북연구원 환경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그리다’를 미션으로 ‘건강한 Jthink 더 특별한 전북’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5대 핵심목표로 조직의 역동성 제고, 미래 연구기능 강화, 도(시군) 정책 선도, 연구사업 품질 제고, 연구환경 혁신을 도출하였다.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3

장세길(선임연구위원)

- 전북연구원에서 한 해 동안 연구된 결과물을 정립하고 대중이 손쉽게 찾아 활용하도록 기록·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원이 1년 동안 진행한 연구 내용과 주요 성과를 정리하여 총서로 발간하였다.
-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3」에는 연구원의 연혁과 비전, 한눈에 보는 2023년, 부서별 주요 연구 결과, 2023년 연구 과제 소개,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 주요 연구 활동 및 전북도·시군 지원 현황, 출판 현황, 언론에 비친 전북연구원, 연구원의 혁신 방안 등이 담겼다.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대응지원 TFT

황영모(선임연구위원)

- 전북자치도는 농어촌 활력 정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도 출연 기관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관 지정 위탁 방식의 제약을 도 출연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해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추기 위함이다.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재단법인 설립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자료 작성 및 심사 대응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원은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23.4~7)를 이전에 수행한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과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심의위원회 후속 대응을 통해 재단법인 설립 전 과정의 내용을 지원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포럼 기획 TFT

배균기(책임연구위원) 천지은(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국제포럼 추진을 기획하였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적인 기획과 운영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핵심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원하였다.
- 국제포럼의 명칭은 ‘전북포럼(JSF, Jeonbuk State Forum)’으로 선정하였다. 제1회 주제는 전북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해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로 기획하였다.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한 ‘농식품 Value Chain 혁신’, ‘농생명 혁신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운영하였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지원 연구

김동영(책임연구위원)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은 2023년 11월 28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추진 위원회를 문화재청이 제안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 2024년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통합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전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경남연구원은 연구원을 각 1명씩 파견하여 가야고분군의 통합사업 추진 및 지원, 가야고분군의 가치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체계 및 조직 구성 지원을 추진하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대응

전희진(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 문헌조사와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전북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서를 작성 지원하였다.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교육 지원체계를 설계하였다. 특히 지정의 목적성, 성과관리 계획, 재정 및 협력 방안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김동영(책임연구위원)

- 전북자치도의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의 비전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창의적 인구정책 혁신플랫폼”으로 설정하였다.
-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의 중장기 운영은 조직전문성강화, 연구역량확대, 공유와 확산이라는 3대 전략에 제도적 토대마련, 전문인력채용, 정책개발 및 성과확산 등 9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단계별로는 설립기(‘24~’26)에는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의 기반구축, 성장기(‘27~’29)에는 인구정책 고도화 추구, 성숙기(‘30~’)에는 국내외 정책 플랫폼 거점형성으로 설정하였다.

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대응

하의현(연구위원)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을 공모하였으며,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여건을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 공모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자료 및 대응논리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단지 유치 전략과 특화단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각 분야별 자료 마련 및 대응논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TF

장성화(선임연구위원)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선정(산림청)에 따라 ‘24년~27년(4년)동안 총 180억원(국비 65억원, 도비 1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북연구원 본관동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본관동 건립을 목조건축으로 실연함으로써, 목조건축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전북연구원 본관동(가칭 ‘전북연구원 35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의 건축 기획·설계 과정 및 외부공간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제반 절차 이행을 위한 총괄적인 대응과 함께, 건축기획 보고서, 설계공모 지침서, 외부공간 조경 등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필요한 계획(안) 및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대응하였다.

2024년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TFT

김시백(책임연구위원)

- 지역 경제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작성, 관리,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러 유형의 경제 및 산업 통계 지표의 변화가 전북자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전북연구원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쉽게 파악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2024년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는 총 4회의 분기별 전북경제동향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역경기, 생산 및 수요, 수출입, 고용, 물가, 산업단지 등 주요 통계 자료 DB를 구축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활물가 급등, 상호금융조합의 부실 문제, 주택가격 하락 등 시기별로 경제·산업 측면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원인 진단 및 전망, 대응방안을 이슈페이퍼 양식으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업종, 도시화, 주택가격 등 장기간의 통계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스를 작성 및 발간하였다.

2024 전북연구원 연구성과 확산 및 환류사업

천지은(연구위원)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연구원의 역할 증대에 따라, 2023년 경영 및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연구성과공유회를 기획·운영하고,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성과 공유회의 기획과 함께 성과 홍보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 제작, 성과물 전시 포스터 제작 등을 수행하여 성과 확산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성과공유회 방향성 검토, 프로그램 기획, 유관기관 사례분석, 23년 연구성과 홍보 영상 및 24년 기관소개 영상 제작, 성과물 전시 포스터 제작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북연구원의 명성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지역사회 가치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체계 진단 및 개선방향-금강수계 시도연구원 공동연구

김보국(수석연구위원)

-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4대강 수계로 확대되어 운영 중으로 최근 물환경 및 기금 운용 여건 등이 변화되어 금강수계관리기금 전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방향 설정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유자금 활용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 연구에서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종합적인 운영현황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물환경 및 기금 운영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최적의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 운영 TF

김보국(수석연구위원)

- 전북의 백년을 디자인하고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정책의제 발굴을 목적으로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초청 포럼을 계획하고 바이오, 농생명, 문화·관광, 방위산업 등의 최신이슈에 대한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 이 연구를 통해 전북 백년포럼 21회, 밀착특방(조인트세미나) 7회를 개최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연구과제 및 전북자치도 정책 발굴에 기여하였다.

2024 권역별 정책지원단 운영

김보국(수석연구위원)

-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시·군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어 상호협력 위해 정책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전북연구원은 14개 시군-전북연구원 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을 위해 권역별(동부권, 중부도시권, 서부권) 정책지원단을 운영하였다. 권역별 정책세미나, 1시군 정책간담회 등 행사를 통해 전문가적 정책지원 및 연계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정책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경쟁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대응

이중섭(선임연구위원)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 및 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행정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 합동평가의 지표 점검과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환류, 지표단위 부서별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행정 실적을 발굴하고 우수행정 실천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동평가의 17개 지표별로 담당 연구원과 실과 담당부서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실적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와 컨설팅 진행하였고, 우수 행정실천 사례를 전국 모델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총괄분과

김보국(수석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과 함께 정부정책과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한 국책사업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도·시군, 전북연구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국책사업 발굴대상은 전북발전과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정부정책 및 제22개 총선공약과 연계되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이다.
- 이 연구를 통해 기업유치, 미래첨단, 농생명, 문화체육, 건설교통, 새만금해양수산, 도민안전, 환경산림, 복지, 교육·외국인 등 10개분과를 운영하였고 총 30건의 국책사업을 발굴하였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기업유치분과

김수은(책임연구위원)

- 국책사업발굴 추진단 기업유치분과에서는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분과장으로 10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업분야(중소기업, 창업, 투자유치, 금융산업), 노동일자리분야(지역산업 고용, 노사상생 등)분야의 사업을 중점목표로 하였다.
- 기업유치분과는 국립 경제금융교육연수원 건립사업, 연금대체투자연구센터 건립사업 2건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국립 경제금융교육연수원은 교육연구동, 연수동, 숙박동건립 등의 내용으로 6개년(2026~2031년) 650억원의 사업비를 제안했고, 연금대체투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대체투자 공동캠퍼스, 대체투자시장분석연구센터 등의 내용으로 3개년(2026~2028) 250억원의 사업비를 제안했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미래첨단산업분과

하의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을 기반으로 정부정책과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한 국책사업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 및 성장 도모해야 한다.
- 정부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사업, 지역 내 숙원·현안사업 등 발굴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Life, Energy, Mobility로 구분하여 총 6개의 국책사업을 제시하였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농생명분과

조원지(책임연구위원)

- 이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1.18.)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및 성장도모를 위하여 정부정책과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한 국책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생명분과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발전을 위한 농생명 관련 중점과제를 발굴하였다.
- 농생명분과는 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실험동물 자원 안보 확립과 영장류 동물자원의 확보 및 국내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첨단 영장류 생명연구자원 보존·연구 인프라 구축”, 차세대 식품으로의 숙성 식품군의 성장을 위한 “식품 숙성 데이터 디지털 전환(DX) 기반 농생명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건설교통분과

오병록(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을 기반으로 정부정책과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한 국책사업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강점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국책사업의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기존 건설현장의 작업 여건, 생산성, 안전, 환경 등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비효율성 그리고 사회의식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건설인력 확보 어려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의 해법으로서 제조업 방식의 탈현장 건설인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발굴하였다. 새만금 일대에 OSC 건축 전문 제조 공장 및 관련 부재 제작 공장 건설, 건축신기술연구센터 설치·운영하는 미래 신기술 스마트 건설 클러스터로 제안하였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새만금해양수산분과

나정호(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 및 지역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책사업발굴추진단을 운영하여 새만금해양수산분과의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성장 동력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검토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새만금해양수산분과에서는 “새만금 유통물류 복합비즈니스 지구 조성”, “갯벌식물 아쿠아팜 조성”, “디지털트윈 안전항만 기술개발”, “트라이포트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 개발” 등 2026년 국책사업으로 4건을 제안하였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도민안전분과

천지은(연구위원)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1.18.)을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책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현 가능성 높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정부 정책 및 지역 강점과 연계한 사업 기획, 도·시·군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발굴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 발굴 목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10건, 500~1,000억 원 미만 10건, 500억 원 미만 4건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선제적 재난안전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둔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환경산림분과

장남정(선임연구위원)

- 전북연구원은 매년 도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을 기반으로 정부정책과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한 국책사업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 및 성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TFT에서는 환경산림분과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 관련 국책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 환경산림분과는 기후테크 선점을 위한 1)군산분지 CCS허브 구축사업, 탄소정원 모델구축을 위한 2)시민공유형 탄소 넷 플러스 정원모델 조성사업, 국가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3)산업단지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최종 3건의 국책사업이 선정되었다. 추가로 제시한 익산 왕궁지역 세계 녹색복원 엑스포(2029) 개최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였으며, 시군 제안 사업으로 김제시 국가하천(동진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선정하였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복지분과

이주연(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1.18.)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강점 기반의 경쟁력 강화 사업 등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한 국책사업을 복지분과 중심으로 선제적 발굴하여 지역적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복지분과에서 발굴한 주요 국책사업은 (1)호남권역 한의 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 (2)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 (3)보훈전문재활센터 및 마음치유센터 유치 등으로 각기 사업별 추진 타당성과 전북자치도의 추진 당위성 등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방향 설정, 기본구상(안) 및 세부 내용 등을 도출하였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교육·외국인분과

전희진(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지역 강점을 연계한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국가 예산 확보 및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육·외국인 분과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구체화하였다.
- 주요 사업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센터 구축, 서부권 해양환경교육원 설립,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유치를 제안하였다.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센터는 호남권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서부권 해양환경교육원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해양환경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외국인 출국지원센터는 무주군에 인권 친화적 보호시설을 설립해 난민 및 외국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들 사업은 지역 강점을 활용하여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책사업발굴 추진단(2024)_문화체육관광분과

장세길(선임연구위원)

- 정부 정책에 부합되면서 미래 지향적인 국책사업 발굴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중요한 활동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가 주도의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였다.
- 전북도·시·군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을 발굴한 결과, 新광역관광개발(글로벌 K-관광개발 선도 프로젝트),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 K-디지털치유 클러스터 조성, 올림픽·패럴림픽 명예의 전당 건립, 한국장(담그는)문화 전수관 건립, <실감아일랜드 선유> 프로젝트, 국립 태조역사관 건립 등 사업이 발굴·제안되었다.

2024년 네덜란드 연구포럼 운영 TF

김보국(수석연구위원)

- 강소 혁신 DNA를 가진 네덜란드의 경제발전모델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해보고자, 전북연구원 내 자체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농생명·물·환경, 금융·물류·산업, 지속사회 등 3개분과가 운영되었으며 원내 내부 전문가간 스터디그룹 운영과 분야별 산·학·연·민·관의 네덜란드 관련 전문가들의 초청강연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경제·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네덜란드 성공모델을 추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 금융, 이민, 교육, 자치, 환경 등이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사례에 기반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전북자치도 저출생 극복 위한 대책 마련 대응

김동영(책임연구위원)

- 이 연구에서는 道, 전북연, 전북여성가족재단,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활용하여 도민 체감가능한 전북도 저출생 대응 대책에 필요한 자료 및 대응 논리를 마련하였다.
- 일자리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고용우대 기업참여 유도방안, 공공·민간 등 다자녀가구 채용목표제 참여유도 등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출생한 돌봄 분야에서는 저출산의 원인분석과 원인에 대한 분야별 대응 전략, 지자체 특성에 맞는 양육·돌봄 지원 등을 모색하였다. 일·가정양립 분야는 직종별·성별 등에 따른 육아 시간·휴직 사용 현황 파악 및 공공·민간 등 지역사회 확산방안을 도출하였다.

새만금국제공항 물류포럼운영 TF

나정호(책임연구위원)

- 새만금국제공항의 2029년 개항을 앞두고,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여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2개 분과로 구성된 국내 항공물류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하였다.
- 이 연구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산업과 초저온 물류를 중심으로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복합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며, 스마트 물류 기술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크루즈 산업 연계, 글로벌 사례 벤치마킹,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물류 및 관광 허브로 발전시키는 장기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 TF

임승현(선임연구위원)

- 정부는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평가하여 지역의 안전역량을 공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6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중에 교통사고(4등급)와 생활안전(2등급)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컨설팅 대상 광역자치체로 선정되었다.
- 당초 행정안전부의 공모 참여시에 지방연구원의 참여가 협약에 명시되어 있어 2024년 전북자치도의 안전역량 컨설팅 사업은 전북연구원이 맡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전북자치도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사고에 대한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GIS 공간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사고가 다발하는 취약지역을 추출하였고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발생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지역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제시하였다.

전북 중추도시 육성 지원 TFT

장성화(선임연구위원)

- 전북 중추도시 육성은 호남권을 벗어나 충청권 및 광주·전남권과 대등한 위상에서 광역·초광역적인 연계협력력을 도모하는 독립된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추도시 육성과 병행하여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도내 시·군의 활력 재생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현안 과제이다.
- 중추도시를 핵심으로 동(대구·경북), 서(중국), 남(광주·전남), 북(충청권)을 향해 전북의 성장축을 확장시키는 축선 상에 위치한 시·군의 적극적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북 내부의 균형·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중추도시 육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북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대응 논리를 발굴·제시하였다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계획서 작성

정은현(연구위원)

-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회 개요, 개최 목적 및 취지, 내외빈 초청 범위, 예상 참가인원, 인력 대책, 소요 자원과 조달계획, 주요시설과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유치 여건 및 계획 등을 포함한 개최계획서를 대한 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 이 연구에서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회 컨셉, 자원 조달계획, 경기장 및 숙박 시설계획, 대회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계획, 교통 및 수송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36 하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한 제출자료로 활용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생물문화다양성 증진지역 도입방안 연구

천정윤(연구위원)

- 전북 12개 시·군에 조성된 생태관광지는 다양한 생태·환경자산과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에 적용한 사례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과 역사·문화자산을 생물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통합 활용하는 「생물문화다양성 증진지역」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생물문화다양성 정책동향과 주요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전북의 생태관광 한계 분석과 일본 등 주요 생물문화다양성을 접목한 생태관광 증진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북의 생물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키워드를 반영한 추진 과제들을 도출하고, 「전북자치도 생물문화다양성 증진지역」을 제시하였다.

2024년 금강권 연구포럼 운영 TF

김재구(선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4대강의 하나인 금강을 중심으로 충청권 지역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금강권 연구포럼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과의 분야별 연계 협력을 위한 연구 및 정책네트워크 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분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각 지역의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을 위한 프로젝트(사업) 과제 및 대안 발굴 등의 사전 검토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진행하였다.

2024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천지은(연구위원)

- 이 연구는 도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목적은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도민 의식 조사를 통해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의 운영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개월이며, 18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조사,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과 연구 성과 공유를 실현한다. 이러한 모니터링단 DB를 활용하여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기본소득 추진방안 TF

황영모(선임연구위원)

-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농촌지역은 '취약성'이 높다. 농촌 지역의 위기 대응방안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선도적 정책실험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시범사업 방식으로 효과를 실험하는 단계이다. '전면적 시행'은 여전한 과제이다. 사회적 합의와 재정지출의 현실적 균형점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높아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선도정책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 중이다.
- 이 연구는 사회적 요구, 정책적 실험, 정치적 논의를 바탕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 목적, 주요내용,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대응, 자치법규안도 마련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

유승수(연구위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8개 시·도)은 댐주변지역,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낙후도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23.12)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의 기초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만 포함)의 시·도 발전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 연구는 무주군을 중심으로 현황 및 여건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연계협력 기반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전략, 전략별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사업을 도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 설계 방향 연구

천지은(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직 재설계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자치권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조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부·외부 환경 분석, 민선 8기 조직 현황 및 성과 평가, 조직 구성 및 기능 분석,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조직 재설계 방향 도출로 구성된다.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SWOT 분석 등을 활용하여 조직 개편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시도편, 권역편) 대응 TF

김재구(선임연구위원)

- 국토에 관한 최상위 계획 위상을 지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계획 및 특별자치권(초광역권) 발전 방향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국토발전 전략에 부합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특화된 발전전략 및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다각화된 지역계획 및 초광역권(특별자치권)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계획과제 및 정책을 제안하면서, 최근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초광역권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 등을 통해 주요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2025 전북연구원 연구성과 확산 및 환류사업

천지은(연구위원)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와 정책결정자에게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성과공유회의 기획 및 운영, 연구성과 전시 포스터 제작, 성과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해 연구성과의 지역사회 가치 전달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주요 사업은 2025 연구성과공유회(행사명: 전북연구원 2024 연구성과와 2025 정책 인사이트)의 기획·운영으로, 전북연구원의 10대 연구 아젠다 발표, 정책 방향 모색 세션 운영, 정책실별 우수 연구과제 전시 등을 포함하였다.

01 · 협약과제 23HY13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장남정(선임연구위원)

- 전북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10년(2024~2033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환,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도’를 비전으로, 맞춤형 특화산업을 통한 탄소중립 주류화,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한 생명 경제 실현, 모두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의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8년 기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7개 부문 총 7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02 · 협약과제 23HY14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김재구(선임연구위원)

- 새만금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은 개발(매립 및 조성), 산업, 관광, 물류, 농생명, 수질, 환경복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전문가 활용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이 연구는 새만금 30년사 도민백서 발간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를 되돌아보고, 새만금사업 자문을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의 효율성 및 역할과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사업 (2024년)

장남정(선임연구위원)

- 2024년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평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전북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기획과제)를 수행하였다.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 및 실행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 발굴전략 컨설팅 및 전북 출자·출연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지원하였다.
- 또한, 총 5차례의 탄소중립 포럼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사업으로 스티로아트 탄소중립 사례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영차! 서포터즈’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전북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및 실천문화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새만금 ESG 포럼 공동개최 및 TBN(전북교통방송) 탄소중립 캠페인 문구 작성, 학회 참석 등 다양한 협력 및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다.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모델 구축사업

김보국(수석연구위원)

- 환경부로부터 새만금유역의 17개 소유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13.12.24.)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거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17.1)을 수립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시범기간(18~19년)을 거쳐 2020년부터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유역 강우유출수 조사대상지점 현장수질조사, 새만금유역 수질모델 구축과 현행화, 대상물질별 목표달성도 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새만금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구축 운영사업

김보국(수석연구위원)

- 이 연구는 새만금 종합계획의 변화, 새만금 특별법 제정, 새만금호 수질관리에 대한 사회적 갈등, 새만금 개발에 따른 생태적 변화 등 새만금과 관련하여 생성된 많은 자료와 정보가 파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축척시킴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어 추진되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새만금유역의 수질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빅데이터화와 각종 연구결과물의 아카이브 구축, 새만금유역 수질예측모델링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관리 연구 및 새만금 종합계획 재수립 대응 등이다.

전북학연구센터 사무위탁

장세길(선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을 통해 전북학연구센터를 운영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State), 후백제와 조선(건원·이성계)으로 대변되는 ‘개국(開國)’과 임진왜란 웅치 전적 사적 지정, 동학농민혁명 130년, 전북 의병운동 기념사업 등으로 대변되는 ‘호국(護國)’을 2024년 주제로 설정하고, 전북학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 1년 동안 전북학 학술대회 지원(2개 기관), 전북학 연구인력 양성과 학술연구지원(석사 2, 저서 2, 논문 5), 시군 지역학 지원(4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현안 대응 및 지원(전북-제주 문화교류, 임진왜란 재조명 학술행사), 『전북학연구』 학술지 발간, 찾아가는 전북학 5개 종합대학 교육사업, 2024 전북학주간 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동향 모니터링 사업

이강진(선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통계청 승인통계인 ‘전북특별자치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조정으로 인해 지속작성을 전북연구원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하고 있는 전북경제브리핑 또한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연구원에서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22년부터 관련 경제동향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경기종합지수 및 전북경제브리핑을 작성하여 전북 경제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였다. 7개 지표의 composite index인 전북특별자치도 경기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를 작성하였다. 지역경제 동향 및 운용방향, 부문별 경제동향(고용, 생산, 수출입, 창업, 물가, 종합경기, 기업유치), 주요경제지표, 전북자치도 동행 경기종합지수 공표일정 등이 포함된 전북경제프리핑을 매월 발간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장충희(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연구 주요 내용은 『전북의병사』 디지털화 작업으로 약 1,450쪽 분량, 20만 단어, 1,900명의 인물 정보 디지털화하였다. 오류 검토 및 신규자료 발굴 작업으로 14개 시군 문화원을 통해 약 1,500건의 오류 및 개정 사항을 발견하였다. 의병 관련 자료 목록화는 1차 사료 116건, 단행본 184건, 연구논문 235건, 문집 50건 아카이빙하였다. 의병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동부권, 북부권, 서남권 각 10분 분량 영상 제작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로 2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의병 유적지 실태조사는 지정문화재 36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전북물포럼 운영지원 사업(2024년)

장남정(선임연구위원)

- 전북물포럼은 전북지역 내 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지역 내 전문가와 공유하여 지역내 물정책 개발, 물갈등 해소, 물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북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다. 정책·계획, 갈등·조정, 참여·문화 3개 분과로 구성되어 44명의물관리 전문가 및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
- 2024년에는 기존 분과운영 중심에서 전체행사 중심의 포럼으로 운영방향을 달리하여, 3월 키오프회의 개최, 4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2차 유역물관리 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7월 중간보고회에서는 전북물포럼 물관리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행사에 참석한 물포럼 위원 모두가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용저수지 관리방안, 새만금 MP변경 대응 물수요 확대방안, 용담댐 수상태양광 등 도내 물관리 이슈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었다.

제1회 전북포럼 운영

하의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발전 방안 모색과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였다.
- 이 연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과 지속발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국제포럼 운영 및 지원, 포럼추진단/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김동영(책임연구위원)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11개 시군의 인구감소대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실질적인 등급상향을 위한 컨설팅이 추진되었다.
- 1차 사전컨설팅에서는 ‘24년 투자계획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25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과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차 현장 컨설팅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별 검토내용을 제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의 적절성을 컨설팅하였다.

2024년 농생명산업포럼

조원지(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민선8기 농업정책은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으로, 생산·유통·가공·R&D 등 농생명자원이 집적되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부가 농생명 산업을 선도해 가는 지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농정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생명산업포럼을 운영하였다.
- 농민행복, 농촌활력, 농업소득, 농생명식품, 친환경축산, 수산물활력, 농업기술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농업인, 농촌치유관광,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농산물 수출 확대, 스마트 축산, 해양수산 신산업 등을 주제로 분과별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2024 농생명산업 컨퍼런스(5.2), 성과공유회(12.18.) 등을 개최하였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

김동영(책임연구위원)

- 이 연구는 전라도 천년 7대 분야 중 전라도 이미지 개선에 포함된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 전라도천년사 발간 이후 제기된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편찬하기 위한 3개 지자체의 협의를 추진하였고 재발간을 검토하였다.

김보국(수석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 전북자치도는 ‘천리길 사업(2018~)’과 ‘전북 생태관광 지 육성사업(2015~)’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와 역사문화가 접목된 생태관광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별로 육성·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탐방객에 따른 생태계 훼손 우려, 경제성장과 MZ세대 등장에 따른 캠핑 증가 등 생태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수요변화에 부응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과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 연구에서는 산재된 생태자원(점), 삼천리길(선)으로 연결하여 도내 전역(면)으로 생태관광을 확산하고 체류형 관광객 등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중간지원조직인 전북생태관광육성 지원센터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김동영(책임연구위원)

무주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용역

- 이 연구는 무주군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을 위해 지역개발 및 SOC, 농업농촌, 문화관광, 산업안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특례 5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를 통해 지역개발 및 SOC에서는 청주-보은-무주 철도건설 및 무풍-대덕 국도 30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 농업농촌은 스마트 양봉 시설구축 사업, 이상기상 대응 생산기반 안정화 패키지시범사업을, 문화관광은 무주 지역특화 박물관 건립, 무주 태권도 그랜드 페스티벌을, 산업안전은 제2고용노동교육원 선립, 산악구조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특례는 덕유산 탄소중립 공원관광지구 조성 및 산악관광생활권 관광산업진흥지구 지정특례 등 23개 사업과 동북부권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5개 추가사업 발굴을 제안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예정으로 특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특례 조문 축소로 자치분권 및 자립 기반의 한계가 분명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분석(일반현황, 법규 및 관련 계획, 사례, 수요조사, 종합 분석), 전북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설정, 부문별 계획 수립, 거버넌스 및 홍보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 이 연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수립하였고, 5대 목표 20대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전략별 주요 과제에 이와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립·제안하였다. 또한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전북의 미래상을 제안하였고, 향후 특례 발굴 방향과 특별자치도의 중장기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이 연구는 ‘25년부터 교육부의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전환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전북 RISE 계획은 78명의 분과위원을 필두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대학, 시군, 기업, 유관기관, 도 담당실국 등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함께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대학 Brand Up ▶ 산업 Grow Up ▶ 지역 Value Up)”을 비전으로 4대 전략(지역산업-대학정책 상생연계, 권역별 일자리 인재혁신, 지역균형 평생학습도시, 공유 협업문화 확산)을 제시하였으며, 4대 프로젝트(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협력 지역 발전), 12대 단위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일자리 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 장애인은 낮은 경제활동참여율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경험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장애인의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과 일자리 수요를 진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일자리 타운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장애인일자리타운은 전문적인 직업훈련기관의 건립과 함께 장애특성에 맞는 적합 직종의 개발 그리고 장애인 창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목

표로 일자리타운의 조성방향과 함께 장애인창업혁신 허브,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등의 핵심인프라 설치 계획을 제시하였다.

2025~2030 김제시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연구

- 이 연구는 김제시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김제시의 강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분야별 대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신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정부와 전북자치도 정책 분석, 김제시 여건 분석을 포함하여 종합적 SWOT 분석을 통해 발전 잠재력을 도출하였다. 분야별로는 산업경

제, 농생명, SOC, 인구복지, 문화관광 분야의 국가예산 사업을 제안하며, 각 사업의 세부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김제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배균기(책임연구위원)

2024~2028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의 목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농정방향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농생명산업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농생명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달성하

기 위한 6대 전략(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을 제시하였다. 세부 정책과제와 투자관리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장성화(선임연구위원)

군산시 신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용역

- 최근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 한계로 매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변화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등 현재 시대 여건에 맞는 기존계획의 발전적 수정·보완이 필요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 이양사업의 보전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지만 향후 군특이양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방 재정 손실이 예상돼 균형발전을 위한 기존계획의 수정·보완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신규 정책 또는 전북의 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논리 개발을 통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국가와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전략 실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임실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기반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전라북도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임실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었다.
- 임실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기준 60%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7개 부문 43건

의 사업을 확정하였다. 임실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임실 RE100, 임실N ESG경영, 산림자원 선순환 3대 특화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장단 설문조사, 군의회,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매년 세부과제 이행평가를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을 점검하고, 임실형 탄소중립 모델구축을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용역

- 이 연구는 순창군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 전략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중앙정부 및 전북자치도 정책 동향 분석, 순창군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 환경 현황 파악, 산업·경제 및 관광자원 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력, 정주·생활인구 증대,

도시브랜드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각 과제의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연구 결과는 순창군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김제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지역 연구원이 타당성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되어 있기에 2025년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김제축제관광재단의 설립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경제적·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설립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 검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 설립계획의 적정성, ③ 기대효과로 구분된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기초지자체

가 수행해야 할 사무 영역을 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지와 경제성 및 고유목적사업 비율 분석을 통해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파악한다. 설립계획의 적정성은 조직 및 인력 계획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수립되었는지와 기대성과가 예산안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부문에서는 주민복지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 투입 대비하여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군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김치 클러스터 조성) 수립 연구

- 이 연구는 김치 원재료가 모두 생산되는 부안군의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치 생산·유통·판매기지로써 부안군의 산업여건을 진단하고, 김치산업단지 조성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국내의 김치산업 관련 현황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부안군 김치 관련 사업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안군의 김치산업 관련 정책적 여건과 함께 김치산업

관련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해 부안군 김치산업육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부안군 김치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안군 김치산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가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천정윤(연구위원)

왕궁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복원 추진방향 수립 용역

- 익산 왕궁지역은 1948년 한센인 이주와 대규모 축사 단지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브라운필드 중 하나이다. 지난 십여년간 축사를 매입하고 일부 수림대를 조성했으나 여전히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3년 5월 환경부는 이 지역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왕궁 지역의 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와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 연구 결과로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익산왕궁 에코토피아 조성”을 비전으로 생태환경 복원, 생태경제 창출, 지역사회 회복의 3개 목표와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1단계 생태환경 복원은 생태통로 조성, 하천 및 습지 복원, 생물종 서식지 조성이 포함된다. 2단계는 생태탐방로 조성, 왕궁 자연회복기념관 조성, 국립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세계 녹색복원 엑스포 개최 등을, 3단계 사업은 경관조치 조성, 탄소중립 생태빌리지 조성, 스마트팜 조성, 동선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다.

천지은(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성과목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자체 성과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정 비전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내용은 국무조정실의 성과평가 체계 분석 및 협약(안) 개발, 전북자치도에 특화된 자체 성과모니터링 체계 개발, 기존 평가체계와의 연계 방안 도출, 지속 가능한 평가 운영 전략 수립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연구, 면담조사를 통해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평가체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였다.

황영모(선임연구위원)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이 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무주군의 농업·농촌·식품분야 총괄 계획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였다. 정부와 전북자치도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무주군 특성을 반영한 ‘농정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무주군 농업·농촌·먹거리를 둘러싼 외부환경 등 ‘여건진단’과 지역내외의 주요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분석’을 진행하였다. 외부환경과 지역내부 현황에

근거해 무주군의 ‘과제도출’을 통해 ‘대응방향’을 설정하였다. 계획을 통해 달성할 ‘비전·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통해 실행해 나갈 ‘전략체계’를 마련하였다. 추진 전략, 중점과제, 세부사업 등을 마련하고, 계획기간 투자계획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나정호(책임연구위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내수면 청년 어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사업으로 제안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2024년부터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이 연구는 김제시에 조성될 센터의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운영 및 관리계획을 구체화하여 ICT 기반의 교육과 창업을 윈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는 내수면 양식 스타트업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어

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창업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전북형 디지털 첨단양식 기술의 교육, 훈련, 창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내수면 스마트양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모(선임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연구

-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국가가 수립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이 연구는 상위 법률과 「전북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근거해 법정계획으로 전북자치도의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요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전북자치도의 한의약 육성계획 관련한 여건진단 및 현황 분석, 대응과제 및 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북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등 전략

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 내용에 따른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내용을 작성하였다. 한의약 육성계획에서 다루는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육성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정은천(연구위원)

2024년도 지방(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는 시군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시군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주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조직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통한 대외적 신뢰성,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실현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평가 매뉴얼에 따라 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하였고,

둘째, 대상 기관의 실적보고서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장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현장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및 평가하여 가점요인, 종합의견, 평가점수에 대해 집단 평정서를 작성하여 평점을 부여하였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 전북특별법 제33조~제37조에는 국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의 장과 전북자치도지사가 도내 국가산업단지 내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설립목적과 방향 그리고 핵심 시설의 건립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조성방향으

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임상실증,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핵심시설로서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단, 고령친화인재개발원 등의 핵심 인프라 건립을 제안하였다.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 지난 1차 수소산업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내외 정책, 시장, 기술 등의 수소산업 환경을 분석하였다. 수소산업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도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

였고, 도내 전문가 대상으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정된 기본방향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분과 운영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전체 청년(19~34세) 중에서 고립·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은 최대 약 54만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전북자치도도 2023년 기준 약 1.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의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9년 기준 연간 6.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기타 건강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양비로 개인 가구당 2천만원 발생하고 있어 청년의 고립과 은둔의 사전예방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계획의 비전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을 통한 완전한 지역사회복귀와 통합’을 제시하고 4대 전략과 제로서 고립은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자원 연계형 통합지원, 생애주기별 가족중심 종합지원 그리고 위기상황별 신속지원 등 4가지를 제안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이 연구는 전북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농생명산업을 둘러싼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방향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 농생명산업의 주요한 특성과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생명산업 고도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성장 산업화를 견인하기 위해 도입되는 ‘농생명산업지구’ 특례에 대한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분야별 육성방향, 공간계획, 환경관리, 추진체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하의현(연구위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2024)

- 이 연구는 도내 대중교통운영자인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발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였다.
- 이를 위해 서면평가, 방문평가, 현장실사, PT-CSI를 적용한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일반 현황분석, 대중교통(시내버스(13), 시외버스(5), 농어촌

버스(5)) 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무구조 건전화, 서비스 개선 등 촉진하고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주연(책임연구위원)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김제시의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현장 각 분야의 외국인정책 수요 증가 및 급변하는 외국인정책 환경 등을 고려한 김제시만의 특성·여건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 연구를 통해 김제시의 인구구조 특성과 외국인현황 분석, 분야별 산업환경과 외국인력 수요 분석, 다양한 주체자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비전, 핵심가치 등)을 설정하였고, 구

체적으로 4대 정책 목표별, 8대 추진 전략에 따른 27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근거한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 분야 법정 계획이다. 연구원 지난 1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이어 2차 기본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2025~2029)’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목적이 있었다.
- 첫째, 사회적경제 정책동향과 국내외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둘째, 전북사회적경제 현황과 위치를 진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와 도민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1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과제를 진단하여 2차 기본계획의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목표, 비전 설정,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체계 마련하였다. 다섯째, 추진전략·중점과제의 위계에 따른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정리 및 발굴 작성하고, 사업별 재원의 투자계획과 정책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제안하였다.

지역먹거리계획 업무 매뉴얼 제작 연구

- 연구원은 전국 최초 지역 푸드플랜 수립, 정부의 지역먹거리계획 정책 마련과 추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 연구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연구 업적을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전국 지자체(행정+관계자) 수준에서 실효적 계획 실행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매뉴얼 수준으로 마련하데 목적이 있었다.
- 연구를 통해 첫째, 지역먹거리계획 ‘기본구조’를 현행화 하였다. 국제적 논의와 실천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먹거리계획의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로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행정 담당자와 관계자가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절차·업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먹거리 체계의 세부영역별로 필수적인 업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자체 담당자가 계획의 실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업무진단 수단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폐·유헬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변화는 주택, 학교, 공장, 창고 등이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폐·유헬공간으로 전락하고 있고, 폐·유헬공간의 급증과 방치는 지역사회를 더욱 쇠퇴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폐·유헬공간은 지역 재생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활성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폐·유헬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전략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는 폐·유헬공간에 대한 인식, 폐·유헬공간의 유형 및 특징, 폐·유헬공간의 지역거점화 방안, 폐·유헬공간 재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유헬공간의 지역거점화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가건축위원회에서 폐·유헬공간의 지역거점화 등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5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이 연구는 '25년부터 교육부의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전북 RISE 기본계획에서 설계된 단위과제별 RFP(제안요청서) 고도화, 성과관리 방안(성과점검 절차·성과평가 및 분석·성과 확산 및 환류·성과결과 활용 등)의 구체적 제시 및 성과지표(지표 구성, 산출식 구성 등) 향후 활용 방안 도출하였다. 또한 전북 RISE 기본계획에서 배분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집행 기준 수립·시스템 활용방안·사용실적 보고 절차·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집행 모니터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하였다.

전희진(책임연구위원)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통계 작성 용역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19~39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이 연구는 인구, 가구, 일자리, 경제, 복지 등 5개 분야의 82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전북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유출 동향, 경제활동참가율 및 주요 산업별 종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북 14개 시·군의 청년 집단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년 정책 기획과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천(연구위원)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계획서 기반 경기·지원시설 구축 연구용역

-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국제 스포츠기구와 종목별 국제스포츠연맹의 대회 관련 시설규격과 도내 경기시설을 비교·분석하여 신설경기장 수요 파악 및 경기시설 조성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스포츠 시설인프라 조성 관련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도내 대회 관련 시설을 조사하여 경기장 및 훈련시설 보유 현황을 파

악하였고, 둘째, 국제종합경기대회 경기시설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신규시설 설치방안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신설경기장의 규모, 소요예산 등의 추정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넷째,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주요시설 배치, 숙박시설 분포, 경기장 등을 실증적으로 구현하는 배치도 및 조감도 제시를 통해 종합적인 표현과 이해도를 향상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의 어업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경쟁 여건 분석을 통해 어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어업 활성화 정책 연구회와 협력하여, 어업 육성 정책 동향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과 김 육상양식 기술을 기반으로 특성화 어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및 친환경 기술 혁신을 통해 어업과 연관 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귀어·귀촌 인구 유입, 어촌 커뮤니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며, 과학적 자원 관리와 통합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 및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종합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지역마다 대기환경특성이 상이하므로 지자체별 맞춤형 시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었다.
- 연구의 주요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배출원별 대기오

염물질별 배출량 조사와 장래전망 분석, 대기오염물질별 대기오염도 현황 및 예측, 대기환경개선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대책 제시, 분야별 대책수립을 위한 지자체,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상위계획 수립이 일정보다 지연되었으나 2024년 계획승인이 완료되어, 2025년 본격적으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김재구(선임연구위원)

완주군 도시성장 및 지역특화 발전 전략 연구용역

-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전략 등 중장기적 중심도시 성장 전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사회·경제적 시대 현상을 반영한 완주군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모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완주군의 도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에 활용되어, 완주군이 고르게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지역내 균형발전 정책 추진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와 지역활력 제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시백(책임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2022년 전북자치도는 민간 주도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전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도출하였으나, 2024년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출범하게 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

능발전 현황 및 전망 분석, ②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③ 5개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④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이행 추진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분석은 인구, 사회, 환경, 복지 등의 통계자료와 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토대로 ‘경제자립 실현’, ‘포용사회 구현’, ‘친환경 공간 조성’, ‘상생협력 강화’ 라는 4대 전략 아래에 58개의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지훈(책임연구위원)

군산시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연계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이 연구는 군산시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과 관련된 이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연계하여 제조업, 수산업, 관광업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 구체적으로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 동향과 관련산업의 동향을 조사하고,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풍력기업을 중심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역 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수립된 방향, 계획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중섭(선임연구위원)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노인과 독거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요보호노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매노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료와 재활, 돌봄, 여가문화, 주거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다양한 보건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고령인구 중 치매노인과 독거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생활실태를 이를 토대로 건강한 노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강치유마을의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와 주거, 요양 그리고 여가문화가 결합된 건강치유마을의 건립방향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보건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방안도 제시하였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4.1.18.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24.12.27. 시행)되면서, 개정된 전북특별법에 근거하여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전북특별법 제15조 제1항)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10년)'의 수립이 필요하다.
- 전북특별법에 근거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생명경제도시 중

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부안군 미래 아젠다 발굴과 신성장 전략 구상

- 변산해수욕장이 1933년 개장된 이후 부안군은 90여 년 동안 서해안의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하였으나,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00년을 이끌 부안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정부·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변화 전망, 국내·외 산업적 동향, 사회경제적 흐름에 대응하여 부안군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한 부안군민의 삶의 질에 대한 아젠다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이 연구에서는 부안군에서 기존 추진되었던 비전과 분야별 성장 전략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시기별 주요 성장 전략을 검토하여 민선 이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 전망을 토대로 부안군의 분야별 여건(기존 성장 동력의 평가, 현재의 분야별 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향후 부안군의 신성장 전략과 관련된 미래 아젠다를 설정하였고, 부안군의 장기 전략에 적용 가능한 아젠다를 구체화하여 아젠다별 성장 전략 및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군산시 국책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

- 미국의 트럼프 2기의 시작, 국내 국정운영 방향의 변화 등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저성장기조에 들어선 경제·산업의 구조적 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군산시의 지속 가능성과 차별성이 담보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변화와 각 부처 사업의 지방이양 가속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2024년에 발굴된 기존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정부의 신규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군산시에 맞게

사업의 타당성 및 논리 강화를 통해 국책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슈브리핑·정책브리프



2024 전북특별자치도 10대 연구 아젠다

연구본부 총괄

5대 분야	연번	<2024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아젠다>
도민경제 부흥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거점화
	1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산업 진흥
	2	전북형 탄소중립 모델 개발로 지속가능 경제 생태계 조성
농생명산업 수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혁신기반 완성
	3	농생명 산업생태계 고도화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지역 역사·문화·생태 자원의 가치 극대화
	4	역사문화의 재발견과 활용
	5	지방소멸시대, 더 특별한 관광 생태계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새만금과 특별한 자치로 지역 활력
	6	새만금 개발 가속화
	7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창출 및 특례 확대
	8	청년인구 확충 및 전북 특화형 비자 확대
도민행복·희망교육		든든한 복지와 창의·협치 교육 실현
	9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확대
	10	지역특화산업 이끄는 인재교육 기반 구축



항공 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

나정호(책임연구위원)

제안 배경과 목적

-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과 조기 활성화 준비) 현재 대한민국의 15개 공항중 인천, 김포, 제주, 대구, 김해 등 5개 공항만 흑자 운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준비 과정에서 활성화 고민이 필요하다.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이 예정되어 있으나 여객 유치 경쟁과 인구감소에 따른 여객 증감 변화가 예상된다. (항공 물류 신산업 기회 선점) 전북특별자치도 특송화물 통관장,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적 입지 강점은 항공 물류 신산업 기회 선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점한 항공 물류 기회 요소와 새만금 입지 강점을 활용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기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자치도 특성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과제와 경쟁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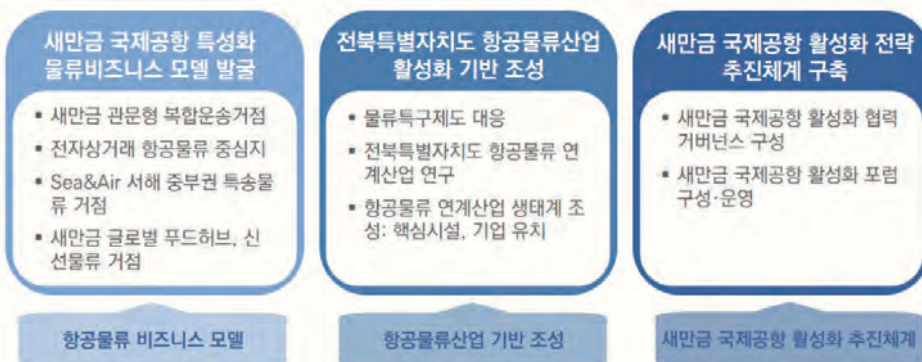
- 대부분 지자체의 항공 물류산업 육성계획 지향점이 유사하므로 후발주자로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존 공항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

다.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 여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점은 입지적 강점과 특송물류, 콜드체인 등 특성과 물류 가능성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약점은 항공 물류산업 기반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기회로는 친환경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신규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위협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기간과 치열한 항공 물류산업 경쟁이다.

항공 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

- 새만금 국제공항 특성 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예시로 한중 관문형 복합운송거점, 전자상거래 항공 물류 중심지, Sea&Air 특송물류 거점,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신선물류 거점) 등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항공 물류산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물류특구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과 전북특별자치도 항공 물류 연계산업 연구, 항공물류 연계산업 생태계조성이 필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전략 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 구성,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포럼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 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발전전략>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

김시백(책임연구위원)

제안 배경과 목적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하여 소액지분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토큰증권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미술품, 한우, 선박금융, 부동산 등 기존에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자산들로 토큰증권은 향후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업계들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토큰증권의 가능성

-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업용 건물 및 임대 주택 뿐만 아니라 호텔 등의 관광시설에도 토큰증권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세인트 레지스 아스펜 리조트이다. 국내는 토큰증권과 유사한 구조로 상업용 부동산 대상 조각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호화폐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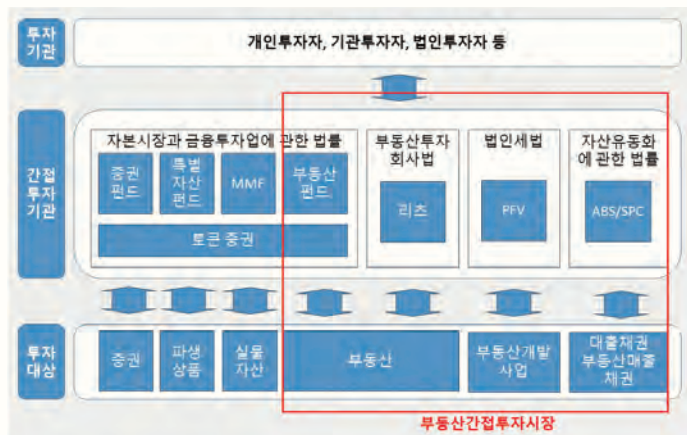
니라는 점에서 토큰증권과 차이가 있다.

새만금 개발 적용 가능성

- 새만금에서 토큰증권화 할 수있는 실물 자산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유형별로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변형하는 구조로 추진할 수 있다. 토큰증권 발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토큰 증권거래소는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토큰증권 도입 방안 및 기대 효과

- 토큰증권을 새만금 개발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지정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공사가 토큰증권 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만금 부동산 토큰증권 거래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칭 ‘새만금 디지털부동산토큰증권 가격지수(S-RESTPI)’를 만들어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황영모(선임연구위원)

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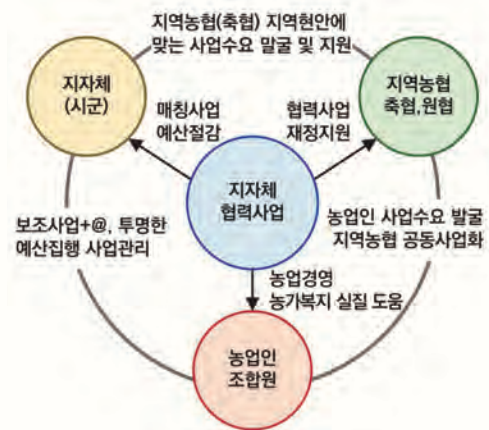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는 2022.12.27.「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2.28. 시행령을 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 분야(기관)'와 '성과보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성과를 보상'하는 것이다.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기존 정책사업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존 농업농촌 농림사업
사업기획	민간기관 제안과 협력적 개발	행정조직 주도의 기획과 개발
추진방식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집행
지원대상	사업 운영 또는 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 적정 사업자 선정
투입재원	민간분야 재원 집행 후 사후 보상	정부 재정의 사전·사후 집행(자부담 포함)
성과평가	독립적 성과측정·평가 기관의 측정 평가	사업지침에 따른 결과·목표 달성 진단
주요특징	사업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방식	사업목적에 따른 재정집행 방식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지역사회의 준비와 대응

- ① 지자체의 사업시행 담당부서 선정과 실행태세 준비가 필요하다. 담당부서 선정은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지자체(광역시·기초) 담당부서를 '총괄부서'(총괄관리)와 '사업부서'(사업실행)으로 나누어 정책지원과 전문적 시행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 기획과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근거로 자치법규(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공공+민간)의 이해를 위해 관련 사례 검토·학습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한다.

- ② 농촌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적 사업기획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기획 제안시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추진 규정에 근거하고,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 필요 과제를 민간 창의성과 연구개발·조사에 기초'문제해결 방식 프로젝트로 기획되어야 한다.
- ③ 사업의 추진체계와 실행에 필요한 기구와 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추진체계의 핵심기구로 성과보상 및 임팩트 투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평가기관의 역할은 근거 기반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민간운영기관 사업시행 단계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지원관리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사업 수행 민간운영기관은 실시계획이 성과보상 방식에 맞춰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하며, 재원조달, 담당인력 등의 역량이 중요하여 초기 기획과 발굴이 관건이다.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

천지은(연구위원)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1인2주소제 시범사업 특례의 논의가 필요하다. 부주소 등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생활인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기대하거나, 재원 배분의 근거로 부주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도구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책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전북형 특례화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치단체 간 연대·협력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인2주소제 설계요소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는 1인2주소제의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다시 행정적 권리(공공시설 이용, 균등한 행정혜택 등)와 정치적 권리(참정권, 투표권, 청구권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의 의무는 제도의 디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 세금 및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다.
- 주민 권리/의무 측면의 정책조합에 따른 6개 대안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납세의무 부여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 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 수용성을 고려할 때 6개 정책조합 시나리오 중 ‘저 권리-저 의무’에 해당하는 행정적권리-납세 없음 (안)부터 시범 적용하는 특례안을 제시하였다. 납세의무 부여 시 재원분배 방안으로 교부세 산정근거 활용, 주주소-부주소 간 납세분담비 정률화, 거주기간을 반영한 분담비율 결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전북형 특례를 통한 시범사업 및 지자체 연대가 필요하다. 전국적 적용이 어려운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한 시범 사업을 통해 선제적 접근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 재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타 특별자치시도 및 인구감소지역, 내지는 메가리전단위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된다.

<1인 2주소제 정책조합 시나리오>

구분				시민의 의무	
				고 납세부여	저 납세없음
시민의 권리	고	정치적·행정적 권리	④ ◎	본 주소민과 부 주소민의 권리/의무가 동일함. 관계 법령 개선 난이도가 높고, 자치단체 간 갈등 소지가 커 긴밀한 협의 필요, 제도실의 검토 필요	X 본 주소민 대비 부 주소민이 의무 없이 권리만을 가짐. 강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적용 불가능
	중	정치적 권리	③ ○	납세의무를 지고 투표 등 정치적 권리를 인정함. 관계 법령 개선 난이도가 높으나 정치고관여층 등의 경우 높은 유인책이 될 수 있음	X 투표 등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납세의무는 지지 않음. 관계 법령 개선 난이도가 높음에 비해 행정측면 실익 없음
	저	행정적 권리	② ○	납세의무를 지고 행정적 혜택만 인정함. 1인2주소제 활용 실익을 체감하려면 납세액 이상의 행정적 권리 보장 필요	① △ 행정적 혜택은 있으나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비용편익에 따라 적은 혜택만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인구축면의 실익 불투명하나 경우에 따라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광역 지역브랜드 개발

장충희(연구위원)

왜 지역브랜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지역브랜드 활성화에 주목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광역 지역브랜드가 요구된다. 지역브랜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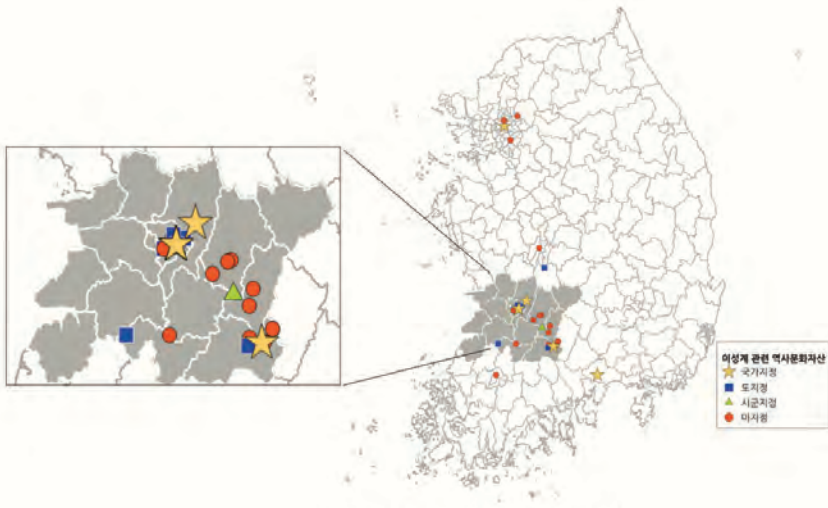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역사문화자산, 태조 이성계

-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성계 관련 유적지가 전국의 약 76%가 위치하며 그 질적인 내용 역시 타 지역과의 절대비교우위에 있다. 유적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설화의 분포 역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 중 '건국자'의 이미지를 가장 확고하게 갖춘 인물은 태조 이성계이며, 그 이미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은 전북특별자치도이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건국의 아이콘, 태조 이성계'는 광역 지역브랜드로서 그 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를 활용한 광역 지역브랜드 활성화 방안

- 비전은 “전북특별자치도, 제 2의 건국. 그리고 태조 이성계”이다. 3대 목표로 태조 이성계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지역브랜드 활성화, 태조 이성계 관련 관광 인프라 구축 및 OSMU(One-Source Multi-Use), 지속·발전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지역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설정하였다.
- 정책과제 7가지를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 랜드마크의 태조 이성계 관련 개칭, 정책과제 ② ‘뜬봉샘 - 전북특별자치도’ - K-생명경제 이미지 개발, 정책과제 ③ 태조 이성계 관련 복합문화시설 및 랜드마크 건립, 정책과제 ④ 산재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문화자산을 아우를 수 있는 연계활용방안 모색, 정책과제 ⑤ 기 확보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문화자산의 OSMU(One-Source Multi-Use), 정책과제 ⑥ 태조 이성계 전문 연구기관 확충, 정책과제 ⑦ 문화향유 후속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태조 이성계 관련 문화자산 현황(전국)>





인구감소 대응 및 콘텐츠관광 전략으로서 장소 기반 <K-실감산수 콘텐츠>거점화

장세길(선임연구위원)

- 전북 내에서 다양한 실감 콘텐츠가 개발되었고 우수한 콘텐츠도 많았지만, 용역공모방식으로 인하여 매번 새로운 민간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콘텐츠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지자체별 단타성(행사성) 용역사업으로 행사 기간 외에 실현된 실감 콘텐츠를 상설로 체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독특한 지역 장소(자연·문화유산 장소, 생태적 경관 장소, 역사적 사건 장소, 상징적 공간·시설 장소)를 기반으로, 전북의 자연경관(Landscape)과 유산(Heritage)에 실감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장소 기반 K-실감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도, 시군 유사 출연기관 또는 민관협력 사업단을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전북의 문화비전 전략(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유산의 디지털 자원화, 헤리티지·명소의 관광 활성화)을 통합 실행하는 전략으로서 전북을 헤리티지·경관과 첨단 기술 융합의 K-실감산수 콘텐츠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 (프로젝트 ①: 실감 아일랜드 선유) 고군산군도에 추진되는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발맞춰 고군산군도 일원에 첨단기술(AR 모노레일, 인터랙티브 슈퍼트리, 초대형 미디어월 등)을 접목한 해양유산 관광콘텐츠를 적용함으로써 K-실감산수 앵커로 개발한다.
- (프로젝트 ②: K-Culture LIVE PARK, 한옥마을) 한국의 역사·문화자원·경관, 창의적 활동, 한국문화 체험관광객이 집결된 전주한옥마을을 K-실감산수 콘텐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한국문화 실감 콘텐츠의 국제 관광지로 개발한다.
- (프로젝트 ③: K-유산풍경(HeritaScape) 미디어아트) 전북 내 세계유산과 14개 시군 대표 유산(자연·문화·복합유산), 지역의 독특한 경관과 스토리를 연계하여 K-실감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설 공연을 추진한다.
-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의 문화비전인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의 실현 전략으로서 K-실감산수 콘텐츠 거점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실감 아일랜드 선유>, <Live Part 한옥마을> 등의 국책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상설 공연을 위한 ‘K-실감산수콘텐츠사업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끝으로, 유산을 활용하는 실감 콘텐츠 제작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개선(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북자치도를 공동체형 햇빛·바람 로컬에너지의 중심지로!

이지훈(책임연구위원)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확산 필요성

○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지산지소: 地産地消)하는 분산에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분권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함께 소규모 발전사업을 통합한 통합가상발전소(VPP)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중심의 햇빛·바람 분산에너지의 확산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여건·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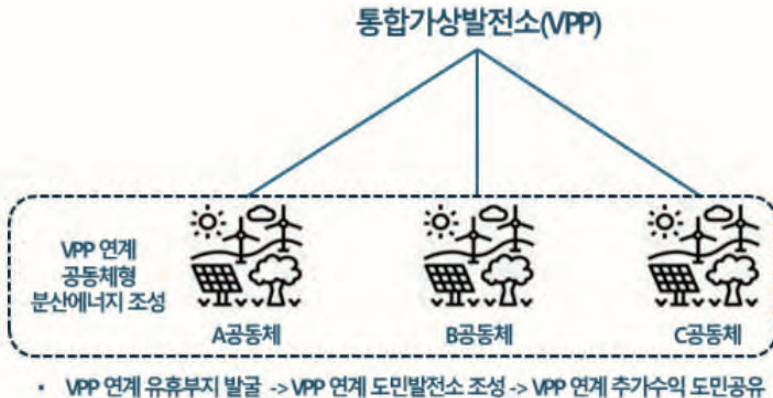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는 원전, 화력 등 전통적 에너지원 부재로 전력자립 100%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우수한 햇빛, 바람 자원과 낮은 전환비용으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분권 실현이 상대적 용이하다. 전북자치도는 협동조합 수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북자치도 내 1,000여개의 생생마을 등이 있어 공동체 결성과 운영 여건이 우수하다. 전북자치도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에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의 수익을 더하여 재정분권과 독자적 지역정책 강화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정책적 방향

○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확산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 발굴과 공동체 모집·관리, 수익환원 등에 공공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소규모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 도내 출자·출연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연동, 수요-공급 맞춤 기초지자체 주도적 농공단지형 분산에너지 모델 등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다각적 발굴이 필요하다.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하여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가상발전소(VPP) 연계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 모델(안)>





‘전고체 배터리’, 이차전지의 한계를 넘어서다.

하의현(연구위원)

- 전고체 배터리(All-Solid-State Battery)는 전지의 주요 요소가 모두 고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지 형태를 지칭하며, 안정성 향상, 공간 활용도 등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유기계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이차전지와 달리 발화/폭발 현상이 거의 없고 분리막과 냉각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와 에너지 밀도 향상에 유리하며, 전기 안정성을 위한 부품, 소재 적용이 줄어들어 소형화가 가능하다.
-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20년 6,160만 달러에서 2027년 4억 8,250만 달러로 연평균 34.2%, 국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20년 292만 달러에서 2027년 3,229만 달러로 연평균 4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차전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기업 유치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역량 기반을 확보하였고 LQ지수는 2.65, NOHI는 0.0497로 나타나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정책 제언: R&D) ① 핵심 수요시장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R&D 추진, ② 제조기술 및 핵심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과제 선정 및 지원, ③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 (정책 제언: 생태계 확장) 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②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③ 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현장형 인력 공급 체계 구축, ④ 초광역 프로젝트 발굴 등 지역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 (정책 제언: 기반 확대) 초격차 기술확보와 글로벌·초광역 연계 인재양성, 기업지원 협업 플랫폼 등을 위한 핵심 기관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대학 현황>

대학명	관련학과	계	학부생	대학원		비고
				석사	박사	
	계	1,266	1,116	85	65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170	170	-	-	전자재료공학
	에너지저장·변환공학과	30	-	14	16	대학원
	전자정보재료공학과	22	-	10	12	대학원
군산대	기계공학부	101	101	-	-	기계설계공학
	기계공학부	108	108	-	-	자동차공학
	기계공학과	43	-	27	16	대학원
원광대	화학융합공학과	198	198	-	-	
	탄소융합공학과	126	126	-	-	
	스마트자동차공학과	159	159	-	-	
	화학공학과	6	-	6	-	대학원
전주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141	141	-	-	
	탄소융합공학과	46	-	26	20	대학원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69	66	2	1	학부, 대학원
호원대	미래자동차공학과	35	35	-	-	
전주비전대	탄소융합기계과	12	12	-	-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조원지(책임연구위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95% 이상이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하다.
-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농업’을 주목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기상재해, 대기오염, 기온변화 등 기후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인의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적다. 장시간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업인은 기후와 직결되는 농사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단기간(열사병)부터 장기간(정신건강문제)에 걸쳐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미흡하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3년 6월 16일 제정·시행하였다. 전북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개인 건강을 위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관련 법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군, 지역 등에서 개인의 건강을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실외에서 장기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인이 기후위기와 기후변화가 농업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적

응을 위한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기후건강 리터러시(climate health literacy) 증진이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건강리터러시와 리터러시가 낮은 농업인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과 건강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와 과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구성, 연구, 데이터 구축, 사업발굴 등을 위한 전문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 농촌의 정책발굴 및 마련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성 질환(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수칙 홍보, 기후보건 교육 체계 구축, 기후변화성 질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업군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건강에서 질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생활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 개선방안

조원지(책임연구위원)

-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여 생활·관계인구와 귀농·귀촌인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농촌인구유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인구정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하다. 농촌인구정책은 도시민(생활·관계인구,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을 포함하여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민의 경우, ‘관심→탐색→정착(실행→정착)→통합’, 외국인은 ‘이주→적응→정착→통합’ 단계에 맞게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귀농·귀촌정책에 중점을 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유입정책은 생활·관계인구 유치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수 외국인재, 동포가족 등을 정주인구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특례 비자 등이 신설되면서 인구유입정책 대상은 외국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절근로자(E-8)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의 유입이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8, E-9)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구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지역의 주민(생활·관계인구, 정주인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인구정책은 도시민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농촌으로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정책이 세심하게 발굴·추진되어야 한다.
- 도시민 대상 농촌인구정책은 ‘생활·관계인구정책’과 ‘귀농·귀촌정책’으로 구분하여 생활·관계인구정책은 도시민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역과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역 활동과 교류를 통해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이어야 한다. 귀농·귀촌정책은 (예비)귀농·귀촌인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어야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 건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정책’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의 외국인 생활·관계인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지역과 농업에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계절근로자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에서 작물재배업과 함께 관련 산업 분야의 기능숙련인력(E-7)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 도시민 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실행→정착지원)’, ‘통합(사후관리)’, 외국인 정책은 ‘이주’, ‘적응’, ‘정착’, ‘통합’ 4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해 이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생활·관계인구 또는 정주인구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도시민 정책의 예로 1) 농촌지역의 대표 농업·농촌자원을 첨단기술에 접목하여 도시민이 농촌생활을 스마트하게 체험·관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2) 농촌지역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인공지능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웨이케이션 마을 구축, 3) 생활·관계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주택 및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외국인 정책의 경우, 1) 결혼이주여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농업 관련 학과의 다문화특별전형이 운영되고, 2) 농업에 종사하는 도내 성실 외국인 근로자(E-9)가 도지사 인증 ‘외국인 근로자 일학습병행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전북자치도 농촌지역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R)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이주연(책임연구위원)

합계출산율의 이해와 주요 영향 요인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전망치)'이다. 합계출산율 증감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인구와 연령구조, 출생아 수(조율), 혼인건수(조혼인율), 미혼율·유배우자율,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과 출산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자치도, 대도시화되는 결혼과 출생 경향

- '23년 전북 합계출산율은 0.78명(전국11위, 출생아수 6,625명)이며, '18년 1.1명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고, 울산·대전·광주 등 대도시 수준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15년 출생아수가 1만 5천 명 이하를 기록하면서 '16년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하며 본격적인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되었다. 초저생률과 조혼인율은 부산·경남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 첫째, 만혼화로 인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의 감소이다. 둘째, 타 지역과 유사한 전북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 대비 30~34세 연령의 낮은 인구비율과 높은 미혼율이다. 셋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도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 폭은 오히려 큰 변화가 없어 전국단위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가임연령대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중 특히 25~29세 비율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30~34세 무자녀 증가 비율도 높게 나타나, 전북 합계출산율 저조는 가임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출산 지연으로 논의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과제

- 첫째, 합계출산율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2030대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가임연령 여성의 미혼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기에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하고 함께 타지역 대비 주출산연령대(30~34세)의 미혼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30~34세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필요하다. 셋째, 주출산연령(30~34세) 여성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가족 이주 도모 정책 발굴 및 추가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정책 강화와 다자녀가구 채용목표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연계 등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차별화 필요하다. 넷째, 전북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타지역 대비 낮고, 특히 주출산 연령대인 30~34세의 출산율이 매우 낮기에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30~34세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 및 직장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 등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친화적인 지역만들기 정책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활용한 2030대 우수한 외국인력 유입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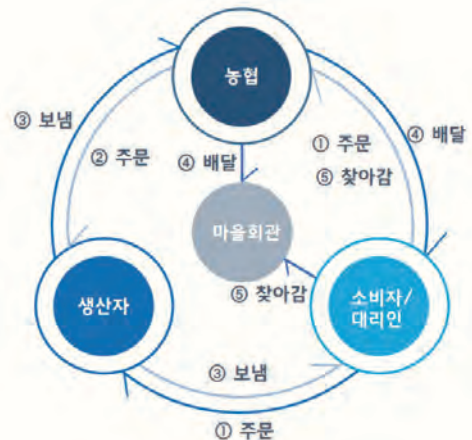
농촌지역 ‘식품사막화(Food Desert)’의 의미와 과제

조원지(책임연구위원)

- 농촌지역의 신선식품 공급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적 약자의 집중으로 농촌의 식품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식품사막으로 주민들은 영양불균형에 노출되어 질병에 취약해지고, 이들의 먹거리 기본권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 시도 중 농촌의 식품사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식품사막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식품 환경을 살펴보고, 식품사막에 대응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오프라인 식료품점에서 식료를 구입하는 주기가 다소 길었으며,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 주민의 식료품 구입 장소는 대형할인점, 동네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이었다. 이들 결과를 통해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농촌 식품사막은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등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식품사막 지역은 소득수준이 낮거나, 대중교통 시스템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사막은 개인의 영양 불균형에 따른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 구입에 따른 교통비나 시간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농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 캐나다는 Revised Northern Food Basket, 미국은 Food Hub와 볼티모어 Health Food Priority Areas, 호주는 Outback Stores, 영광군 묘량면은 동락점빵을 통해 식품사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1) 농촌지역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유통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관리, 영양교육, 생활

돌봄 등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 식품사막 지도 제작을 제안하였다. 2) 주민이 운영주체가 되어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동조합 식료품점을 운영해야 한다. 3) 노인을 위한 권장 영양소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식료품 바구니를 제공한다. 4) 취약계층의 식료품 공급뿐만 아니라 생활돌봄이 가능한 농촌형 식품 물류·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5) 식품사막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식품사막화 지수를 제안한다. ‘식품’과 ‘식품사막’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농촌지역에서 주민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정책적 논의에서 용어 활용에 대한 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농촌형 식품 물류·유통시스템 구축(예시)>





그린암모니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열쇠

나정호(책임연구위원)

그린암모니아산업의 개념과 범위

- 그린암모니아(Green NH₃)는 생성 과정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수소에너지 확보와 유통을 쉽게 하는 화합물이다. 그린 암모니아산업은 그린암모니아 생산·유통과 이를 활용하여 그린수소, 연료전지, 스마트팜, 콜드체인산업, 농생명 산업 등 파생 산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린암모니아산업은 탄소중립 2050시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 산업패러다임 전환 대응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가 되면 좋은 점

-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미래산업 트렌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자치권을 활용하여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 도약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RE100, 탄소국경세 도입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할 수 있으며, 그린 암모니아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주력산업 기반 선점과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다.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선순환 효과가 있다. 산업 전 영역의 무탄소 인증을 통한 다양한 산업군

의 앵커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믹스 중요 원천인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수입, 보관, 공급하는 거점으로서 국가의 에너지 안보 거점으로 도약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 추진 전략과 과제

- 이 글에서는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 추진 전략을 그린암모니아 수입단계 → 생산·수입 Mix단계 → 자립단계 등 3단계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1단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그린암모니아 수입) 그린암모니아산업 검토와 육성방안을 기획하는 그린암모니아산업생태계 도입기에 해당된다. (2단계: 그린암모니아 생산과 수입 병행) 제1단계에 국내 생산 시설이 추가되며 그린암모니아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관련 산업 생태계가 성장하는 단계이다. (3단계: 에너지 자립) 대한민국 에너지믹스상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족하고, 그린암모니아산업이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그린암모니아산업과 경제성 분석, 전북특별자치도 주도 그린 암모니아산업생태계 TF 운영, 그린암모니아산업생태계 앵커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 단계별 추진 전략 제안>





지역인구감소의 새로운 대응전략, 장소기반산업(Place-Based Industry)

김동영(책임연구위원)

장소기반산업의 개념

○ **장소기반산업은 지역마다 차별화된 장소의 독창성과 고유성에 창의성이 결합되어 지역마다 차별화된 장소성을 기반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장소에 기반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가치가 배가되고, 떨어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속성이 있다. 장소기반산업을 결정짓는 장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생활양식을 만드는 주체로서 사람, 사람이 만들어낸 장소의 의미화된 실체로써 공간, 지역적 소재와 생산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에 기반 한 사람, 공간,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독창성, 고유성, 창의성에 의해 장소와 장소 기반산업의 차별성이 결정된다.

인구감소시대 장소기반산업의 의미

○ 지금까지의 산업발전은 생산과 소비가 장소 이동성이 높을수록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장소의 이동성이 높은 기존 산업은 생산수단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자본, 기술, 인력 등을 끌어들이어 일극 인구집중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장소이동을 최대한 낮춘 지역별 차별화된 장소기반산업이 필요하다.

○ 장소의 매력력이 높을수록 일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트렌드와 장소기반산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찾고자 하는 창의적 인력 및 장소기반 소비와 체험을 원하는 생활인구 등으로 인해 장소기반산업은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지역 인구활력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형 장소기반산업 육성방안

- 장소기반산업은 크게 식품, 의류, 건축, 공예 등의 장소기반 제조, 게임, 영상, 캐릭터, 출판 등의 장소기반

콘텐츠, 관광, 치유, 축제, 레저, 교육 등 장소기반 체험 산업으로 구분된다. 전북형 장소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장소성을 브랜드로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 컨설팅 지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한 시범사업과 성공모델 구축, 장소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와 법 제정으로 국가에 산화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소기반산업 육성분야>





농생명분야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전략 및 운영 방안

조원지(책임연구위원)

농업 분야 지역특화비자의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로 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농업 연관산업 인력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정주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비자사업(지역우수인재, F-2-R)이 추진되었다. 지역특화비자사업 대상과 농촌의 산업구조 특성으로 농촌지역에서 현재 지역특화비자사업의 실효성이 낮다. 농업과 연관산업의 인력난과 농촌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농업·농촌인력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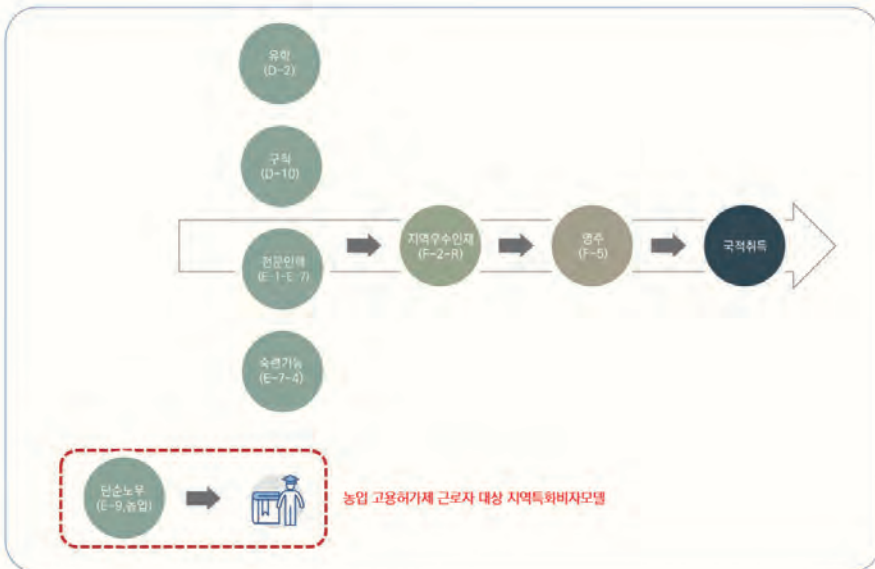
농업 고용허가제 근로자 대상 지역특화비자모델 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업·농촌 연관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농업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교육 및 훈련기관을 운영하여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전북자치도 농촌지역의 농업·농촌 연관산업에서 취·창업 시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F-2-R) 취득이 가능하다. 농업 고용허가제(E-9) 근로자는 광역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농산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다.

농업 고용허가제 근로자 대상 지역특화비자 기대효과

- 농업 지역특화비자(지역우수인재, F-2-R)로 농업 분야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인력 유치와 가족 정착으로 농촌 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천정윤(연구위원)

- 세계적인 산업화와 도시성장 가속화로 산림·습지 등 자연공간이 감소하면서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도시화율이 증가하면서(2020년 92%)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지난 30여 년간 2~3배 증가한 반면 산림과 농경지역은 감소했다. 전북 지역도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생태·환경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 이에 최근 국제사회는 훼손된 생태·환경자산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회복하는 구체적인 생태환경 복원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토록 요청하고 있다. UN은 「생태계 복원 10개년(2021~2030)」을 통해 10년간 생태복원에 집중할 것을 천명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CBD)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복원을 제시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Nature-Positive”달성을 위해 자연을 회복하고 양(+)의 상태로 되돌려 지구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녹색복원” 개념을 도입하고 산림·해양·습지·정주지 생태복원사업 확대와 생태복원지역의 자연공존지역(OECM)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선진 외국은 녹색복원을 통해 생태계 회복과 생태관광,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9백만㎡ 쓰레기 매립장인 프레스 힐스를 복원하여 생태과학과 예술 프로젝트를 개최하는 곳으로 변모시켰다. 영국 에넌 프로젝트도 폐 채석장을 식물원과 공원으로 바꾸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네덜란드 오스트바르더스플라센은 1960년대 조성된 간척지를 시민제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야생동물이 뛰노는 초지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관광에 기여하고 있다.
- 전북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연의 보전·복원과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복원사업은 환경부 국가에 산 보조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작고, 생태환경 복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전북의 생태환경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고, 생태계 연결성 향상과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녹색복원은 협의의 생태복원을 넘어 광의의 녹색복원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태환경 복원, 생태경제 창출, 지역사회 회복을 목표로 두고자 한다. 추진과제로는 소규모 마을단위의 점적 복원, 지역간 연계를 위한 선적 복원, 대규모의 광역적이고 융합적인 복합 사업을 위한 면적 복원의 과제를 제안한다. 특별히 익산 왕궁처럼 대규모 생태훼손지 복원을 통해 연속생태계 복원과 생태경제 창출, 지역사회 참여의 시너지 효과가 큰 곳을 선도와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녹색복원 지원예산의 확대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간 유형과 복원 형태에 따른 녹색복원 추진과제 제안>

공간 유형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점적 복원 (소규모)	- 생물권 생태공원 조성(거점녹지) - 생태성 조성(연결성 증진) - 택식산 복원(익산시, 남원시 등)	- 동량 복원(중부평야권) - 연안습지 복원(서부연안권) - 고산습지 복원(동부산악권) - 수변생태벨트 조성(만경강·홍천강·성진강·금강)
선적 복원 (중규모)	- 가로수 조성 - 미세먼지 차단용, 기후변화대응용 조성 - 생태축(생태통로) 복원 - 그린웨이 조성(미 녹지)	- 자연형 하천 복원(하천축) - 광역생태축 연결·복원(산원·하천)
면적 복원 (대규모)	대규모 녹색복원(연속생태계복원)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복원
기반조성 및 활성화	(기초자료) 전북자치도 광역 생태·환경자산 지도구축 (연구·교육) 자연환경복원연구센터 조성·운영 (주민참여) 생태복원 및 생태보전, 생태관광분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경제) 생태관광, 생태교육, 생태역거리, 생태군조 개발 (기업참여) ESG 민간기업 참여 기반 생태복원사업 추진 (국제인증)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자연공존지역(OECM) 지정 (홍보행사) 국제 녹색복원 컨퍼런스 및 엑스포 개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전환

은성태(연구위원)

기후플레이션의 개념 및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예측되지 않는 기상현상은 이상기후를 일으키고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에 변동성을 일으킨다. 농산물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변칙적인 기후는 생산량에 관한 불균형성과 소비시장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 2024년 여름 전북자치도 평균최고기온이 31.1에서 34.0℃로 상승했으며 지역의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3.5% 상승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확산과 식품 소비 행태변화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은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식품산업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시킨다. 대체식품과 친환경 푸드테크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 생산·가공 방식 개선과 효율적인 제조 기반 조성 및 친환경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주요 목적이다.

식품 소비 행태변화에 따른 저탄소 식품의 연구개발

- 대체식품은 단백질 공급의 수단을 식물, 곤충, 해조류, 미생물과 인공적인 배양육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기존의 동물성 원료를 통한 단백질 공급을 대체 원료를 통해 신체에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이다. 과학기술(AI·ICT·IoT 등)을 적용하여 동물성 원료 식품의 소비적 특징을 모방한 식품을 개발한다.

기후플레이션에 직면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발전 전략

-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 적합 작물의 발굴과 지역 선정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통한 적합 작물 발굴과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농식품 제조에 수요 되는 원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도와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비축 시설의 현대화 과정을 거쳐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종사자 규모별 식품 제조 사업체수(10인 이상)>

연도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전국	합계	4173	4374	4721	5014	5220	5345	5527
	10~19	1900	2032	2244	2301	2521	2471	2672
	20~49	1478	1543	1642	1802	1776	1939	1911
	50~99	482	487	518	559	566	581	585
	100~499	300	298	301	333	339	333	339
	500+	13	14	16	19	18	21	20
전북	합계	265	282	304	315	337	343	361
	10~19	122	129	135	134	153	144	151
	20~49	87	89	99	108	111	124	135
	50~99	24	30	36	38	38	40	39
	100~499	31	32	32	30	31	32	32
	500+	1	2	2	5	4	3	4



농촌소멸대응, 마을단위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시작점

임승현(선임연구위원)

- 지방소멸에 이어 농촌소멸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과소·고령화로 인한 농촌마을 소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무관심 속에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20여 년간의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마을은 해가 갈수록 더욱 과소·고령화되고 마을에서 유소년과 출산기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실태는 “50인 미만 소형마을”의 수가 ‘00년 686개에서 ‘22년 1,601개로 약 2.3배이상(133.4%) 증가했고, “유소년이 없는 마을” 215개에서 1,094개로 약 5배가량 폭증하고, “출산기 여성이 없는 마을”은 583개에서 799개로 1.5배 증가했지만 고령화는 “고령화 비율 50% 이상 한계마을”이 69개(1.3%)에서 1,328개(25.7%)로 약 19배로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소멸 방지대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과 현상 유지도 어려운 농촌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는 국경 과제이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 농촌공간 대전환을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이라는 야심찬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농촌을 숲의 시야에서만 접근하고 숲속의 나무라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실상에 대한 세세한 접근이 없다」면 기존 정책 이상의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농촌마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북 농촌의 대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 공간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비지원으로 시·군이 구축한 행정통반 경계지도인 기초행정구역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농촌마을 공간빅데이터의 기본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도시지역의 행정통반의 공간빅데이터도 함께 구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문제 해결에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 농촌마을의 인구 및 가구 변화율>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김수은(책임연구위원)

검토배경

- 최근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고용안정망 강화, 스마트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워라벨 일터 지원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는 청년 인구 이동의 주요 원인이며, 청년의 구직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는 우선 고려 사항이다. 이 이슈브리핑에서는 전북지역 내 좋은 일자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전북자치도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좋은 일자리 현황

- 전북지역 일자리 중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을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수는 2023년 기준 157,182개로 도내 전체 일자리 수 중 16.4%를 차지하였다. 도내 좋은 일자리는 2013년(93,325개) 대비 63,857개 증가한 가운데, 전주에서 지난 10년간 좋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 측면에서의 좋은 일자리 수는 2023년 447,769개로 전체 일자리 중 46.7%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측면의 좋은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 중 52.0%인 499,312개로 나타났다. 2023년 근로시간 측면의 좋은 일자리는 2023년 기준 623,053개로 도내 전체 일자리 중 64.9%를 차지하였다.

전북자치도 정책적 방향

- ‘지역고용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민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와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 종합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실시, 기업-구직자간 좋은 일자리 중개, 고용서비스기관 네트워크,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 및 좋은 일자리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필요하다.

<시군별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

구분	2013년			2023년			지난 10년간 변화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 (A)	전북 전체 대비 비중 (B)	지자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C)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 (D)	전북 전체 대비 비중 (E)	지자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F)	일자리 수 증감 (D-A)	전북 전체 대비 비중 (E-B)	지자체 대비 비중 (F-C)
전주	102,951	24.7	35.1	160,908	32.2	47.8	57,957	7.5	12.7
군산	47,869	11.5	38.2	65,627	13.1	49.4	17,758	1.6	11.2
익산	67,269	16.2	48.1	68,642	13.7	46.8	1,373	-2.5	-1.3
정읍	31,300	7.5	55.6	33,534	6.7	56.2	2,234	-0.8	0.6
남원	25,210	6.1	57.3	24,530	4.9	56.4	-680	-1.2	-0.9
김제	28,844	6.9	60.8	27,710	5.5	58.5	-1,134	-1.4	-2.3
완주	23,940	5.8	56.8	30,969	6.2	54.0	7,030	0.4	-2.8
진안	9,455	2.3	67.8	9,324	1.9	62.9	-131	-0.4	-4.9
무주	9,879	2.4	68.3	8,312	1.7	56.2	-1,567	-0.7	-12.1
장수	8,669	2.1	59.9	6,986	1.4	49.9	-1,683	-0.7	-10.0
임실	10,535	2.5	70.9	9,241	1.9	62.6	-1,294	-0.6	-8.3
순창	10,590	2.5	70.5	11,317	2.3	72.5	728	-0.2	2.0
고창	21,787	5.2	69.7	22,545	4.5	71.5	758	-0.7	1.8
부안	17,934	4.3	57.8	19,666	3.9	64.9	1,732	-0.4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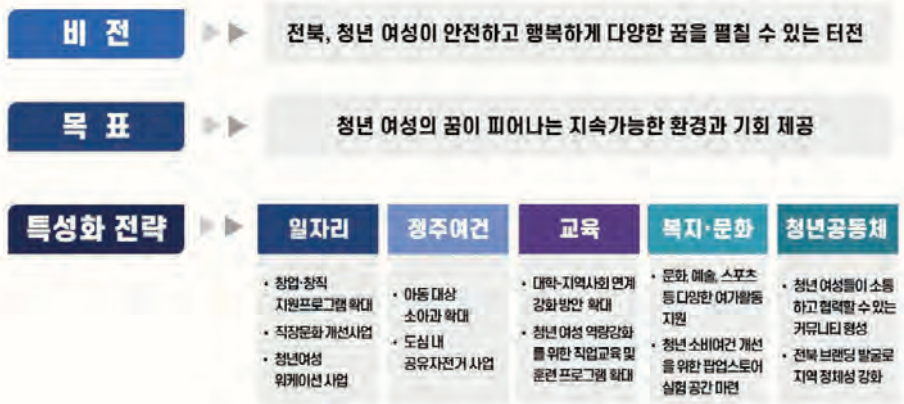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전희진(책임연구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 문제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청년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정주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지역 브랜딩, 커뮤니티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 전북의 청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감소폭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청년 인구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 여성은 주로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청년들의 유출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 청년 여성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대학 진학, 지역 내 일자리 경쟁력 부족, 성장 기회의 제한 등이 지적되었다. 전북의 정주 여건은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대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낮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청년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일자리와 창업 지원: 창업 및 창직(創職)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직장문화 개선, 청년 여성 위케이션 사업 도입. 2. 정주 여건 개선: 주거 지원 강화, 대중교통 불편 해소, 아동 대상 소아과 서비스 확충. 3. 교육 및 역량 강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4. 복지·문화 지원: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5. 청년공동체 활성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브랜딩 전략 추진
-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전북은 청년 여성들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 청년여성유입 및 정주 확대를 위한 비전, 목표 및 특성화전략>



II

2024년,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1. 연구 활동

백년포럼 / 조인트 세미나 / 국책사업 및 총선공약 발굴 / 세미나 / 포럼

2. 지원 활동

도정 지원 및 협력 / 시·군 정책선도 및 지원 / 권역별 정책세미나 / 시·군 정책과제

3. 출판 활동

학술지「전북학연구」/ 2024 전북학총서

4. 언론에 비친 전북연구원

1

연구 활동

백년포럼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분야별로 초청하여 전북의 백년을 디자인하고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정책의제 발굴

개 최 : 총 21회 (월 2회/5~6월, 월 3회/7월~12월)

장소/시간 :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4층) 08:00~09:30

주최/주관 : 전북특별자치도·전북연구원·전주상공회의소

구분	일시	주제	강사
제1강	05.14	전북 동포(고려인)마을, 왜 그리고 어떻게?	임영상
제2강	05.21	기후변화 및 탄소 시대의 해양생태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정해진
제3강	06.11	세계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지역인재 해외진출 전략	이장섭
제4강	06.21	언어와 정치	임귀열
제5강	07.04	밥·일·꿈: 4차원 경영	장명국
제6강	07.16	바이오헬스 산업의 오늘과 내일	이정석
제7강	07.30	국방연구개발의 현재와 미래	김태곤
제8강	08.06	제약바이오산업 현황과 클러스터 조성 전략	정진현
제9강	08.13	K-방산의 발전방향	이건혁
제10강	08.27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의 3가지 문양	박재희
제11강	09.03	다가온 AGI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은?	맹성현
제12강	09.10	나다운 삶-before I die	권대욱
제13강	09.24	저출산·고령화의 정치경제학	김준기
제14강	10.08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정책 및 시사점	김숙경
제15강	10.15	교육과 인재의 힘으로 도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만들기	배상훈
제16강	10.29	기본사회와 지역사회	이한주
제17강	11.05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	정세현
제18강	11.12	미중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	임혁백
제19강	12.03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 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	이광수
제20강	12.10	헴프(Hemp) 경제 구축의 시대적 필요성:전북자치도의 전략은?	김명자
제21강	12.24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전북자치도의 전략	이양구



조인트 세미나

도정을 선도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초빙하여 연구과제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동포(고려인)마을 조성 방안



일시/장소
2024.5.14. / 전북연구원

전문가 임영상 교수

참석자
도 대외협력과, 전북연구원 등

내용
전북 동포(고려인)마을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 탐색 등

새만금 SMGold Eco-Bio Project



일시/장소
2024.6.14. / 전북연구원

전문가 정해진 교수

참석자
군산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도 새만금수질개선포럼, 도 해양항만과, 전북연구원 등

내용
야광충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 야간관광 활성화, 새만금 수질개선 등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헵프) 산업 발전 전략



일시/장소
2024.6.20. / 전주대학교

전문가 박상혁 교수

참석자
전북대학교 병원, 전북대, 도 탄소바이오산업과, 도 농생명식품과, 도 보건의료과, 전북연구원 등

내용
대마(헵프)의 의학적 효능과 미래 가치, 의료용 대마(헵프) 활용과 전북 의생명산업 육성 등

언어와 정치, 전북 정치



일시/장소
2024.6.21. / 전북연구원

전문가 임귀열 교수

참석자
언론(전북일보 등), 전북대, 전북연구원 등

내용
정치에서의 언어의 효용성, 전북 현안 해결 및 정책 제언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언어 사용법 등

전북자치도 국방연구개발의 발전 방안



일시/장소
2024.7.30. / 전북연구원

전문가 김태곤 단장

참석자
전북대, 방위사업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소, 도 바이오방위산업과, 전북연구원 등

내용
국방연구개발 관련 국가사업 발굴 및 사업구체화 실현 방안, 전북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방안 등

전북자치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일시/장소
2024.8.6. / 전북연구원

전문가 정진현 교수

참석자

전북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도 바이오방위산업과, 전북연구원 등

내용

제약바이오 브랜드 선포, 바이오산업 범위 확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바이오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 앵커기업 유치,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등

전북자치도 AGI(인공지능) 시대 대응 방안



일시/장소
2024.9.3. / 전북연구원

전문가 맹성현 교수

참석자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내용

인간과 AI 공존 방안, 교육현장에서 AI 활용 방안 및 교사 양성 필요성, 공공기관에서 AI 적용과 수용성, AI 활용 윤리 등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전북자치도의 역할



일시/장소
2024.10.2. / 전북연구원

전문가 전광호 교수, 이철원 선임연구원

참석자

전주대, 상명대, 前 우크라이나 대사, 전북 국제협력진흥원, 전북연구원 등

내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한국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전북자치도의 역할 등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안



일시/장소
2024.10.8. / 전북연구원

전문가 김숙경 선임연구위원

참석자

전북대학교, 도 고령친화정책과, 전북연구원 등

내용

실버경제, 첨단기술(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등

전북자치도 방위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략 논의



일시/장소
2024.11.26. / 전주시 스타온 비즈센터 3층 대회의실

전문가 장원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남세규(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참석자

전북도 방위산업팀, 조선항공산업팀, 김제시, 전북연구원 등

내용

전북 핵심산업 연계(방산특장차), 트럼프 2.0 시대와 한국 방위산업 등

국책사업 및 총선공약 발굴

운영 개요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을 기반으로 정부정책과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한 국책사업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 및 성장 도모

- 총사업비 : 1,000억 원 이상 7건, 500 ~ 1,000억 미만 : 7건, 500억 미만 : 16건

분과 구성 : 10개 분과

- ①기업유치 ②미래첨단산업 ③농생명 ④문화체육관광 ⑤건설교통 ⑥새만금해양수산 ⑦도민안전 ⑧환경산림 ⑨복지 ⑩교육·외국인

중점 분야

미래 신산업, 산업체질개선, 균형발전 등 중장기 미래발전을 선도할 규모 사업 발굴

운영 기간

2024년 6월 ~ 11월 (6개월)

추진 상황

2024 국책사업발굴 추진단 구성	: 6월
kick오프회의	: 7월
도·시군 사업아이템 발굴 및 분과별 시군 제안 사업 검토	: 8월
중간보고회	: 10월
사업내용 구체화 및 논리 개발	: 11~12월
최종보고	: 12월

운영 체계 및 절차

운영 체계

도 실·국장이 해당 분과 위원장, 도 과장 및 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분과별 전문가 등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하여 아이템 발굴 및 사업내용 구체화

추진 절차

아이템 발굴 → 전문가 합동간담회 → 분과별 구체화 → 최종선정 → 사후관리

운영 체계

도 실·국장이 해당 분과 위원장, 도 과장 및 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분과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아이템 발굴 및 사업내용 구체화

추진 절차

분과위원회 구성 → 아젠다 발굴 → 아젠다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논리개발 등 세부사업 내용 구체화

발굴 국책사업(24.12월 기준) : 30건

분과명	사업명	사업비(억원)				
		전체	국비	지방비	시군비	기타
총계	30건	25,202.5	14,693.75	2,250.5	3,928.25	4,330
기업유치 분과 (2개)	국립 경제·금융교육 연수원 건립	650	350	300	-	-
	연금대체투자 연구센터 건립	250	200	50	-	-
미래 첨단 산업 분과 (6개)	나노신소재혁신의료기기 탁월성 연구소 구축 사업	150	90	30	30	-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지원 통합인프라 구축	500	300	200	-	-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500	350	75	75	-
	반도체공동 연구소 연계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구축	1,000	600	400	-	-
	첨단 특수목적기반 보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구축	827.5	605.25	140	82.25	-
	농업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	400	200	60	140	-
농생명 분과 (3개)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300	150	75	75	-
	첨단 영양류 생명연구자원 보존·연구 인프라 구축	300	150	36	84	30
	식품 숙성 데이터 디지털전환(DX) 기반 농생명산업 생태계 구축	115	57.5	57.5	-	-
문화체육 관광분과 (3개)	중부권 新관광관광개발사업 : 중부권 K-치유관광벨트 구축	5,000	2,500	-	2,500	-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	335	335	-	-	-
	K-디지털치료 클러스터 조성	2,510	1,510	500	500	-
건설교통 분과 (1개)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5,000	2,000	-	-	3,000
새만금 해양 수산 분과 (4개)	새만금 유통물류 복합비즈니스 지구 조성	1,300	300	60	140	800
	갯벌식물 아쿠아팜 조성	1,000	300	60	140	500
	디지털트윈 안전항만 기술개발	300	300	-	-	-
	트라이포트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 개발	500	500	-	-	-
도민안전 분과 (2개)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실증 시범사업	300	230	50	20	-
	레이저 센서 기반 내수침수 예측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300	250	30	20	-
환경 산림 분과 (3개)	군산분지 CCS허브 구축사업	1,000	1,000	-	-	-
	산업단지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300	300	-	-	-
	시민공유형 탄소 넷플러스 정원모델 조성사업	50	50	-	-	-
복지 분과 (3개)	호남권역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	250	250	-	-	-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	500	500	-	-	-
	보훈전문재활센터 및 마음치유센터 유치	300	300	-	-	-
교육·외국인 분과 (3개)	호남권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센터 구축사업	500	251	127	122	-
	서부권 해양환경교육원 설립	300	300	-	-	-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유치	465	465	-	-	-

세미나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총 17회





전북연구원-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조사사업 세미나

2023년 공동조사사업 추진결과 발표 및 자료 공유, 지역 환경 현안문제 의 건교환, 향후 연구계획 공유, 기타 의견제시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일시/장소 2024.1.24.(수) /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참석 전북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등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전문가 세미나

‘목재사용의 탄소중립 효과와 대규모 목조 건축물 조성 방안’ 전문가 세미나 및 자유토론 등

일시/장소 2024.4.1.(월) /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참석 전문가 및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정책 포럼

소상공인 정책방향 전환과 과제 관련 발제 및 지정토론 등

일시/장소 2024.4.25.(목)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

참석 학계·민간·연구기관 등 소상공인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전북 신재생에너지 공유와 기금 세미나

전북특별법의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특례 제도 시행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특례 실행 추진력 제고를 위한 발제 및 토론 등

일시/장소 2024.6.19.(수) /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참석 전문가,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 담당자, 전북연구원 등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재정분야

전북자치도와 강원자치도 간 MOU 체결과 더불어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 간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 개최

일시/장소 2024.6.19.(수)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참석 국회의원, 전문가,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헵프)
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전북자치도의 의생명산업 경쟁력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의료용 대마(헵프)
산업 발전 전략 관련 전문가 발제 및 토론 등

일시/장소 2024.6.20.(목) / 전주대학교 본관 회의실

참석 전문가, 전북자치도 담당자, 전북연구원 등

임진왜란 재조명, 무민공 황진 장군
학술 심포지엄

임진왜란 황진 장군, 역사 재조명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발제 및
종합토론 등

일시/장소 2024.6.26.(수)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

참석 전문가, 전북자치도 및 도의회, 전북연구원, 일반인 등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서 실천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발
제 및 지정토론 등

일시/장소 2024.8.27.(화) /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

참석 전북자치도 및 도의회,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도 제고와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일시/장소 2024.9.11.(수)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

참석 전북자치도 및 도의회, 전북자치도체육회, 14개 시군 체육회 등

태조 이성계 국회정책포럼

조선 문화와 정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를 선점하여 전북의 대표 문화관광
사업화 방향 모색

일시/장소 2024.9.13.(금)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참석 전북자치도, 전주시, 학회·단체, 종친회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

프로스포츠클럽 유치 필요성 검토, 구단과 연고지 간의 역할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일시/장소 2024.9.26.(목)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

참석 전북자치도, 전북도의회, 전주대학교 등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헵프)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움

전북자치도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현황과 산업 발전 전략,
의료용 대마 신제품 개발과 효능 관련 전문가 발제 및 종합토론 진행

일시/장소 2024.10.15.(화) / 전북자치도, 전북대,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등

참석 전문가, 전북자치도 담당자, 전북연구원 등

2024년 새만금 정책포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방안 논의

일시/장소 2024.11.1.(금) / 컨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

참석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연구원-전북개발공사 정책세미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모색

일시/장소 2024.11.7.(목) /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참석 전북연구원, 전북개발공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포럼

전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를 위한 전문가 발제 및 지정 토론 실시

일시/장소 2024.11.19.(화) /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참석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

2024 전북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전북의 역할 논의

일시/장소 2024.12.10.(화) /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참석 전주대,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KIST 등

의료용 대마(헵프) 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움

의료용 대마(헵프) 산업 육성전략, 대마품종 개발전략 등의 전문가 논의

일시/장소 2024.12.20.(금)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

참석 전북자치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학교,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등



포럼

제1회 Jeonbuk State Forum

- 개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방안 모색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내외 홍보 및 명품 포럼으로 육성
- 일시/장소

2024.6.25. / 원광대학교
- 참석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의회, 익산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내외 전문가, 농생명산업 관련 대표, 외신기자, 도민, 전북연구원 등
-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및 주요 특례 중심 실현방안 모색



구분		시간	내용
6.24.(월) 리셉션		18:00~20:00	- 환영 리셉션
6.25.(화) 본행사	환담	09:30~10:00	- 도착 및 내빈환담
	개회	10:00~11:00	- 개회,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1부	11:00~12:30	- (특별·기조연설)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과제 등 - (라운드테이블)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 모색
	휴식	12:30~14:00	- 식사 및 휴식
	2부	14:00~15:50	- (세션 I) 농식품 Value Chain 혁신 (메인홀) - (세션 II)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 (세미나룸)
	폐회	15:50~16:00	- 성과공유 및 폐회
6.26.(수) 연계행사		09:00~18:00	- 도내 산업 현장 방문
		09:00~12:30	- 국외연사 후속 미니세미나

본행사 1부	(특별·기조연설)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과제	이탈리아 FAO 혁신국장 (빈센트 장 마틴)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 교수 (칼리더스 세트) 하림그룹 회장 (김홍국)
	① (특별연설1)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과제 ② (특별연설2) 지역발전의 성장엔진, 농생명산업 혁신방향 ③ (기조연설) 글로벌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특별자치도	
	(라운드테이블)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 모색	도지사, 특별·기조연사자 3, 농어업농어촌특별비 위원장, 익산시장, 전북연구원장, 좌장(신동화)
	① 농생명산업 혁신에 맞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 모색 ② 지속가능한 농업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본행사 2부	(세션 I) 농식품 Value Chain 혁신	네덜란드 바헤닝헌대학교수 (안 베르하겐) 네덜란드 주한농무참사관 (릭 노벨)
	① (푸드허브)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육성 전략 ② (혁신사례) 글로벌 푸드 벨류체인 혁신 사례 ③ (특화산업)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과 대응과제	
	(세션 II)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	미국 MS社 수석연구원 (누네스) 프랑스 비타고라 클러스터 국제개발책임자 (밍리)
	①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 저비용 디지털농업 솔루션 ② (클러스터)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속가능 혁신체계 ③ (산업혁신) 농생명 산업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방안	

2024 농생명산업포럼

개요 농정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중심
의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

구분	내용	행사일	장소
컨퍼런스	1섹션 : 디지털 전환과 농식품산업 혁신 2섹션 : 농촌 재구조화, 농촌공간의 변화 3섹션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확산	5.2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농업소독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산지유통 고도화 방안	6.26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농생명식품분과	주제1 : 푸드테크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방안 주제2 :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 프로세스	8.21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수산활력분과	주제1 : 부산광역시 해양수산창업투자센터 운영사례, 부산사례 주제2 :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해양수산 스마트 양식의 현주소	9.5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농업기술분과	주제1 : 기후위기 시대 우리 농업의 문제점 주제2 :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추진전략	10.7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농민행복분과	주제: 전북 청년여성농업인 생활실태와 지원과제	10.10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농촌활력분과	주제1 : 전북자치도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방안 주제2 : 전북자치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방향	10.17	전주 스페이스 코웍
친환경축산분과	주제1 : 농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ICT장비 도입을 위한 준비 주제2 : 국내 육계시장 및 사육업 진입 가이드	12.4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성과공유회	농어업·농어촌위원회 활동성과 보고, 유공 표창장 수여, 토크 콘서트, '25년 운영 의견수렴	12.18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랜드벨라홀



2024 전북 물포럼

개요 전북지역 물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간에 네트워킹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취적인 산·학·연·관의 협력강화를 선도하고 물 관련 전국의 첨단 과학·공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북의 물 문제에 대한 접목방안 고찰 및 상호 교류 기반 마련

구분	내용	행사일	장소
키오프	'24년도 전북물포럼 운영방향 설정 및 안건 논의	3.27.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 포럼	전북자치도 농업용수 확보 및 새만금호 수질개선 방향 모색	4.26.	전북자치도 대회의실
정책계획분과	중간보고회 대비 분과 발표주제 선정 및 계획 논의	6.14.	전북연구원 소회의실
갈등조정분과		6.26.	Zoom 회의
참여문화분과		6.26.	Zoom 회의
정책계획분과	물관리 정책과 이슈 (물포럼 발전방향, 하천관리, 물산업 등)	7.11.	그랜드 힐스튼
갈등조정분과	기후재해와 물관리 (대응사업, 갈등조정 거버넌스 등)		
참여문화분과	유역관리와 주민참여 활동 (지역별 참여사업 현황, 성과 및 사업제안 등)		
갈등조정분과+ 참여문화분과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용저수지 관리방안 (한국농어촌공사 권영준 부장)	11.5.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정책계획분과+ 참여문화분과	새만금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공급체계 개선 방향 (원광대학교 정용 교수)	11.7.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최종보고회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의견수렴(한국수자원공사) '24년 물포럼 운영실적 보고 및 '25년 아젠다 발굴	12.19.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새만금국제공항 물류포럼운영 TF

개요 2029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공항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여객 중심의 현재 새만금국제공항 운영계획에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여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발전전략 모색

구분	주제	행사일	장소
기초	1분과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 가능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과제	11.6.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2분과 항공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시설 경쟁력 결정요인	9.24.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3분과 스마트 물류 기술 발전 동향과 항공물류 적용 가능성	9.10.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심화	4분과 물류특구제도 추진동향과 새만금국제공항 활용 전략	11.6.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5분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특송물류산업 특성과 기업 유치전략	9.10.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6분과 전북특별자치도 항공물류기업 유치와 과제	9.27.	영남대학교
	7분과 초저온 산업 특성과 기업 유치전략	9.25.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8분과 항공물류 서비스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과 유치전략	9.25.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9분과 한중카페리 Sea&Air 복합운송의 새만금국제공항 연계 가능성	9.30.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10분과 복합물류중심지 사례와 새만금 복합물류 특성과 방향	9.24.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11분과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복합물류 전략 구상	9.27.	영남대학교
	12분과 새만금국제공항과 크루즈산업 연계 가능성	9.30.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통합컨퍼런스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물류포럼 운영결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협의	12.16.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2024년 네덜란드 연구포럼

개요 전북의 경제·산업 성장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네덜란드의 경제 발전모델을 집중학습하고, 분야별 산·학·연·민·관의 전문가들 간의 소통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적 비전 정립

구분	내용 및 주제	행사일	장소
키오프	포럼의 운영방향 설정 및 안건 논의	7.16.	전북연구원
연구진 스터디 세미나	분과별 스터디 1차 회의	8.8.	전북연구원
	분과별 스터디 2차 회의	8.12.	전북연구원
종합세미나	네덜란드의 이해를 위한 세미나 (경제·사회 전반)	8.20.	전북연구원
농생명·물류· 산업·금융분과	분과 발표주제 선정 및 계획 논의	9.19.	전북연구원
이민분과		9.20.	전북연구원
물·환경분과		9.23.	전북연구원
교육·행정자치 분과		10.7.	전북연구원
이민분과	네덜란드 및 EU의 이민정책과 사회문제	10.24.	전북연구원
농생명·물류· 산업분과 세미나	한-EU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방안 네덜란드스마트팜 산업 동향과 전북의 시사점 새만금 신항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제안	10.31.	전북연구원
물·환경분과 세미나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의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추진동향과 시사점 네덜란드의 수질관리 정책과 전북의 시사점	11.6.	전북연구원
행정자치 분과 세미나	암스테르담 대도시권 협력 거버넌스 경험과 전북 대도시연합 추진전략	11.12.	전북연구원
교육 분과세미나	네덜란드의 농업교육	11.14.	전북연구원
금융 분과 세미나	네덜란드의 농업 금융 사례와 전북의 시사점	12.20.	전북연구원

2

자원 활동

도정 지원 및 협력

국가예산 확보 및 대응 지원

새만금 이차전지 전력공급 인프라 적격성심사 통과
(기재부/산업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화단지 내 전력공급 시설 인프라 선제적 구축의 필요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현안과제를 수행, 기획재정부 신규사업 보조금위원회 심의 통과에 기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에 기여

사업비 510억 원 확보(국고보조금 255억 원)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 지원
(국토부 / 6개부처 합동)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와 공동으로 시·군의 제안서(예비계획) 작성은 물론 대면·현장 평가 준비과정에 대한 심층 지원을 통해 도내 2개 시·군(김제시, 부안군) 선정에 기여

사업비 765억 원 확보(김제 411억 원, 부안 354억 원)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및 공모심사 대응의 전 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자문 및 평가위원 참여)으로 도내에서 응모한 3개 시·군(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모두 선정되는데 기여

사업비

1,167억 원 확보(정읍 255억 원, 완주 377억 원, 장수 535억 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지원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다년도 안정적 재원확보 및 중점사업 발굴을 위해 평가등급을 우수와 양호로 줄이되 우수지자체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평가가 변경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적극적 컨설팅 지원

우수지자체 160억 원

양호 지자체 72억 원

교육발전특구 선정 지원
(교육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전북자치도는 광역형으로 지원하여 5개 기초지자체(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이 선정

사업비 1,615억 원(국비 549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대응

전북특별법 개정 관련 특례 발굴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례의 재검토,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례의 논리 보강, 전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특례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법률 개정을 지원

목적 전북자치도 관련 주요 특례를 발굴하여 향후 법 개정에 활용
(정책 환경에 따라 추진할 특례 후보군을 발굴)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5대 목표별 특례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안

분야	발굴특례명
생명산업	전북자치도 특례지구 내 분산에너지 확산 특례,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지구 및 기업지원 특례
전환산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실증단지 내 모빌리티 실증지원 특례, 항만기술산업특구 및 시범사업구역 지정 특례, 전북산악관광진흥공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국립공원 주변 생활권의 관광진흥 특례, 지역 특화 해양치유 및 해수욕장 활성화 특례,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
기반구축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인구감소지역 빈집 정비 및 생태활용 시범사업 특례, 근로시간 유연화 시범지역 특례,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1인2주소제 특례,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 이전 특례
도민행복	국립공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특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 지원 특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특례
자치분권	재정 관련 타법 개정 관련 방안, 정률 방식의 보조금 특례, 통합재정협력기금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법정평가이자 외부평가인 국무조정실의 성과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특례 실행력 확보를 위한 내부평가로 자체 성과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목적 법정평가이자 외부평가인 국무조정실의 성과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특례 실행력 확보를 위한 내부평가로 자체 성과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결과 국무조정실 성과평가와 자체 성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성과평가는 총 30개 평가지표와 협약서를, 자체 성과모니터링은 총 74개 지표(중요지표 54개, 일반지표 20개)를 도출하고 세부 지표 정의서 작성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

국회 세미나

재정·외국인 분야 등 전북·강원 간 공동 협력과제
(2025년) 추진
- 전북연구원 주관: 재정 특례 - 강원연구원 주관: 이민 특례

목적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산업인력 부족 등 전북·강원 간 공동 직면한 문제에 대한 자주재원 확보 및 세계 특례, 외국인·이민 정책 특례 등 대응방안 모색

일시/장소 '24.6.19. ~ 6.2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참석 양일 간 100명 내외
- 19일(전북연구원 주관): 국회의원 안호영·이성윤·박희승, 최병관 행정부지사, 양도 추진단장과 관계자, 충북·제주 등 타 지역 관계자 등
- 20일(강원연구원 주관): 국회의원 한병도·유상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부지사, 양도 추진단장과 관계자 등

시·군 정책선도 및 지원

1시·군 정책간담회

- 시·군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과 시·군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등을 위한 정책컨설팅 추진
- 의제 선정 : 시·군당 4건 내외 의제 협의·선정(현안사업, 국가예산 사업 등)
- 추진 체계 : 전북연-시·군 기획팀 사전미팅 및 정책검토내용 협의 ▷ 정책협의안건 및 참석자 확정
▷ 최종리허설 및 보도자료 배포 논의 ▷ 간담회 개최

<2024년 1시·군 정책간담회 추진 현황>

구분	일자	시·군	주요 의제
1	4.30	임실군	• 성가지구 도시재생,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방안, 옥정호 종합관광개발 계획
2	5.17	순창군	•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 순창군 교육발전 특구 추진, 전원마을 500호 조성, 경로당 급식 활성화, 강천산 온자실 치유관광지 조성
3	6. 7	진안군	• 마이산 하늘길 조성, 섬진강권역 관광거점 조성, K-홍삼 혁신 플랫폼기반 구축, 농식품인력개발원 분원 건립, 수변구역 해제 특례
4	6.28	장수군	• 장수군 공설 장사시설 조성,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조성,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통합바이오가스화 설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 지구 지정 및 조성, 주요관광 거점 연계 활성화사업
5	10.14	군산시	• 공공형 위케이션 사업, 금강미래체험관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심권 고령친화 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 은파호수공원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6	10.29	김제시	• 김제 관광벨트 구축, 수소산업 육성,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구축,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확장사업(수로매립), 첨단 융복합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7	10.30	부안군	• 고려청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산단) 확대 조성 추진, 전북-전남 해상경계(도계) 분쟁 대응, 새만금 광역 공공 신선식품 통합지원센터 구축
8	11.5	정읍시	• 정읍 구절초 꽃축제 발전방안, 내장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신축조성,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9	11.8	익산시	•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공공형 방과후러닝센터, 금강하류 침수예방 대책강구
10	11.13	고창군	• 다목적댐(고창댐) 건설사업, 정부 공공기관 및 도 산하기관 유치, 고창 석정 고령친화(산업) 진흥지구 조성, 김치원로 공급단지 구축사업 중장기 운영방향, 고창 꽃정원 단지 활성화 방안

권역별 정책세미나

지방소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군 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권역별 정책 아젠다 발굴

- 구성 : 단장(연구본부장), 권역장(중부도시권, 서부권, 동부권), 코디네이터
- 권역 : (중부도시권)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서부권)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동부권)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제1차 정책세미나

(중부도시권 4개 시·군
+동부권 6개 시·군)

- 일시/장소 : 2024.7.9. / 국회의원회관
- 주제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실태와 과제
- 참석 : 국회의원실, 문체부, 전북도 및 10개 시·군, 전북연, 전문가 등 100명 내외
- 내용 : 광역관광개발 국가사업의 현황과 전망,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전북지역 추진 실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차 권역별 정책세미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주제발표	• 광역관광개발 국가사업의 현황과 전망(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실태(전북 10개 시·군)
종합토론	• 서부내륙권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문체부, 전북자치도, 시·군 등)

제2차 정책세미나

(중부도시권 4개 시·군)

- 일시/장소 : 2024.9.4. /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 주제 : 문화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포스트 문화도시 전략
- 참석 : 전북연구원, 중부도시권 시·군 관련 담당자 및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관계자 등
- 내용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등

<제2차 권역별 정책세미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주제발표	• 포스트 문화도시의 방향과 지역차원의 전략 제언(장세길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 전북 차원의 문화도시 협력방안과 포스트 문화도시에 따른 도 지원방안 논의

제3차 정책세미나
(중부도시권·동부권 공동개최)

- 일시/장소 : 2024.12.4. / 고창군 베리팜 강당
- 주제 :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 참석 : 전북연구원, 전북우수농식품연구회 중부도시권회원 및 관계자 등
- 내용 : 전북농업기술원 품목연구회의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동부권 현장중심 논의·검토를 통해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방안 검토

<제3차 권역별 정책세미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주제발표	•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과 과제(최태환 팜넷 대표)
종합토론	• 지역농업 혁신 방안 논의



시·군 정책과제

기존 도 정책과제 중심에서 시·군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시·군 정책과제 수행

- 선정 기준 : 도정 발전방향과 연계된 시·군 과제
- 선정 절차 : 시·군 과제 제안 → 전북연·전북도 협의 → 시·군 정책과제 확정

<시·군 정책과제 현황>

구분	시·군	과제명	기간
1	임실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24.4월~'24.9월
2	군산시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24.9월~'25.1월
3	남원시	동부산악권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류인구 유입방안 연구	'24.9월~'25.1월



전북연구원-천잠산 산책로(産策路) 조성

- 목적 : 전북연구원과 천잠산의 기존 등산로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 및 전북연구원 방문객 등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
- 규모 : 탐방로 약 258m
- 내용 :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물 설치 1식(데크계단, 야자매트, 로프난간, 원주목교)
- 시행 : 전주시
- 준공 : 2024년 7월

3 출판 활동

학술지 「전북학연구」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2024년 11집

논문 「전북 비도시 지역 순회 영화 상영의 역사성-한국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를 중심으로」

저자 위경혜

논문 「고창 칠암리 전방후원형 고분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저자 신민철

논문 「조선시대 전라도 거점고을의 형성과정 검토-지리지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김백철



2024년 12집

논문 「전북지역 학교 문예지의 시대별 연구」

저자 이정옥

논문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과 활용방안-지역학 활성화를 중심으로」

저자 장총희



2024년 13집

논문 「무주군 제철유적의 현황과 그 의미」

저자 광장근

논문 「『완산도형』에 구현된 초기 개신교 전주스테이션 공간 연구」

저자 김경미

논문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저자 엄기일

논문 「지도와 유적으로 보는 전주 후백제 왕도공간구조」

저자 이경찬

논문 「견훤의 전주 定都와 그 의미」

저자 허인옥

논문 「전주지역 후백제유적의 분포현황과 성격-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저자 방민아

논문 「전주 후백제 왕궁의 조영 특성-입지와 건축을 중심으로」

저자 김재홍

논문 「유물로 본 전주와 익산 후백제 유적의 성격-전주와 익산지역 출토 통일신라시대 말~고려시대 초 와당과 명문와를 중심으로」

저자 전용호

2024 전북학총서



저서

『동진농장, 조수와 싸운 간척 7년-후쿠이 시게키의 기록』

저자 후쿠이 시게키

역자 양선아, 소순열, 이성호, 이도정

일제강점기 김제를 중심으로 간척 상황을 기록한 일본인 후쿠이 시게키의 저서를 번역하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한 저서



저서

『전북의 위생』

저자 전라북도

역자 이규원

1930년대 전북의 질병 및 위생 관련 조사보고서에 대한 번역서로 당시 유행하던 질병과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번역서

4

언론에 비친 전북연구원

2024년 1월 3일 전라일보

순창군, 미래 전략과제 밑그림 그린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지역강점 최대 활용한
차별화사업 수립 계획

순창군이 민선 8기 군정비전을 구체화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분야별 대표 전략과제 발굴연구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지난 연말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순창군의 강점을 활용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와 연구분야별 담당 부서장, 전북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은 (재)전북연구원 김형오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수행계획 및 부서 협조사항 등에 대한 설명에



순창군이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있다.

이어, 분야별 간부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내실 있는 용역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특히, 부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순창군의 맞춤형 특례사업 발굴의 필요성, 민선 8기 군정철학인 군

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사회사업 마련, 심도 있는 주민 설문조사 실시 필요성 등이 언급되며 이번 용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용역은 2024~2030년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순창군의 문화관광, 농산업,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전략과

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며,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각종 국가예산사업 및 시책사업 등을 기반으로 향후 중앙부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역 수행기관은 도내 대표적 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으로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진과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순창군 발전을 견인할 맞춤형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제 수립은 물론, 순창군만의 특화발전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절할 속에서 모두가 채갈 수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맞춤형 전략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순창=이흥식기자

2024년 1월 9일 전북도민일보

전북특별자치도 성장 견인
총선공약사업 133개 발굴상용차 자율주행 단지에
철도망 구축사업 등 망라
총 사업비 69조 원 달해
도, 정당 반영 논리 개발

전북도가 제22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제 제시할 총선 공약사업 133개를 발굴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연년의 해를 맞아 치러지는 첫 총선인 가운데 후보에 맞서 경쟁하고 있는 지역 현안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선 공약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총선 공약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총 사업비 69조5,581억원에 달하는 133개의 사업(예산 123개·비예산 10개)이 발굴됐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제언된 125개 사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도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도정 비전 아래, 분야별로 지역 미래를 견인할 사업들로 공약사업을 구성했다.

이번 총선 공약사업은 신산업과 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균형발전, 지역개발·SOC, 안전, 환경·복지, 학식, 교육·소통 등 10개 분야로 나뉘었다.

사업수별로는 지역개발·SOC 35개, 신산업 19개, 문화·체육·관광 17개, 농생명 14개, 새만금·균형발전 13개, 경제 9개 등의 순이다.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사업은 무려 52개에 달했으며,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24개,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은 26개, 300억원 미만은 21개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소상공인 지원,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스마트에디터 투자공사 설립, △중소벤처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주 후배제고도 지정 및 혁신 △군산항 3단계 항로준설 △새만금~정읍~지리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국내외 은퇴자 이주 정착 복합단지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이룰 사업들

이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전북형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보리를 활용한 수재매주 △새만금 잠자리부지 산업 등 비예산 공약사업까지 균형 있게 발굴됐다.

도는 이같은 사업들이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내 현안사업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총선 이후 국가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셈.

다만, 도에서 발굴한 공약사업은 각 당에서 할 수 있는 로우데이터(기반)인 만큼,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각 당의 몫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지역 내 현안들이 반드시 정치권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साल 내 머물러인 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이 발굴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양행용 기자

특례 통해 기업투자 대거 유치·인구유입 효과 기대

특별자치시대 >전북미래와 경제 > 지역경제 영향

앞잡이 보자는 도민적 광원으로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도역이다. 기동적인 운동장을 벗어나 오롯이 독자 영역으로 바뀔지는 도역이다. 기동적인 운동장을 벗어나 오롯이 독자 영역으로 바뀔지는 도역이다. 기동적인 운동장을 벗어나 오롯이 독자 영역으로 바뀔지는 도역이다.

도 2020년 가가이 앞선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7년 6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는 눈에 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 일괄 이관, UN 세계관광 기금 174개국 대상 부처와 협력, 민생의 실사 및 운영,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 승인, 영아교 육도시, 카카오·네스 등 국내기업 27개 기업유치, 40개 사업장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총 103건의 투자유치 등을 이루었다.

농생명·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산업시설 비중 늘어 2040년까지 1천531개 기업·53조7천억 유치 분석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7년째 제도 개선을 통해 4천741건의 특례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하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전원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사 권한이 주어졌다. 또 세출조정과 감면 특례를 활용해 세수를 확충하고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등 재정 권한도 확대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6년과 비교해 인구는 30.7% 늘었고, 예산규모는 3.1배 증가했다. 재정자립도 3.4%, 지방세수 4.8배, 지역총생산(GRDP) 2.4배, 관광력 수 2.3배 등 주요 지표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한편 특별자치시 2040년이면 1천 815개로 전망된다. 이중 기존 산업단지 지정 추세에 따른 추가 기업 유치 284개를 제외하면 1천531개의 기업 유치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특례 적용으로 2040년까지 1천531개 기업이 추가로 유치되면,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에 고려해 53조7천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 1억원당 0.2245명의 고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총 12만28567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경제의 효과와 더불어 국내내 인구 유입에 따른 전체 인구 증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계청이 과거 인구추조사로 기초

로 시군별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 추이를 반영해 전북의 경제인구추계를 산출한 결과 오는 2040년이면 2020년 180만5천명에서 240만1천명(11.1% 증가)으로 180만5천명에서 240만1천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북의 외국인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19만7천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유치에 고용창출 효과에 외부 유입효과를 포함해 25만4천명의 국내 인구가 전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권순재 기자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전북연구원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24일 지역환경연인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날 '일일 옥정호 내 인공습지공원 조성'을 위한 수질현황 조사 및 조성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도내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업무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토의를 진행했다.

양병용 기자



2025년 전북자치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가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각국 실국장들에게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시동

34조4천억 규모 499건 확정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속도전

전북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속도를 높이고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30일 도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3년 연속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하겠다는 의지와 다지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2025~202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총499건 총사업비 34조4,000억원 규모로,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군·광역발전, 도민경제·희망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소음·진동·미세먼지 저감 사업 △K-푸드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스마트혁신 ICT 클러스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 지원센터 구축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조성 △새만금 복합개발

지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2~2단계 조성 △국립 지역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예산 신규사업 중점 발굴 방향으로 설정하고, 14개 시군과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향후 내실 있는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새롭게 발굴된 사업들이 부처 예산안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도전하건 결국 성공한다는 '도전경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성아 기자

2024년 2월 16일 전라일보

농생명산업 키우고 새만금 개발 속도 높여 백년대계 주춧돌 쌓는다

전북연구원 '10대 아젠다' 발표
도정 5대 목표 실현 구체화 증점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원년을 맞아 도정 5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10대 연구 아젠다를 선정했다.

15일 전북연구원은 아수브리핑을 통해 도인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거점, 새만금도약, 균형발전, 도민 행복·회복교육 등 도정 5대 목표에 대한 10대 연구 아젠다와 50여 개의 주요 연구과제를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10대 연구 아젠다는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산업 진흥 ▲지속가능 경제 생태계 조성 ▲농생명산업생태계 고도화 ▲역사문화의 재발견과 활용 ▲지방소멸시대, 더 특별한 관광생태계 조성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북자치도의 브랜드 창출과 특색 확대 ▲청년인구 확충 및 전북 특화형 비자 확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확대 ▲지역특화산업 이르는 인재 교육 기반 구축 등이다. 이 같은 아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은 물에 할당 바 이오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특별단지 구성, 수산업 육성, 기후테크 산업 육성,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해양문화유산 국제 교류지구 지정, '배조 이싱게' 프로젝트, 유무형 자산의 글로벌 콘텐츠화, 전북자치도 특화 관광자원 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재정특례 제도개선, 2단계 개정을 위한 조례 발굴, 생활인구 유입,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전법률 불복제 조성 및 운영 방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대응 등 50여개를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10대 연구 아젠다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도정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 세미나, 이슈브리핑 발간, 이슈트렌드 특강 등을 확대하겠다"면서 "연구성과들이 확산되고 피드백되는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생크리트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기자

2024년 2월 28일 전북도민일보

전북지역 의병운동 체계화

도, 2개년 기념사업 추진
책자 자료 디지털화 제작
유적지 정비사업 실시 등
도민 역사적 자긍심 고취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의병운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도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의병활동 장비에 나섰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의병운동이 활발히 이뤄진 전북지역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호남은 동학농민혁명 여파로 의병운동이 활발했으며,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많은 의병이 일어나 의병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특히, 을사늑약 체결

후 최익현을 중심으로 일어난 정음태인 의병은 전북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일 의병이며, 의병운동이 산소 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출범 원년과 함께 전북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민에게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발전책자의 디지털화(pdf) 제작 및 개정, 각 시군 문화원 및 문중 문서 등의 추가 자료 발굴, 시군별 의병 유적지 목록화 및 대표 유적지에 대한 시범 조사, 의병 교육의 추진 등으로, 전

북연구원(전북학연구센터)에서 맡아 진행한다. 우선, 의병사 청리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기념발전책자의 개정과 추가 내용을 포함한 전북자치도명 품향의 디지털화 작업이 연차별로 진행된다. 추가 발굴은 시군 문화원, 문중,

역사 기록물 등의 조사 및 디지털화 제작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 왕토 사학자 등이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 의병 유적지 정비사업은 시군별 의병 유적지의 목록화와 대표 유적지에 대한 시범 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병 교육은 의병 관련 단체에 위탁해 교육을 추진하며,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유적지 등 발굴 결과를 통해 기념사실 건립 기념 구상 영역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종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여파로 인해 의병운동이 크게 활성화됐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병운동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의 의병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형호 기자

2024년 2월 26일 전북도민일보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력 높인다"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가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원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례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자치도 특별법 2차 개정 '윤곽'

종합계획 연구 최종 보고...개선 방향 담겨 각종 특례 추진 위한 '자체 재원' 확보 과제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시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연구원 이자년에 3월부터 1년간 용역을 맡아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20년 실·국·도의 보충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전북의 특수성이 반영된 2차 특례 발굴과 각종 특례의 근거

가 될 수 있는 전무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자 추진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방향은 개별 특례가 아닌 분야별 종합전략으로 생태계 분석을 통한 통합 특례 발굴이다. 법적 근거 미흡, 시·군·자치단체 부·사업 등 테스트베드로서 수행 가능한 특례도 발굴한다.

또 시·군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이 동력이 되고 특정 지역이 아닌 시·군 간, 생활권 간 연계로 통한 시·군 특과 특례 발굴하는 게 경향이다.

특히 여전히 전북자치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관계기관·시·군·민

간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개정방식별 전략 구성, 세금 관련 타법 개정안 마련, 재정분권 입법전략, 4개 특별자치시도 연계 협력 등 제정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북은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자주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3곳의 특별자치시도 경우 재주도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해 면세장을 운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도는 관광지역 특별법이 의한 강원랜드 운영, 세종시는 영구 유입 인종제 공역지역제로서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일부 충당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재정 관련 18개 조문을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만 되돌아보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과 재정 관련 18개 조문을 통해 저거를 연계를 장기적으로 자체 재원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며 "특별법을 활용한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확보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새만금 SOC 투자 '토큰증권' 도입 필요"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 가능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주장

새만금 SOC 투자 구축 및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디지털자산특별법' 조성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반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발표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특별법은 새만금 부동산 대상 디지털화한 토권증권을 소재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 발행해 새만금 개발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고, 개발사는 토권증권 판매대금으로 초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금

융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특별법 내에서 토권증권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부동산 소유권, 개발프로젝트 수익권, 개발 대출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들 자산을 토권증권으로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 구조는 토권증권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수익과 부동산 자산의 임대나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배당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백 책임연구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권증권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부동산자산 권리의 증권화로 소액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순창군-전북연구,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힘모아

정책간담회 갖고 신규업무 등 전략적·경제적 갖춘 사업 모색

순창군이 5일 (재)전북연구원과 순창의 미래 발전전략 설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착수보고회에 이어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전북연구원과의 두 번째 정책회의다. 전북연구원 김형호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7명의 연구원과 순창 군청 주요 임무를 담당하는 38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순창군이 직면한 민선 8기 군정 주요사업들의 조속한 추진 방안 및 타 지자체 우수사업들의 도입 방안, 신규 정책사업 제안 등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아울러 경전·양진 수반 개발사업과 천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을 비롯해 요각 강 저지체의 연구중대 방안으로 화두가 된 농촌유학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이 주제다.

이들 토대로 순창군의 문화·생태적 강



순창군은 5일 전북연구원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점을 실려 전략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정책사업 발굴을 계획 중이다. 또 이를 위해 군에서는 앞으로 4~5월에 전반기 연구의 핵심 연구진과 순창군 간부 공무원들과의 정책 워크숍을 거쳐 9월에는 순창의 미래를 담은 구제현안 정책안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최원일 순창군수는 "간담회가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전북연구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을 바탕으로 순창군의 색채를 띤 독창적인 미래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순창군이 생각하는 군 발전방향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해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농업·농촌 ▲산업·일자리 ▲문화·체육·관광 ▲생태·환경 ▲지역개발·SOC ▲복지·의료·사회통합 등 모두 7개 정책분야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우기훈 기자

전북연구원·국회도서관 연구 데이터 활용 '맞손'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18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국회입법활동과 국정심의를 지원해 온 연구 데이터와 학술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지식정보 공유 및 연구 데이터 공동활용을 강화해 지방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양 기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공동 개최 및 협력, 그 밖에 양 기관 간 필요한 상호 협력사항



18일 전북연구원과 국회도서관 관계자들이 '지식정보 공유·연구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전북연구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국정심의자료와 지역정책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현안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호 원장은 "국회도서관 등 다양한 정보유용 플랫폼을 활용한 신속하고 제한 없는 연구성과 개발을 통해 사회 전체가 연구성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2024년 4월 5일 전북일보

전북도 ‘주 4일 근무제’ 카드 꺼내나

**민주당 주 4.5일제·진보정당 주 4일제 공약
충남, 2세이하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도 ‘실질적 효과 방안 모색 등 다각적 검토’**

4월 총선을 앞두고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운데 최근 충남이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 지령’, 진보정당은 ‘주 4일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 4일제는 당시에도 후보들 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앞으로 주 4일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 전변의 인식 변화와 합의 도출이

를 끌어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충남의 ‘주 4일 출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4일 근무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전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주 4일 근무제’를 전북 발전의 기회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특별법 특례에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등의 측면에

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여가 활동이 해외로 찾아가거나 임금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도 내비쳤다.

전북 내 기업 중에서는 ‘아우더 중산 모티스’가 지난해 5월부터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공식 도입했다. 현재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아홉부터 유보한 상태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 직원들의 효율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던 만큼 추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주 4일제’와 관련한 전북자치도는 아직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워라밸도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충남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다른 방식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2024년 4월 15일 전북일보

도, 수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전북자치도가 지난 1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수산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북 수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은 2019년 수립한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분석과 국내외 수산산업 정책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북연구원 측은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탄소,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 발전, 동북권·농어촌 연계 균형발전 모델 등을 아우르는 단기 5년, 중장기 10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산업 및 수산물유통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마다 수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4월 18일 전라일보

임실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 ‘국비 60억’ 확보

전북 임실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전국 9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총 3곳을 선정했으며, 그 중 임실군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선정에 의해 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공모 사업 준비에 시군 실무회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

비했고 임실군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행정력·재원에 적극 활용하기로 나섰다. 이번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사업비 142억 원(국비 60, 도비 18, 군비 60, 민자 4)을 투입해 치즈축제·체험·산림공원, 치즈랜드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치즈 콘텐츠개발 및 브랜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22면 계속 ○8과수기자**

2024년 4월 15일 전북일보

재정특례 확보 위한 부처 설득 관건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전북의원들의 중앙부처 ‘설득전환’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자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1차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는 여러 시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례안 확정과 개정안 통과까지 남은 여력이 많지 않다.

도는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돌며 발

제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

②전북특별법 2차 개정

**전북도 발간 40개 특례 중 7개 재정 특례
교부세 확대 반발 기류에 장기 접근 필요**

국 특례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5월에는 특례의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 2차 개정안 조문이 확정되면 이후 8월에는 정부 입법 절차가 돌입한다는 전망이다.

부처 설득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정적인 특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끌어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주요 역대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앙 리그의 강과 무대로 만들어 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 심사의 첫 관문인 행안부와 기재부 등 유관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역시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북 출신이자 호남 유망의 여당 의원인 조태승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국회에 공

등 발의하면서 여야 합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야가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치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제주는 일정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전북과 강원 간 경쟁 공존 관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두 지역이 치열한 상황이 유사한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모두 지렛대 안정적 확보 등 균형 발전 특례와의 별도 개정 실효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해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에 그치면서 이를 극복할 연합당 모색은 과제로 남고 있다.

김선찬 기자



2024년 전북연구원 연구성과 공유회가 23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콘누리홀에서 “글로벌 성장경제도시의 100대 계획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개방형 혁신 연구기관 거듭날 것”

전북연구원 연구성과 공유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은 “2024년 전북연구원 연구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연구성과의 공유와 더불어, 연구 기관으로서의 전문적 변신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날도 전북연구원장은 “연구성과 교환을 내부에 한정했던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개방형 혁신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통계 개입 이후 32년만에 기존 패색적인 관행을 벗어 난지고 연구가치와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혁신형 개방 연구 변화를 약속한 것.

연구원은 “백년대계 7대 의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장기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주요 의제로는 인구와 청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농생명산업, 이차전지, 문화관광, 지방재정, 삶의 질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김관정 도지사와 박신기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과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연박에 대해 강조한 기조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도 내 언론, 대학, 연구계 인사들이 모여 동월시업(東月西議)·전북의 서해안은 소금의 보고, 동부권은 제철의 중심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췄다.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146건의 연구 과제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장도 마련됐다.

이날도 전북연구원장은 “민·관·산·학이 연대해 지속적인 공유와 혁신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전북에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은 기자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북연구원

“경제 활력 위해 소상공인 가치 공유”

전북연구원·도의회 등 주최 소상공인 정책 포럼

“소상공인이 희망을 찾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이와 가치를 소상공인 정책 방향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날도 전북연구원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2024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정책 포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나정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박준 전북지역공동 IT분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형 소상공인 활성화와 방안”을 주제로 성장사다리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형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향을 제안했다.

“정책형 생활 불류 서비스 도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나 연구위원은 플랫폼 경제시대에서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박준 분과장은 “로컬 중심 경제 활동, 전북의 미래를 만들

다”를 발표했다. 박 분과장은 일부 공공기관의 대기업 위주·대량 발주 관행을 비판하며 지역경제의 싹싹한 소상공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보국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이철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탐방, 강력한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김진기 전남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김형준 군산대 교수,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임종명 의원은 “포럼은 각 분야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소상공인이 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의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연구원·전북자치도의회·전북소상공인연합회·전북미디어연립협동조합이 공동 주화·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국무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날도 전북연구원장, 전안국 소상공인연합회 고문, 임기욱 전북미디어연립협동조합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박현우 기자

“옥정호·치즈산업, 임실 경제 특수자원”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 군·전북연구원 정책논의 봉어섬 케이블카 설치 등 대형 민간개발사업 제시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임실군청에서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협력체계를 구축,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

향을 논의했다.

관람과 도시재생, 옥정호 탐방객 등이 참여할 실무회의는 옥정호 발전과 오수 세계명컨테마랜드 조성 등이 연구원에 제시됐다. 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와 임실군 특화 자원 활용 신규사업 발굴, 미래 발전 방향 등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전북연구원은 이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최근 정부 정책 방향과 타 시·군 동향, 대응계획 및 행정 사항 등을 제시했다.

임실군은 옥정호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개발과 오수

세계명컨테마랜드 조성 진행 과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옥정호는 봉어섬을 잇는 출렁다리, 계룡으로 도내를 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구축, 관광객 입장 현황도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봉어섬과 나래산, 구 운암교를 잇는 5km의 케이블카와 걸라인 및 모노레일 등의 대형 민간개발사업도 제시했다.

여기에 생태 탐방선과 수상 레포츠 타운 등 장기적 친환경 수변 이용 등의 비전과 옥정호 종합관광 개발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세계명컨테마랜드와 버려진 동물 지원센터 건립, 해진 호수 민자유치 및 오수 제2·제3농공단지 활용 반려동물 목화산업 등도 논의됐다.

심민 군수는 “전북연구원과 정책토론을 통해 우리 군에 살릴 수 있는 특화 발전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임실 발전에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도 연구위원은 “옥정호와 치즈산업 등은 임실군이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자원”이라며 “전북연구원 임실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2024년 5월 21일 전북도민일보

“순창군, 전북연구 정책연구 시너지를”

육아·교육발전 특구·전원마을 500호 등 현안사업 주제
11명 분야별 전문가와 간담회… 유대관계·공조 첫 단추

순창군의 비전인 ‘모든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달성하기 위해선, 순창군의 노력에 전북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에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전북연구원 이호남 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지난 17일 정책간담회가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군 영생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1년 9월 열린 정책간담회 이래 3년 만에 추진하는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기관장급 회의로서 관심이 쏠렸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형연구소 역할을 하는 연구원에 순창군 정책

방향을 자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간담회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 ▲교육발전 특구 지정 ▲전원마을 500호 조성 ▲강원산 은자실 차유관광지 조성사업 등 순창의 굵직한 현안사업이 주제로 다뤄졌다. 간담회 후 순창 부시장

이 발표자로 나서고 연구원 전문가들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또 간담이 끝난 후 군정 전반기에 대해 묻고 답변하는 자율 토론회도 있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호남 전북연구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순창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선하겠다”는 입장을



순창군과 전북연구원이 지난 17일 11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을 강조했다.

최영일 군수도 “민선 8기 공약사업에 포함된 농산물을 비롯한 보육, 주거, 교육, 노인복지와 문화·관광 등 순창군 미래산업에 대해 군수로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면서 “이번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일회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유대관계를 통해 정책 자문과 기관 간 공동 체계 구축의 첫 단추로 활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호남과 제주지역 4개 기관의 연구원들이 순창군 공실운동장에서 한바탕 다짐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참가자 가운데 50여 명이 고창사방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에서 고창사방기부제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순창=유기홍 기자

2024년 5월 21일 전북일보



20일 전주 그랜드호텔신호텔에서 열린 전북예향본부 주최 전북 재도약 위원회 학력 대표회의에서 이호남 전북연구원 원장이 “전북 재도약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실현, 지방소멸 위기 대응해야”

▶권력까지 2번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주·완주 광역경제권 실현 등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내 정치 지도자들과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과 협력의 장에 한데 모여 “전북 도민들의 행복을 총괄함에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예향본부는 20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호텔신호텔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 재도약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정 전북예향본부 총재, 전경진 전북자치도지사와 서기서 교육감, 시·군에서는 정형원 익산시장, 강영일 군산시청, 최훈식 완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홍진 전안군수, 심민 임실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신영대·이범희·한병도·홍준병·안호영 국회의원과 정동호·이성운·박희순·소세숙 2대 국회의원 등 현안결과와 지방의회, 학계 및 시민사회 단체, 기업인, 전북예향본부 임원 등

전북예향본부 주최 ‘전북 재도약 위원회의’
각계 오피니언 리더 150명 참석 열띤 토론

각계 오피니언 리더 150여명이 참석하면서 자리를 북돋아 주었다.

윤석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2대 총선을 새로운 관직을 창출했고 이 동력을 발판 삼아 미진했던 전북의 현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이

번에 개최된 ‘전북 재도약 위원회의’가 지역의 정치 지도자와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호남 전북연구원장이 “전북 재도약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호남 회장은 발제를 통해 전북 현안과 관련해 전북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도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5대 의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완주와 전주 광역경제권 실현을 통한 영가 도시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수시대를 맞아 전북 모든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과 민생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번째 발제에서는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송기도 명예교수는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시대를 열었다”며 “정치권이 발호한 액자 말고 이재라도 실현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2024년 5월 22일 전라일보

지역사회 성 평등 구현 ‘한마음 한뜻’

전북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소
전북연구 인구청년연구센터 협약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연구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여성·가족, 인구문제를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문과 혁신을 위해 상호협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개발 및 교육 등 공동 추진 등에 대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정책연구가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만큼 이번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와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성·가족 연구 및 성평등 정책 개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련기자



전북·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22일 강원 홍천에서 개최한 합동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강원 '자치분권 선도' 머리 맞댔다

홍천에서 합동 워크숍 균형발전 설치 등 제안

특별자치도 전환을 계기로 전북과 강원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원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정과 이인, 산지 등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은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와 관여 조정교부금 강화를 강조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 및 인센티브 확보, 세제감면 법개정, 균형개발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례를 통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대상별 종합대책과 인구 관련 획기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와 시군 간 사무 제배 분, 자치분권제도와 방향도 제시했다. 강원연구원은 먼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자치도임에도 중앙정부의 외래 권한 결정, 부처별 협의 난항 등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수밀을 막는 방안으로는 광역비자를 신설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강화로는 자치재정권 및 조직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통교부세 보장 등 재정특례 확보에 강원도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가동 이후 양 지역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의 기회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논리 보강과 함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규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은 "강원과 공동연구, 세미나, 협약체결 등 협력 활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29일 열린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 모습.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도, 제주도와 문화교류 '학술 심포지엄'

부안 출신 지포 김구 선생 주체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문학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주관해 전북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제주문학관 등 제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안 출신인 지포 김구 선생과 제주의 문화를 주제로

문화교류 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포 김구 선생은 고려 말 제주 관으로 임명돼 제주도의 경술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 발담' 쌓기 정책을 실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제주 발담은 주변에 산재한 화산석을 이용해 발의 담을 쌓는 것으로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강자의 농지 침탈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첫날 심포지엄은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의 '지포 김구 선생의 업적과 제주 문헌화의 의의'를 시작으로 김순이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의 '김구의

발담 시책에 담긴 휴머니즘', 고성보 제주대 교수의 '제주 돌문화의 미래-세계 관광 자원화의 길'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30일은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돌문화 유적인 돌 문화 마을, 공원, 기념관 등지를 답사하며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 및 제주 돌 문화의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전북과 제주의 교류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원호 기자

2024년 6월 7일 전북도민일보

자연경관·문화유산 '실감산수 콘텐츠' 개발을

전북연구원, 관광상품화 방안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K-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은 이시브라평을 통해 전북 곳곳에 숨겨진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실감미디어 기술과 융합한 '장소

기반 K-실감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전북만의 독특한 장소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연·문화유산, 생태 경관, 역사적 사건 현장, 상징적인 공간 등을 실감산수 콘텐츠의 무대로 삼아 지역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유사 출연기관이

나 빈관협력 사업단을 구성하여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 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기존 실감 콘텐츠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세길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의 독특한 장소 자산을 실감 미디어 기술을 접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경쟁력 있는 K-콘텐츠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자

2024년 6월 11일 전라일보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3번째 강연 오늘 개최

이장섭 원장 초청 특강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의 세 번째 특별강연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청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에는 '세계한상네트워킹'을 통한 전북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해 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장남대 S글로벌한상연구원 이장섭 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 원장은 국내외 한상기업의 현황을 전하고 '세계한상네트워킹'을 활용한 투자유치 및 기업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하는 구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전략, 전북 식용기 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과 전략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안된다.

세계한상대회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개최돼 올해 22회째를 맞는다. 22차 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이 모인다.

최미주기자

2024년 6월 12일 전라일보



11일 전주(중에서 3번)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주교육발전특구 사업 협약식'에 참석한 우범기 전주시장과 앞으로 전북대총장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14개 기관, 교육발전특구 시범 공모 '합심'

지자체·지역기업 등 협력
교육혁신·인재 양성 지원

전주시와 교육청·지역대학·공공기관·연구소·지역기업 등 14개 기관은 11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경기 전주교육지원청 교감, 양은호 전북대학교 총장, 이해원 전주대학교 부총장, 박종훈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김보라 전북연구원 부부

장,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선영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부부장, 박이자 전주시중연구원

장, 이영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백영희 한국식품연구원장, 장동오 혁신동조개인 대표, 김효성 농림수산식품업 협회대표 등 14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협력기관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선결과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전주교육발전특구 비전과 운영기회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을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

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특구당 30~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주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공학 석, 대학 협력 및 정부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교육은 전주의 미래를 여는 핵심이자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라며 "특별 시스템 구축부터 지역 청년의 취업·정부 여건 개선까지 혁신적인 전주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마련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희기자

2024년 6월 10일 전북도민일보

현안사업 등 지역발전 정책연대

진안군과 전북연구원과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혜를 모았다. 지난 7일 정책간담회에서는 진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전북연구원 전문가들과 정책자문 및 상호토론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마이산 하늘길 조성 ▲섬진강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K-홍삼(고려홍삼) 핵심 플랫폼기반 구축사업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농산업기독교육관) 분원 건립 ▲광역상수도 신규 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면제 ▲수질관리우수지역 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등 6개의 지역 현안사업들이 다뤄졌다. 특히 양측은 진안군이 보유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들을 활용한 힐링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관광산업과 수몰의 아픔이 깃든 용담댐에서 파생된 현안사업의 해결방안 등 군의 중점사업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거듭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지방정부, 이민정책 연계 인구정책 수반돼야”

도의회·전북연구원 정책 세미나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할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북만의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연구원은 19일 전북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의연(義研) 정책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김이재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을 비롯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및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의 인구정책 방안

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민정책 연구위원은 ‘이민정책 활성화 사례 및 전북 적용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란 분석이 나왔다”며 “지방 소멸

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에서도 이민정책과 연계한 인구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19일 전북연구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활용한 공유화금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전북도민일보 제공)

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금 도입 세미나

관련 전문가 도입방안 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금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연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금 도입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원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과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은 각각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 공유 모델과 방향’, ‘전북자치도 공유화금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공유화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전북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금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 산업과장, 박재필 군산대학교 교수,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은희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김원경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장, 이성준 전북개발공사 에너지사업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공유화금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아 기자

“정부 보통교부세 증액 필요” 한목청

전북·강원특별자치도 재정 특례 발굴세미나

전북과 강원이 손을 잡고 특별자치도 재정 특례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간의 ‘재정·이민 분야 현안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강원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전북지역 한병호·김운영·안호영·이원택·이성준·박희승 의원과 강원지역의 함기호·이철규·박정화·유상범 의원이 참석해 재정·이민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첫날인 19일에는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회관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알 기관 연구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자주재원 확보 및 세계 특례’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와 좌장으로 전북연구원장세길 책임연구위원, 이지은 한국지방재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교수 등의 발제와 홍근석 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 방상훈·배창모 전북·강원 예산과장 등 여러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산업위기 등 전북·강원이 공통으로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세



전북·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재정 특례 발굴 세미나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본격 세미나에 앞서 양 지역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치도성공재정자립 관련

국가예산확보경쟁 탈피

새로운정책적재정특례

지역균형발전회계특례 요구

제주·세종만 ‘2대 특례’

제와 관련한 지역주도형 특례 발굴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시됐다. 특히 두 광역단체는 국가 예산 확보 경쟁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정책적 재정 특례를 통해 지방자치

의 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과 강원은 우선 정부의 보통교부세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두 광역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재정수입액과 기존재정수요에 차액, 그 차액의 일정부분 금액을 더한 규모로 확보하고, 지방재정 관련 조세 항목은 반영 항목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자치도의 안정적 정착이 있을때까지도 한시적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 설치도 요구된다. 현재 전북과 강원·제주·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제주, 세종에만 중앙정부 재정지원인 보통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가 있다.

전북과 강원에는 보통교부세와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가 없어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 자립’ 여부가 특별자치도 성공을 이끌어가는 핵심 요인인 셈이다.

회관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온전한 자치권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조세 등의 특례와 인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고용 등 이민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양 자치도가 ‘함께 성장’, ‘함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20일에는 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외국인 고용 등 이민’분야를 주제로 세미나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고민행 기자

2024년 6월 26일 전북일보



25일 익산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전북포럼'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농업·농산·농촌 관련 차관, 김경민 세안규개발청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아르헨티나 에델라노스 와이엘피노 대시, 주창주 영국영사관 구 지사 총영사 등 참석자들이 포토크를 하고 있다. 최현욱 기자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이끌어가자”

전북자치도 출범 첫째 기념...제1회 전북포럼
국내외 전문가 익산서 농·식품 발전방안 모색

국내외 전문가들이 익산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로 시 도약을 위한 농생명산업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국내외 농생명산업 관련기관 및 대학, 4개국 초청 연사를 비롯한 해외 9개국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북포럼이 진행됐다.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자”라는 주제로 마련된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연설을 나선 빈센트 장 마틴 FAO 혁신국장은 지역사와 중심의 풀뿌리 노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농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지속가능을 위한 농업 혁신과 실현의 결실, 총역인간 정신 및 생명경제 원천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발전의 성장엔진, 농생명산업 혁신시스템 접근방법과 방향”을 발표한 칼리더스 세터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 교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글로벌 식량 안보, 질병과 건강 문제, 지반을 에너지 안보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혁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농식품산업의 방향성으로 식품의 다양성과 건강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생물학적 활성화를 위한 식품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또 “글로벌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농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 김용국 허원그룹 회장은 전북지역의 전통과 인프라, 문화 등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특화 발전 가능성과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여건 및 비전 등을 언급하면서 전북자치도가 미래 농식품산업 생태계 선도 촉적지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좌담에서는 신동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특별·기조연설자, 김관영 지사와 정현을 시장을, 장태평 대통령소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농생명산업의 혁신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농생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식품 가치사슬(Value Chain) 혁신과 농생명산업 혁신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가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자처하는 것

이자,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라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농생명·바이오산업이며, 이는 그동안 전북이 가장 잘해 왔고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현을 시장은 “농생명·바이오산업을 혁신적으로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익산에서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농생명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찾고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연사들은 전날인 24일 익산 웨스턴 라이프호텔에서 환영 만찬 회합에 참석해 농생명 혁신에 대한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26일에는 미니 세미나와 농생명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2024년 7월 1일 전라일보

장수군, 주민 숙원사업 실현 논리 강화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
특례사업 발굴 머리 맞대

장수군과 전북연구원은 지난날 25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북자치도 주요 특례 사업 관련 장수군 중점 추진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훈식 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함께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장수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안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수군 공설 주차시설 조성사업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조성 ▲스마트 과수원 특



장수군과 전북연구원이 전북자치도 주요 특례사업 관련 지역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을 점검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날 25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화단지 조성 ▲통합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조성 ▲주요관광 거점 연계 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이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오늘

논의된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과 같은 이런 현안 하나 하나가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들이다”며 “장수군과 전북도, 전

북연구원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협력하며 함께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전선8기 전반기 전북연구원과 정책 마련에 협력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전북 유일 S등급 달성을 비롯해 농촌융합,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민선8기 후반기 성공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긴밀히 소통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동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염정규기자

“직장 눈치보여 육아휴직 하기 힘들어”

도내 근로자들 “사내 분위기·대체인력 부족”
수당 지원신청 19명 뿐... “홍보·감독 강화를”

매년 전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지원제도) 관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직장 내 분위기는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따르면 전북지역 육아휴직 이용자는 2020년 4750명, 2021년 5361명, 2022년 5762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600명, 2022년 702명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기

준 전북 근로자 50.8%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을 꼽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도 전북 근로자 40.2%가 직장 분위기·문화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장’,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등을 꼽았지만 직장 분위기·문화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 내 분위기·문화로 인해 육아지원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허다

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 돌봄 휴직 제도 등의 사용이 어렵고, 사용함에 있어서 대체 인력의 부족으로 동료나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직장 분위기·문화 등 인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육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사업을 추진해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난 2월 2일 지평선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을 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지난 6월 중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 수당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마련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내 분위기·문화 개선과 육아휴직제도의 안

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지만 최종 선발 인원인 40명도 채 지원하지 않았다. 당초 지원사업 공고 마감일인 지난 3일 기준 19명 밖에 신청하지 않으면서 상시 공고로 전환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기업 수요·효율도 등을 파악해 내년부터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 대상자, 수당, 기간 확대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인식도와 수용성이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제도 및 관련해) 사업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현우 기자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제5회 ‘백년포럼’ 개최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은 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발·알·꿈·4차원 경영’을 주제로 제5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미래경영 필독서인 ‘발알꿈’의 저자인 장영국 내일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는 강연을 통해 저서에 담겨진 4차원적 경영 원칙과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구상의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산업혁명의 시작은 4차원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함을 언급하며, 창업 스토리와 함께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초 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의 미래 구상을 위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번 특강은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에서의 생존전략을 찾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통한 새로운 논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강모 기자

도, 2026년도 국책사업 발굴 ‘시동’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국책사업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 한발 앞선 대응을 통해 도정 목표에 부합한 사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책사업 발굴추진단은 도는 물론 전북인 구원 등 출연 연구원, 대학교 수 등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으로 꾸러지며, 행정부처사가 단장, 기획조정실장이 부단장을 맡아 총괄하게 된다.

추진단은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문화·체육·관광 거점 조성, 균형발전, 도민행복 증진이라는 5대 도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10개 분야를 전략적으로 구성했다.

각 분야는 해당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출연기관, 각 분야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추진단 구성 한발 앞선 대응

전략·방향 분야별 토의 개최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아이디어 발굴부터 최종 국책사업 선정까지 체계적인 발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처럼 발굴 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간보고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 정책기획관과 전북연 연구본부장이 총괄 조정 역할을 맡아 분야 간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성이다. 실·국은 분야별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 발굴 및 추진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만큼 오는 12월 “2026년 국

책사업 발굴 워크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책사업 발굴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워크숍 회의는 1부 2부 나눠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 계획 및 분야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아젠다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이뤄진다.

이를 시작으로 각 분야는 9월까지 아이디어 발굴을 완료, 이후 전북자치도는 10월 전문가 워크숍을 거쳐 11월 최종 국책사업을 선정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 회의를 통해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발굴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훈 기자

2024년 7월 10일 전북도민일보

원광대·전북研, 글로벌대학 연계 맞춘

생명산업·지역혁신 추진 협력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글로벌대학30과 연계한 생명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원광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박성태 총장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에서 김보국 연구본부장, 김승은 책임연구위원, 박지경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원광대에서는 유병남 대외협력처장, 우희순 기획부처장, 이동기 글로벌소통혁신실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원광대와 전북연구원이 함께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대학 30 연계 생명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사업 기획·지원 및 연구협력 ▲지역혁신에 대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지역·대학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인적교류 및 사설, 정비 및 공간의 공동 활용 등이 담겼다.

박성태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크럼크인 전북연구원과 협약을 추진



박성태 원광대 총장(오른쪽)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글로벌대학30 본 지정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는 이남호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함께하는 생명산업 육성에 힘을 모아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기관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혁신 모델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원광대가 반드시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혁신=김현주 기자

2024년 7월 11일 전북도민일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과제 세미나

민주 김윤덕 의원 국회서 주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확보하기 위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실태와 과제 세미나'가 지난 9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026년 종료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전북지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연구원은 물론 도를 비롯해 10개 시군 관광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광역관광개발 국가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광역관광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주도형 광역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조직과 지방관광조직을 만들어 광역 및 기초단체가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및 10개 시군 관광 관련 담당자들은 개별사업을 소개하며 추가적인 광역관광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오진숙 문화부 관광개발과장은 "지역관광개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의 요구를 잘 듣고 지역의 관광개발에 문화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19대 국회에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을 제안해 온 만큼 마지막까지 사업을 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화합을 모색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고려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 K-관광의 보석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여 기자

2024년 7월 12일 전북도민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11일 저출생 대응 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채유정 기자

전북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 킥오프 회의

차별과 정책 발굴 주력 방침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2회 인구의 날'인 11일, 저출생 대응 전담팀(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기업유치지원실,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과 등 7개 실과 12개 부서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TF 운영 계획과 정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한 셈이다.

저출생 대응 전담팀은 앞으로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 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총괄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다자녀 가구 공무원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확

대 지원, 전복형 반값 임대주택 건립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산후 단계별 지원 확대, 임신부·영유아 응급의료 안전 환경 조성, 긴급·통합 돌봄 인프라 강화, 일·육아 동행 근무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인구와 저출생 문제는 도정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함께 양육하고 함께 성공하는 전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훈 기자

순창군,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박차'

용역 중간보고회 열고 5대 군정 36개 정책과제 논의
장류·웰니스 관광·일자리·지방소멸 대응 등에 집중

순창군이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그 첫 사건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1일 순창군청 임의회의실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간부공무원 27명 및 정책연구원 전문가 6명이 참석해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순창군의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순창'이라는 비전과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확대 등 5대 군정 목표를 토대로 36개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장류산업은 순창군 특화산업인 장류와 웰니스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웰니스시설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강현산 은자실 치유관광 ▲경천-양지천 생태 축 복원 ▲정동시장 활성화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공살바타 등 조산 등이 포함됐다.

이런 정책들은 순창군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미래 사업들로 순창군 발전상을 그려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순창키즈윌센터(가칭)와 향유리센터(가칭) 등의 정책도 이날 제안됐다.

이는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육아 통합지원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구립년유아종합육상분원 조성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군정 10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자녀



순창군은 지난 11일 간부공무원·정책연구원 전문가와 함께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 적정 없는 순창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회에서 최영일 군수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순창군의 미래 일지러리와 먹거리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남은 용역을 잘 견뎌다"

안 장이언전 정책 구상을 통해 순창군의 미래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이번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용역을 오는 9월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서 실무 협의를 거쳐 모두 40개의 정책과제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순창=우기훈 기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남호 순창군수.

이남호 전북연구위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남호 전북연구위원이 아동학대 예방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 권리보장실이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컨설팅 원장과 지목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남호 원장은 다음 주자로 평생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사भाग의 모인(발령자사모) 이미지 대표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임성희 센터장을 지목했다.

이광호 기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산업 선점을”

전북박, 道에 육성전략 촉구
초격차 기술 확보 비전 제시

전북연구원은 18일 '전고체 배터리, 아차한지의 한계를 넘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며, 폭발 위험이 거의 없으며, 분리와 냉각장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와 에너지 밀도 향상에도 크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2020년 6,160만 달러에서 2030년

498,250만 달러로 연평균 34.2%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기술 경쟁에 돌입해 촉박을 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주력 기술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와 전고체 배터리 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전고체 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 △전고체 배터리 기반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고체 배터리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R&D 투자 확대하고, 핵심 수요시장 맞춤형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에 집

중해야 한다고 재언했다. 또,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기업 투자 지원, 인력 확보, 세무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고체 배터리의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 설립을 제안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위권 전북연구위원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점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호 기자

전북 농생명의 미래 혁신 전세계 알렸다

제1회 전북포럼 성과보고회 개최
장마린 등 주요연사 의견 수용에
스마트팜 확대 첨단농기계 발전
글로벌 푸드 중심지 구축 등 추진

'생명 경제' 실현을 주제로 추진한 제1회 전북포럼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가치, 방향성과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려나'라는 주제로 지난

달 개최한 바 있는 제1회 전북포럼(JSF)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 사들 비롯해 포럼 자문위원, 학산사, 전북연구원, 완경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제1회 전북포럼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연사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도의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핵심 국정 비전인 '장 마린 등 주요 연사들이 제안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미래', '지역 농

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대응 전략' 등과 관련 스미트롬 확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거점으로 첨단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세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푸드메뉴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여한 연사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전북이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국제포럼으로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9개 국 해외연사와 농생명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고 평가한 만큼,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전북포럼'과 같이 국제행사로서 정책상을 확립해 집행면의 고유 브랜드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전북이 농생명산업 혁신의 적지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전북포럼을 전북만의 특색함과 상징성을 지닌 글로벌 포럼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기 기자

2024년 8월 7일 전북도민일보



6일 전북자치도청 공민장에서 '제약바이오산업 현황과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해의 우수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요인 분석 필요”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산업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6일 전북자치도가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에서 강연에 나선 정진현 서울대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 현황과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세계비경구의약 품목의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그는 전북이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를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업 DNA'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가 정신을 고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창업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및 행정 지원 확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상공적인 창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발표는 전북자치도 바이오클러스터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정 교수의 제언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2024년 8월 9일 전라일보

군산시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토론회

신원식 부시장 주제로 개최

군산시가 민선 8기 후반기 '글로벌 신산업과 K-문화관광 거점도시'를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8일 시는 신원식 부시장 주제로 '신성장동력 국가사업 발굴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원과 함께 현안에 대해 정책 아젠다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국가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전북연구원과 1차·

2차 워크숍,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각 분야별 정책동향과 사업계획을 비롯해 주요 이슈 및 현안사업 등을 공유하고 신성장동력 국가사업 발굴을 함께 진행해왔다.

이날 논의한 주요사업으로는 새만금 고품질화 사회서비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새만금 정지상거와 복합물류센터 조성, 군산 청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아시아 근대기억공원 조성, 군산시 KTX 정차역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군산=이재홍기자

2024년 8월 14일 전라일보

“농촌 인구정책에 외국인도 포함시켜야”

전북엔, 이슈브리핑서 방향 전환 주장
도시민→해외근로자 확대 필요
채류 비중 높는데 정책에선 배제
이주정착 등 맞춤형 지원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이슈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의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인 정책 필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인구유형별 인구정책이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간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은 도시민의 농촌 정착화를 위한 귀농·귀촌정책이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인 생활인구가 주목받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 도농교류사업, 농촌관광사업, 농촌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지역우수인재를 모집해 이들의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농업(직물재배업)이 주력 산업인 농촌의 경우,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이에 이번 연구책임 맡은 조원지 책임연구원은 농촌지역 체류 외국인 중 비중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인구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구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책임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유입 정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농촌 인구정책을 '생량·관계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정책', '난순순환체류 외국인정책(B-8)',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정책(B-9)' 등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민 대상 농촌 인구정책은 '관

심, 탐색, 정착, 통합' 단계로 구분해 생량·관계인구, (예비)귀농·귀촌인과 니즈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연하기도 했다.

탐색 단계에서 농촌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인공지능융합기술(AIT) 등을 적용한 위케어인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일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위케어인 마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정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제3국근로자(B-8), 고용허가제(B-9)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주', '적응', '정착', '통합' 단계별 맞춤형 정책사업이 필요한 만큼,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민 및 관련 산업 분야에 취·창업에 대해, 농업 관련 학과의 다문화 특별전형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고,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기자

“전북 ‘K-방산’ 중심지 도약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해야”

전북연구원 백년포럼 중요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은 이미 풍부한 인프라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이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한다면 K-방산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3일 ‘K-방산의 미래 혁신’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9강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진혁 LG넥스원 부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방위산업의 특징과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 부사장은 방위산업을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며, 경기각의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정부 주도 산업의 특성을 설명했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목표로 시작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재래식 무기 국산화를 넘어 첨단 정밀무기 개발 및 네트워크 중심전 대응 능력 강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왔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K-방산은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27년 세계 4위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는 한화, LG넥스원, KAI 등 국내 기업들이 당당한 이름을 올렸다.

K-방산의 강점은 전 무기체계 개발·생산·운영 유지 능력, IT 기술 집적, 가격 경쟁력 등이다.

이에 이 부사장은 미래 전쟁은 기존의 육·해·공 개별적인 전장에서 육·해·공·우주 전 영역이 통합된 전장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해안 감시체계, 개인전투능력강화 분야를 미래 중비 사업 분야로 꼽으며, 각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미래 무기체계 선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진혁 부사장은 “체계통합 기술, 데이터링크 기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지속적이며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로 전북연구원은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전북 공공기관 평가서 5곳 ‘최우수’

전북연구원·사회서비스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5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를 열고 ‘2024년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는 기관 성격에 따라 1유형(경제·산업) 8개 기관과 2유형(사회·문화·복지) 8개 기관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등급별 기준점수에 차이를 두어 실시했다.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은 5개, 나등급은 8개, 다등급은 3개 기관이며, 전년 대비 등급 상승기관은 5개, 하락기관은 4개, 유지는 7개 기관이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5개 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전년 동

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전년 동일), 전북연구원(나→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전년 동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나→가)이었다.

또한 정책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3개 기관이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했고, 7개 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나→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가→나), 여성가족재단(가→나), 정성교육과학기술원(나→다) 등 4곳이었다.

5억 원 이상 재정을 지원하고 상근 직원 10인 이상인 위탁·보조기관(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 교통문화연구원과 상안북지관이 ‘가등급’을 받았으며, 나등급 2개 기관, 다등급 2개 기관이었다.

이번 평가는 사회가치경영 도입을 위한 노력,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과 더불어 전년 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증명해 두고 평가했다. 이광모 기자



전북연구원·5개 종합대학 상호 교류 업무협약

전북연구원이 21일 도내 5개 종합대학(국립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과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종합대학들과 함께 지역학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협약내용은 △연차적인 전북학 교육사업 추진과 상호 협력 △전북학 교육사업 수월 △전북학 교육사업에 필요한 자료 교류 등이다.

김슬기 기자

저출산시대... 2030 여성 핀셋지원 해답

작년 도내 합계출산율 전국 11위 2016년 이후로 출생아 수 ‘급감’

전북연구·저학요인·과제 제시 25~29·30~34 무자녀 비율 ↑ 육아·휴직 등 각종 정책 ‘절실’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30 청년 여성을 위한 핀셋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전북연구원의 이슈브리핑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산 요인과 반동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11위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본격적인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됐다.

전북연구원은 전북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만혼화로 인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 증가다.

둘째는 기암연령(15~49세) 여성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것이다.

또 50(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2대 후반과 3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관여도 타 지역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반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아이를 낳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 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특징도 두드러졌다.

이에 합계출산율 반동을 위한 대응 과제도 5가지로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는 2030대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기암연령 여성과 결혼 장애 분위가 조성과 추출연령대 여성을 위한 ‘빈틈 없는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추가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의 차별화와 2030 무우와국인력 유입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주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전대책 등을 강하게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 이주연 박사는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수 기자

2024년 8월 27일 전라일보

도민이 그린 백년대계 방향은?

전북연 '정책 아이디어 공모' 총 27점 작품집서...7점 선정 연구과제 수행과정 활용 계획

전북연구원은 '제1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정책 7점을 선정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상은 전북형 ONE-STOP 청년 귀농·귀촌 마을 형성 지원정책(일반 부문, 고흥민) 신실 플라우즈 데 이터 센터의 난각 및 케일 재함용 방안(학생 부문, 정현목)이 선정됐다.

일반 부문에서는 계약학과로 여는 전북의 미래: 맞춤형 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태영조) 차별화된 창업 정책 마련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교육포인트제' 운영제안(최용식) 글로벌 K-뷰티 아트 예술제(최라관, 김선관) 전북형 고령친화 관광산업 개발 및 육성(이가을) 청년 건강 사탕 사업(김세라)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이디어 공모는 생명경제 도시 선도, 전북의 백년 대계 설계, 전북의 성장동력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2개 세부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다.

올해에는 젊은 미래세대들의 전북 발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학생부문을 신설했다.

공모기간 동안 총 27점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부문과 학생 부문의 수상 정책을 선정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선도하고 전북의 백년대계 설계를 위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알고자 이번공모를 진행했다"며 "선정된 우수 정책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정 정책 반영 및 전북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활용 등을 통해 도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미수 기자

2024년 8월 28일 전북일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연령대 편셋 정책 강화

전북자치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0.97), 강원(0.89), 경북(0.86) 등 다른 도농복합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광주(0.71), 대구(0.7), 인천(0.69) 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태수 한일장신대 교수,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대응 방향 △전북형 일·생애균형 정책환경 진단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전북여성가족재단이 공동 주최로 27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북도·전북연구원·여성가족재단 공동 주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 개최

고 지역해,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참가율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막래 연구위원은 MZ세대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전북도민의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태수 교수는 전북 지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기업 연봉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여성에게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 저출산 연한대 편셋 결혼지원 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익 교수의 사회로 한국고용정보원, 충남연구원, 경북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저출생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저출생 대응 세미나는 다자녀 가구재정착 표제 도입, 파격적인 주거정책 등 실효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정의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전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도·전북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관 기자

2024년 9월 5일 전라일보

전라감영서 '2024 전북학 주간 행사' ... 강연·문화행사 다채

전북연구원 산하 전북학연구센터는 2024년 전북학주간 행사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전주시 전라감영 내 무대에까지 펼쳐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적인 '전북학'이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북의 혼을 정리하기면서 미래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됐다.

올해는 기획주제인 '개국과 호국'

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인 강연 퍼스 티발이 진행된다. 심도 깊은 주제를 통해 전북의 매력을 알아보는 '전문 강연',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이끌어지는 '대중 강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사들을 초빙해 그들에게 전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물어보는 '명사 강연'이 이뤄진다.

이번 전북학주간 행사에서는 행사

도 병행해 열린다. '개국과 호국'을 주제로 하는 상설 전시, 전북학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발표회 등이 전북학주간 내내 전라감영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색다른 매력을 가진 곳인만큼 섬세한 강연과 문화행사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자긍심을 공유해 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미수기

농어촌 건강·먹거리권 보장 대책 시급

전북지역 '식품사막화' 심각 행정리 중 83% 식품점 부재 지도 제작해 체계적 관리해야

전북 농어촌지역의 '식품사막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데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연구원은 '농촌지역 식품사막화(Food Desert)'의 의미와 과정을 다룬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재 도내 식품사막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선제적인 정책적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칭한다.

지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행정리 5,245개 중 83.6%가 마을에서 식품점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식품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농어촌 가구는 오프라인 식품점점을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78.0%로, 85.9%인 도시보다 낮았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농어촌의 가구는 전체 중 58.0%로 31.8%인 도시보다 커 식품접근성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 농어촌사회의 네트워크 약화, 대형 유통업체의 부재,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공급의 불안정성 등도 식품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은 식품사막 지도를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리의 식품소매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식품 및 생필품 유통시스템을 개선시키면서 주민의 건강관리, 영양교육, 생활불평 등을 위한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식품사막화와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 식품점점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동식 점포 또는 상시 매장으로 운영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건강양양 섭취를 고려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어르신 식품바구니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를 식품품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

기했다.

이를 중앙 물류 허브센터 등을 통해 관리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물품 채널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농촌 주민의 식품 접근성 현황을 정량적으로 수집·관리해 정책 수립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사막화 지도 개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조원지 책임연구원은 "농촌지역의 식품사막은 개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모든 음식물이 없는 지역을 의미하기보다 개인이 식품을 쉽게 구입 가능할지를 의미하고 있다"면서 "식품 접근성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미수기자

지속가능한 '포스트 문화도시' 방안 모색

도·4개 시·군, 세미나 개최

전북자치도가 문화도시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스트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와 전북연구원은 전북 문화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포스트 문화도시 전략 구상을 위한 세미나를 4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주, 익산, 완주, 고창 등 4개 시·군 문화도시 담당자들과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등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도시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전북연구원 장재철 박사는 "문화도시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연와와 협력의 부재로 인해 효과가 제각각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전북 내 각 도시가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북 문화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는 각 도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미수기자

전북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모색 세미나 개최

전북연구원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11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승우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박장규 문화안전산업위원회의위원장, 이종석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체육정책 분야 핵심 인사들을 비롯해 시·군체육회, 도종족단체,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체육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가 발전에서는 김광태 한국스포츠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의 생활체육 정책 방향과 선제적 대응 방안'을, 김선희 국립목포대학교 교수가 '지역과 학교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교체육, 체육행정, 생활체육,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생활체육 분야의 중점 과제와 향후 대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로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생활체육 진흥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체육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준 기자

'전북형 한의약 육성 체계' 5대 추진전략 마련에 주력

육성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 지역인력 역량강화 등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한의약 육성 5대 추진전략'을 본격 구축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출석한 한의약 관련 인력양성 효율적으로 여는데 한의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 전략과 함께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및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근거한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전북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업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비전과 중점과제 계획(2025~2030년)을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전략 및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민연구가 중기하향식 한의약 관련 수요가 급증하는 분위기 속에 도내 한의약인력 양육기원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인력의 16.1%(625명)를 차지, 전국 한의약인력 의료인력에서는 16.5%로 높은 수준이다.

한의원 수는 934명이며, 한약사는 68명으로 전국에서 각각 4.1%, 6.3%로, 한의원, 한의약인력 1인당 1,771명을 한의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용역의 경우 전국 생산량 12.1%를 차지, 농가와 제재면적은 각각 22.2%, 11.3% 수준이다. 주요 생산작물은 감초, 곽향, 길경, 두충, 천

마 등이며, 인삼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원 관련 대학교의 경우 전국 13개 대학 가운데 전북에 3곳에 위치, 미취업 전북은 한의·의료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며 다량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의약 관련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한의약 증진으로 복합한 지역에서의 건강·복지 강화와 산업화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5대 추진 전략은 △한의약 이용지 역시와 건강과 복지 증진 △지역의 한의약 기반인력 역량 강화 △한의약 산업화 기반조성과 혁신성장 △한의원·한약재로 제조·생산 강화 △지역의 한의약 육성과 인력양성 등이며, 이에 따른 세부 과제는 △한의약 특구 조성 △한의약분야 연계 협력체계 구축 △아용자를 위한 지원과 교육에 의한 생산·가공 여건 개선 등 42개가 도출됐다.

전북자치도는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를 집중 점검해 실현 가능한 중점과제 및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규사업은 물론 국가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신병은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점과제를 파악,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며 "한의약을 통한 도민 불편 강화를 물론 한의약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전북연구원 "그린암모니아 산업 중심지 육성해야"

전북을 그린암모니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이슈브리핑 '그린암모니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열쇠'를 통해 그린암모니아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전북의 혁신대거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린암모니아는 탄소배출 없이 수소

를 생산하는 그린암모니아를 말한다.

연구원은 전북이 그린암모니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는 그린암모니아 수급, 2단계는 생산과 수급 병행, 3단계는 에너지 자립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플러스와 화력,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린암모니아산업 실증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김선정 기자

2024년 9월 19일 전라일보

“이성계 역사자산 전북관광 활용해야”

태조자산 활용 정책포럼서 각계 전문가 대안 제시
“대한민국 통합 아이콘… 테마 복합문화시설 건립”

태조 이성계 역사자산이 산재한 전북지역의 지속적인 관광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조선 건국 60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정책 포럼은 조산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 대한 역사대체 고찰과 함께 그가 남긴 시대정신과 역사문화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토론이 이뤄졌다.

제1 주제발표에 나선 이아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성계는 한반도 동북쪽 변두리 일개 무장에서 새 왕조를 세우고 태조로 불리는 역사와 창업 군주가 됐다”며 “전주에는 조선왕조의 뿌리가 되는 경기전·조경묘·조경단 등이 있는 만큼 태조 이성계 문화유산에 대해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발표에 나선 양병관(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 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전국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중 78%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중 다수가 전주에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광개발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태조 이성계를 테마

로 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왕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당 △소소리발원지 콘텐츠 개발 △태조 이성계 리더십 역량 강화 등 정책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제3주제발표에 나선 장준하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조 어진, 조선 건국설화, 전주한옥마을 등 전북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선 역사자원이 보존되고 있다”며 “태조 이성계의 역사자산과 조선문화 콘텐츠를 결합할 수 있는 태조 이성계 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태조 이성계 자산을 활용해 실감콘텐츠, 영화, 게임 등 융합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박금희 전주시청 문화유산과장은 전주시가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태조 이성계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관광정책을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선 이성계리더십센터 연구소장은 태조 이성계를 통해 대한민국 통합의 아이콘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태조 이성계의 건국과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전북의 공약안위 지역 브랜드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서병)은 “앞으로 전주의 정책이 태조 이성계의 교육·개국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조선문화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서병)이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성계리더십센터(센터장 정세람)가 주관했다. **홍미숙기자**

2024년 9월 26일 전북일보

“문화·주거·의료·교통 인프라 늘려야” 전북연구원, 청년인구 확대 방안 제시

전북연구원이 25일 정책브리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청년과 여성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6개 분야 10개 특성과 전략을 제시했다.

25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청년인구는 2만 4236명이 정입한 반면 3만 1351명이 전출해 7115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20~24세 여성 유출이 2754명으로 전체 청년 유출의 69.2%를 차지했다. 주요 전출 사유는 취업(54.1%)이었으며,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67.2%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청년 여성 19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지역 이탈과 정착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자리 부족과 산업 다양성 결여, 문화·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미흡이 주요 이탈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소아과 등 의료시설 부족, 문화 공연 및 소비 인프라 부족 등이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반면 저렴한 주거비와 양질의 주거환경은 정착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연구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창업 등 지원프로그램 확대, 직업문화 개선 사업, 청년 여성 위계개선 사업을 제안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도심 내 공유자전거 사업과 아동 대상 소아과 확대 사업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과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담겼다. 복지·문화 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을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2024년 9월 27일 전라일보

“축구단만 남은 전북… 프로스포츠 인식개선 필요”

전북연구원-전주대 공개 토론회
KCC농구단 이탈로 침체 가속
신생구단 유치 등 필요성 제기

프로농구단 KCC의 부산 이점으로 프로 축구단 남은 전북에서 ‘프로스포츠 붐’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전북연구원은 전주대학교와 함께 25일 대마에서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KCC 이지스가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 전북 관중에게 실망감을 안긴 이후 도내 프로스포츠 구단은 전북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토론회에서는 김성환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이 ‘전북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나눴다.

그는 △프로스포츠 인식 개선 △경기장 환경 개선 △지자체-프로구단 협력 △프로구단 지역 사회 공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토론회에서 최형일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프로구단과 지

체의 역할 정립을, 홍성택 전주대 교수는 프로구단 유치 필요성을, 최우식 현대모비스 대표 변호사는 프로구단 연고 도시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친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토론회는 도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와 계기를 마련하고 구단,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자판”이라며 “도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영호**

“변화 두려워하지 말고 전북만의 브랜드 만들어야”



전북도민일보
비전장조 아카데미 제9기 CVO과형
제15강 이 남 호 전북연구원장

전북도민일보 제9기 비전장조아카데미(CVO) 15주차 강의가 지난 28일 전주 글라스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의 영크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의 수장 이남호 원장은 CVO 원주들을 찾아 “성공적인 리더는 남이 결코 가지 않은 길, 남에게 비관받는 일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유명한 투자 일화인 ‘수이트의 바보짓’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은 윌리엄 H. 수이트는 러시아와 알래스카 관세 제에 대해 알래스카를 사겠다며 수백만 달러의 수표를 들고 알래스카에 자원이 많은 것을 알고 사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수이트는 당시 러시아, 영국 등의 강대국을 제쳐 또는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수이트’는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만 달러를 주고 땅을 사들였고 이를

“**서해안은 소금의 보고
동부권은 재철의 중심
과감한 연구개발 통해
동철사업 시대 열어야**”

알게 된 대다수 미국인들은 수이트를 깨달아 제 비판했다”며 “돈을 주면서 쓸모없는 땅을 산 수이트를 두고 ‘수이트의 냉정’과 ‘수이트의 바보짓’이라고 삼인 조롱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이 원장은 “19세기 말부터 알래스카에서는 금과 은, 철광 등 엄청난 천연자원이 출 세되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금빛과 철, 철광과 금이 아닌 엄청난 보물창고로 통감하게 됐다”며 “반면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



전북도민일보 제9기 비전장조아카데미(CVO) 15주차 강의가 열린 지난 28일 전주 글라스타워에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강해를 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국에게 한 것을 매우 후회하게 됐다. 당시 러시아도 자원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알래스카가 이렇게 보물창고인 것이 밝혀지자 미국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은 알래스카의 자원 뿐만 아니라 군사, 국방면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가지게 됐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북아시아와 일관된 알래스카를 통해 일본, 러시아 극동, 한국 중 아시아 진출

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 공산주의의 총주목으로 떠오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취향으로 소련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 20세기 냉전시 대 때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 의회는 수이트에 사죄하는 결 의문을 발표했으며, 수이트를 조종하던 말은 현재에 들어 ‘신의 한수’, ‘영광한 선택’이라

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수이트 사례를 통해 이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과감한 연구개발로 동철사업(東鐵西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중국 한나라 주제의 열철본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소금과 철을 가진 자기 세상을 지배했다”며 “소금은 표과 함께 전쟁을 상징하고 철과 재철은 고대 역사를 유비한 원동력과 기술을 의미한다”고 입을 열었다.

전북의 서해안은 소금의 보고이고, 동부권은 재철의 중심이라는 것. 이 원장은 “한반도의 70여 개소 재철 유적 중 전북 동부권에 30여 개소가 있다. 전북은 동북으로 생채자원이 펼쳐져 있으며, 서쪽으로 대패산맥을 대표하는 농성산맥, 바이오산맥, 이차천지산맥 등이 끼고 있다”면서 “생태와 첨단기술을 뜻하는 동철사업이 곧 글로벌생태경제도시의 전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철사업은 동서의 강령을 얹어 한 공생발전 전략이자 기업을 견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는 의지”라면서 “또 전략은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는 손자병법과 같이 변화로 변화를 두루위하지 말고 전북이 가장 잘하고 인척민이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연구원**



전북연구원 전경

전북지지도 제공

‘농촌기본소득 공동연구’ 4개 기관 맞손

오늘 전북연구원서 협약 체결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원장 최지국), 전라남도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 등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지방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

고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연구 협약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의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추진해 온 민주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촌활력과 지역순환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농촌지역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4개 연구기관 공동연구 협력으로 지역사회 정책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지난 4일 군산시가 2026년 국가예산·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산시 제공

“부처 예산안 최대한 반영…행정 역량 집중”

군산시,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

군산시는 4일 ‘2026년 국가예산 및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 발굴 의지를 모았다.

김영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부시장과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과 전북연구원에서 발굴한 국책사업에 대하여 토론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2026년 국가예산 발굴목표로 정주여건 개선, 신산업 및 로컬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SOC 및 자연재난 대응 등 총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뒀다.

그 결과 18건에 총사업비 1조 445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사업은 △해상 무인아동돌봄 O&M 인프라 구축 △군산 산북동 화석산 전시장 건립 △전주축산산 진흥구역 지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 △소화원 화강로 개·보수 △공공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새만금 동서1차 10차로 확장 △군산 큰들술 조성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등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사업들은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군산시·전북자치도·정기관 조정을 강화해 예산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준 시장은 “정부지원의 타당성, 시급성 등 사업 필요성을 논리를 개발해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훈규 기자**

2024년 10월 11일 전북도민일보

“인구 감소 해결책 ‘장소기반산업’ 육성 대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41호

전북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장소기반산업’ 육성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장소 이동성을 최소화한 지역별 차별화된 장소기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소기반산업은 특정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기존 산업은 생산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심화시켰다”며 “장소기반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증가시켜 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전주에서 열린 ‘장소 트래일라이프’는 장소기반산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다.

2022년 1회 대회에는 150여 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2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성장했다. 트래일러들의 체류를 위한 트레일 빌리지 조성하고 함께 장비, 의류, 기기 등 다양한 산악 레저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장인들의 작품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 ‘프롬하어’, 연안 어업을 위한 선장을 육성하고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봉선장’ 등 장소기반 제조산업,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독서 체험을 제공하는 ‘책마을 해리’, 시골 생활 유희트 채널 ‘오스콘’ 등 장소기반 콘텐츠 산업도 주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북연구원은 장소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의 차별화된 장소성 브랜드 구축 스텝업 컨설팅 지원, △지반소멸대응기금 활용 시범사업 추진 △성공 모델 구축 △장소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2024년 10월 15일 전북도민일보

전북연구원, 군산산단 체류인구 징주와 연구

군산시 징주회를 위한 ‘군산시 산단 체류 인구의 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가 전북연구원 연구하는 “2024년 하반기 정책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군산시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중인 근로자 가운데 편의 주거 근로자들의 군산시 징주를 유도하고 정책적 방안제시를 통한 인구 활력 방안을 목표로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8일까지 정책과제 반영을 위한 군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심층 인터뷰 회담자 2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군산시 산단 기업에 근무하며 주소지가 관외인 근로자로, 참가 사례로 1만명이 지급된다.

군산시 나온주 키움오피스텔장은 “이번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타·시에서 출퇴근하는 산업단지 편의 근로자들의 징주화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군산=정문호 기자

2024년 10월 16일 전라일보

전북 첨단바이오산업 연계 의료용 대마산업 중심지로

헬프 발전전략심포지엄

국내 대마 규제개선 선결

첨단의약소재개발 필요

의료용 대마(헬프)를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정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함께 과학관 규제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5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헬프)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대마로 사용되는 헬프(Hemp)는 항암신성 물질인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으로 마지막 남은 천연물 의약품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의료용 대마시장규모는 오는 2030년 4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가 나서 대마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료용 대마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헬프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의료용 대마산업을 전북의 특화바이오산업의 주축으로 견인할 여건이 타워했다”며 “산재적 전략을 수립해 대마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약학대학 정책연구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국내에서도 대마 규제개선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식 개선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약학대학 심한주 교수는 대마 내에서 이차효과 있는 첨단 의약 소재개발을 설명하며 의료용 대마산업의 다각화를 피력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의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많고 새만금 등 대마 소재 공급이 가능한 입지여건이 타워했다”는 등 의료용 대마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라북도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의료용 대마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미수 기자

2024년 10월 16일 전북도민일보

전북자치도·전북연구원 도-시군 탄소중립 포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15일 ‘도-시군 탄소중립 포럼’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연계한 시·군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 담당자,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정훈 기자

2024년 10월 18일 전북도민일보

경제발표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지방세수·입주기업수 등 경제적 성과내야”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17일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과 지역 상생발전 및 경제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34년 발표를 가졌다. 이날은 원장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지속적으 추진해 온 혁신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지방세수와 입주기업수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성과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이 원장은 “혁신도시의 주요 사업은 추진 여건이 양호한 사업을 중심으로 13개 중 9개를 완료한 데 대해, 가족동반 이주와 함께 정주인구가 안정되고 지역물류 우선구제로 상생발전이 진전됐다”며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혁신도시 지방세수는 315억여원으로 전국 평균 380.

7억원에 비해 부족하고, 260개 기업이 혁신도시 시 내 입주하면서 전국 혁신도시 입주기업 평균 372개사보다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혁신도시 관여 집권시 제2호 상생발전과 정주여건을 한 데 개선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이 원장은 “고졸자까지도 접근성이 높고 있고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충북을 제외하면 가장 적다는 점을 통해, Super-BRT 구축으로 혁신도시 간 경시정 지역이 확보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라고 밝혔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전주역~동산역~(삼례역)~익산역~(대야역)~군산역 서해안철도를 1월 2024년 2월 운행을 하는 등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이 전무한 데 대해 앞으로 삼지 계획이 있어 언제 어디까지나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시민들의 가장 큰 수요로 보이는 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전주, 완주를 통합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119 안전센터 원격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할 수 있다”며 “소아 질병환자의 야간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역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내 방·의급 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교육 여건이 여전히 충분해 조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후속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의 타 혁신도시가

연구만 명 당 0.5곳의 학교 수를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7곳에 불과, 여타지역도 전국 평균 10곳에 비해 8.6곳이 미달한다”며 “다행히 유치원은 평균 1.5곳에 가까운 1.3곳이 운영되고 있어 안정화 수준이지만, 꾸준한 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와 고밀적인 위태로 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고학력자 제거와 혁신원정 개선 등 대중문화시설을 시·군, 학회 모니터링 운영으로 빈·곤 가버넌스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주에 맞는 주도혁신 혁신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역의 상황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수 밖에 없는 내부적 여건에 더불어 혁신도시별 특화된 등 외부적 여건에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2024년 10월 22일 전라일보

익산도시공단-전북연구원, 29일 시민 소통세미나 개최

익산도시공단이 지역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산도시공단은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 실현을 위해 공단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오는 29일 국가문헌문화재 등

합정수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공단은 이날 전북연구원과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함께 '익산의 미래 발전 방향과 도시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익산=김종순기자

2024년 10월 31일 전북일보

도, 전국 첫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

내달 7일...국가직 등 정보 한눈에

국가직부터 지역 공공기관까지 공직 취업정보를 총망라한 채용 설명회가 다음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부터 청사 공연장과 대회의실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

'피할수 없는 취업, 어서가자 나도 공무원'의 줄임말인 '피어나'라고 명명된 이번 설명회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에 맞춰 도내 우수 인재들이 공직

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 채용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인사혁신처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 행정기관 9개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16개가 참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및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직 및 지역인재 임용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안내, 교육행정직 및 직업계고 임용 시험에 대한 내년 채용 계획과 제도



윌라스트 정윤성

변화, 면접시험 주요 포인트 안내,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 모의면접행사(사전 QR코드 신청)등의 행사가 진행된다.(문의=전북자치도 공무원 채용팀 063-280-4218~9) 백세종 기자

2024년 11월 1일 전북일보



지난달 30일 열린 부안군과 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안군 제공

부안군,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 주요 현안 논의

부안군은 지난달 30일 전북연구원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날호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부안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연구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시책 발굴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은 △부안군 고려청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재향센터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대응 방안 등으로 전북연구원의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부안군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연구원도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 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홍석현 기자

2024년 11월 4일, 전북일보

외교·안보·민생 이슈, 전북만의 해법 찾는다

전북연구원, 백년포럼 특별기획 4회 걸쳐 진행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가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외교·안보와 상생·민생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한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북관계 경색, 미중 패권경쟁과 등의 글로벌 외교·안보문제가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백년포럼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기획은 오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도청 대강

당(오전 8시)에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혁백 정치학자(고려대 명예교수), 정동원 국회의원, 유명 유튜브 채널(영수네 북역방) 운영자인 유튜브 이광수 대표가 강연에 나선다.

만저 정 전 장관은 오는 5일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 강연을 예정이다.

이어 12일 위 교수는 '다중 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질

적 대외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이 지역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과 다음달 3일에는 전 의원과 이 대표가 '전북 대도약과 원주-전주 통합',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동산시장의 통합 및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은 전북의 백년대제를 위해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위, 전북연구원·전주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매월 3회 오전 8시부터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에 일반 도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백세호 기자

2024년 11월 8일, 전북일보



정읍시·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전북연구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현안·신규사업 추진 방향 논의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삼국면 크인 전북연구원은 지난 5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시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금현 부시장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4가지 주요 사업을 다뤘다.

논의된 사업은 ▲정읍 구월초 건축재 발전방안 ▲신장동지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터 신축 ▲정읍형 치유농업 플러스터 조성 등이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 논의를 점검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송금현 부시장은 "전북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정읍시의 미래 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전북연구원도 정읍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

혔다. 정읍=임정훈 기자

2024년 11월 11일, 전라일보

전계공-전북연구원, 주택정책 방향 모색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은 지난 7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주택 공급 확

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청년·외국인 근로자 등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공사의 역할'이라는 주

제로 지역 현안문제 소통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실시한 '현장 중심 경험' 및 '신사업 발굴 TF팀 운영'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성과를 소개했다. 황성조 기자

2024년 11월 11일,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한을 시장과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김보국 연구본부장, 김수은 책임연구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현안사업은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공공형 방과후 라닝센터 ▲금강하류 침수예방 대책 강구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동향, 대응계획을 비롯해 행정사항을 제시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익산시는 사활망교 교통망을 비롯해 주요 기반시설이 탄탄하게 갖춰진 도시"라며 "익산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의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적극 연대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2024년 11월 13일, 전북일보

전북도,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 신청서 제출

서울시와 국내 후보지 경쟁
대한체육회, 내년 2월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지 신청서에 대한 제출을 마치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1차 경쟁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유치 신청도시에 대한 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등 심의를 벌인 뒤 자체 국제위원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후보지를 선

정한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첫 방문인 평가위원회 심의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신청서에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과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북이 세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사항인 국제스포츠 이벤트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시설 자원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도는 2036 올림픽 슬로건인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Go

Beyond. Create Harmony)'를 소개해 세계인이 한국의 맛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유지를 통해 전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약 42조 원에 이른다고는 예상했다. 이는 올림픽 기간 동안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장 먼저 현장실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13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고창군과 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지속가능 미래 위한 전략 마련”

군-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고창군과 전북연구원이 고창의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췄다. 13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심익섭 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현안 사업 다섯 가지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는 고창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기후위기 대비 및 기업 유치와 경제적 자원을 확보를 위한 고령형 건설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 △고창을 대표하는 도시정원 ‘꽃정원 단지’ 활성화 방안, △금강산업 선도를 목표로 한 김치전원 공급단지

의 중장기 운영 방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지구 조성 방안 등이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고창은 복분자와 홍천장어로 유명할 뿐 아니라, 최근 ‘K-김치’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창의 새로운 역사에 전북연구원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심익섭 군수는 “민선8기의 주요 성과들은 전북연구원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창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로, 고창군과 전북연구원의 협력에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전북도 성과 인정받아

보전복지부 평가 ‘최우수’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학 산업 육성의 선도적 성과를 인정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내 한의약 산업의 강점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립한 종합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특화된 한약재 재배와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도는 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들을 기반으로 한 한약재 생산시설의 현대화, 한의약 전문가 협제체 구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2029년 한의약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수립, 한의약 산업의 장기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이준서 기자

소비자 “기름값 상승 걱정”

휘발유값 리터당 1623원 소폭↑ 전북연구원 “증가폭 둔화 전망”

전국적으로 주유소 평균가격이 8주째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주유소 기름값은 전주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유류세 인하율을 부분환원하면서 도내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스에 따르면 11월 세 배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 당 1623원으로 전주(1617원) 대비 6원, 경유는 리터 당 1458원으로 전주(1460원) 대비 2원 상승했다.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름 값이 지난 10월 24일 처음으로 시작된 리터 당 휘발유 값이 1623원, 경유가 1458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47원이 올랐다.

실제 국제유가 변동률과 유류세 부분환원 조치로 인해 이 기간 환원분만큼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가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오른 기름 값에 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 박배일 대표 김모(50·남)씨는 “다들 주유도 기름 값이 더 올랐을 수 있는데는 주유소 사장의 말에 발뺌부터 걱정이다”며 “이동 거리가 많아져 자원은 기름 값과 고물가에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유류세 부분환원 조치도 오는 12월 까지 나머지 부분도 환원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기름 값 인상은 볼까 봐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량구매에 대해 판매업체는 많은 국제유가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루비유가 75.17달러로 전 주 대비 1원 11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내년 1분기까지는 주유소 기름 값이 안정될 것이라만 시각이 우세하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러시아·이스라엘 전쟁과 중국 경제 약세상 등의 요인으로 원유 처리량에 국제유가 변동성과 공급의 지속으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현기자

“지·산·학 상생 플랫폼 구축 필요”



세진 주재영팀장 나선 김수은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선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하윤환 기자

김수은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선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연체(RISC)는 산업 및 대학 등의 연계가 필요하며 민·군·과·기·업, 연구기관 등이 협력을 만들어 유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전북자치도의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신약의 연구가 필요하고 공역별 일차원 인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지·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의 수요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학·산, 공역별 일차원·인제·지, 지역·대학·산업·학·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의 수요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지·산·학 협력을 위한 지역·대학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산·학 상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산업·학·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의 수요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8대 특화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부분별 인재양성의 전문인 및 체계화

와 대학의 신약개발 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대학의 지역·대학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8대 분야 연구·개발·고급 인재 양성, 실무 인력 양성,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등 혁신과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주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주력산업분야 학생 참여 R&D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인재 원소를 지원체계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수은 박사는 “교육부와 연계협력을 통한 대학 지원체계 수립, RISC 추진체계 총괄 관리 및 지역·대학·산업·학·산·학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재언했다. 김윤수 기자

2024년 1월 10일, 전북도민일보

동철서염(東鐵西鹽) 전북의 백년대계(百年大計)

사회칼럼



이 남 호
전북연구원장

“
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동철서염이
오윤리 원 브랜드이자
혁신의 선도자이다.”
”

우리는 늘 선진국을 추격했다. 선진국의 혁신을 한발 앞서 받아들이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이 개발도상국 한국의 낮은 원가와 조화를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원가와 시간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추격도 받고 있다.

‘추격의 시대’에서 ‘추월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자기 혁신이 없어 선진국의 혁신을 받아들이는 전략의 결과는 영원히 아류이다. 혁신을 멈춘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진 예는 차고 넘친다.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이 필요하다.

추격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 하나, 선도자는 혁신이 핵심이다. 혁신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서 실현된다. 절대적인 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경쟁자를 이길 방법은 없다.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혁신에는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류 생활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학제적 접근도 필요하다.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들어 2023년 미국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농기계의 테슬라 ‘존 디어’가 좋은 사례이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IMF 시기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으며 정부를 성토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정부처럼 지역에서도 경제가 어려워 미래의 투자를 가장 먼저 줄인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연구개발에 관한 관심을 뒷전으로 밀어놓기 일쑤이다.

농부야사 침권종자(農夫飢死 寢厥種子),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배고 죽는다’라는 뜻이다. 정약옹이 편찬한 속담집인 ‘이담속찬’에 나오는 말로 후손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없이 미래 막거리도 없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전북특별자치도, 과감한 연구개발로 동철서염(東鐵西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소금과 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다. 이른바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의 염철론(鹽鐵論)이다. 소금은 물과 함께 생명을 상징한다. 철과 제철은 고대 역사를 휘바꾼 첨단과학기술을 의미한다.

전북의 서해안은 소금의 보고이고, 동부권은 제철의 중심이다. 한반도의 700여 개소 제철 유적 중 전북 동부권에 300여 개소가 있다. 지금의 전북은 동쪽으로 생태자원이 펼쳐져 있으며, 서쪽으로 마래산업을 대표하는 농생명산업, 바이오산업, 청정에너지와 이차전지산업, 모빌리티산업 등이 커가고 있다. 생명과 첨단기술을 뜻하는 동철서염이 곧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전략이다.

동철서염은 동서의 감정을 연계한 균형발전 전략이자, 가난을 강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는 의지이다. 가난하로 지원해 달라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전북이 가장 잘하고, 전북만이 할 수 있는 오윤리 원 브랜드(Only One Brand)를 만들어야 한다. 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동철서염이 오윤리 원 브랜드이자 혁신의 선도자이다.

2024년은 선도자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리는 해이다. 전북의 현실을 날카롭게 살피고, 합리적인 방법론으로 미래를 조망하여 새로운 소금과 철을 발견하는 혁신의 길,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일보

전북특별자치도 건도와 조선 건국자 ‘태조 이성계’ 자산 선점

(建道)

이승만부터 가까이는 정기스칸, 미국의 워싱턴과 스웨덴의 구스타프 1세 바사, 그리고 앙골라의 네토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국가의 건국에 깊게 관여한 이븐바 건국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 공통점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화폐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가의 건국자는 그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에 상징적인 존재이다. 모두에게 잘 알려진 워싱턴 D.C와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이름을 딴 로마, 불가리아 건국자의 이름을 딴 바르페스트라기 삶의 공간 그 자체를 건국자의 이름으로 바꾼 예도 쉽게 확인된다. 이렇듯 국가의 건국자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역사적 시공간을 공유하는 한반도에는 어떤 건국자들이 있었을까? 고조선의 단군왕검에서 시작하여 고대의 온조, 비류, 주몽, 박혁거세, 김수로, 후삼국의 견훤과 공예 그리고 태조 왕건과 태조 이성계까지, 이들은 모두 한반도에 성립된 국가들의 건국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건국자들 중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기고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색어트렌드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대표적인 건국자인 ‘이성계, 온조, 박혁거세, 견훤, 왕건’의 키워드 검색 주의를 각각 살펴본 결과, 태조 이성계는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검색량(33.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왕건(25.9%), 박혁거세(21.6%)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각인되어 있는 건국자가 태조 이성계라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조 이성계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함흥차사’는 일상적인 사자

성어가 되었으며, 이성계와 연관된 다양한 설화는 우리의 삶 속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에는 이성계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태조 이성계의 기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그의 어진과 경계전, 마이산과 황산대첩, 뜬봉샘 등 전북은 태조 이성계를 오롯이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성계 리더십 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의 약 76%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성계와 전북의 가까움을 넘어 필연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2024년,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建道’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선 건국의 상징인 ‘이성계’가 주목되는 것은 필연적 관계의 연장선일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도약을 준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兩倍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이 엄원해도 얻을 수 없었던 이성계와의 필연적 관계를 가진 전북이, 앞으로 이성계 자산을 선점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태조 이성계, 이들이 함께 걸어가게 될 새로운 역사가 기대된다.

소상공인 정책 ‘지원’ 넘어 ‘육성’으로 바뀌어

경제판도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
경쟁환경의 변화,
지역경제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대내외 경제 불안정, 인구구조 변화 및 디지털화 진전 등에 따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성을 보유한 소상공인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매출감소, 영업비용 증가 등 다중 부담을 겪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ICT의 발전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 소상공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취향·소비 패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도내 총 사업체 중 96.2%, 고용의 61.5%, 매출액 36.7%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도내 소상공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복지차원의 정책 즉, 경영안정자금지원, 경영위기관리,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단기적·개별적·분절적 형태로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지원에 따른 경영개선효과가 지속하거나 사업성과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확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2021. 2. 5. 시행)하였다. 동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하고 기업가정 소상공인 육성, 브랜드 상권 조성,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내외 경제·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소상공인 정책의 기초 또한 변화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차원의 접근보다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혁신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창업단계부

터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개별 단위에서 업종단위, 상권단위로 규모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상권 활력 창출 등 지원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활동 주무체가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지역소상공인의 폐업은 지역상권, 지역고용 등 지역경제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최전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복지적 성격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못하였다. 소상공인은 업종의 편중성, 규모의 영세성, 낮은 진입장벽 등의 특징을 가지며, 외부환경 변화 및 경쟁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지역경제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욕의 빅 애플과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

빅 애플(Big Apple), 세계적인 대도시이자 세계의 경제, 문화,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의 별명이나 브랜드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즉, 거대한 나라에 열린 가장 탐스러운 열매라는 뜻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사용되다가 1970년대 뉴욕 관광국의 관광 브랜드화 정책에 의해 ‘뉴욕 = 빅 애플’이라는 등식이 상용화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빅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뉴욕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매력을 음미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브랜드화 정책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브랜드는 ‘빛의 도시(La Ville Lumiere), 파리’,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황금의 도시, 두바이’ 등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과 도시를 연계시켜서 도시브랜드를 제고시키는 방식은 그 선호도가 매우 높다. 투입되는 예산과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아서 매력적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에는 건국의 아버지이자 페루, 칠레 독립의 영웅 ‘호세 데 산 마르틴(San Martin)’이 있다. 그의 이름을 딴 ‘산 마르틴 거리’, ‘산 마르틴 공원’, ‘산 마르틴 광장’ 등이 즐비하다. 산 마르틴을 가성비 높게 브랜드화 한 것이다. 국제적인 도

기고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시 워싱턴(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물창고이자 그야말로 가성비의 대명사인 알래스카에는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윌리엄 셰어드(William Seward)의 이름을 딴 도시, 도로, 다리 등 공공 시설물이 차고 넘친다.

우리 지역에는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첫 장에는 “이성계는 전주의 대성(大姓)이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왕조는 이후 전부를 ‘통폐지관’으로 존중했다. 진안 마이산(통금척), 장수 돈봉샘(봉황), 일설 상이암(성수만세) 등에는 조선의 건국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태첩을 거두었고, 전주 오목대에서 승전잔치를 벌였다. 군산과 익산에는 진포대첩이, 순창에는 만일사(고주장)가 있다. 원주 태조암, 부안 성계폭포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의 약 76%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이다.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으로 이름이 바뀐 전주 월드컵 경기장, 국내외 프로축구 경기가 전파를 타고 국내외로 실려 나가고, 전주의 판문에서 ‘태조 이성계’를 마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그에 뒤따르는 효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태기의 명문 구단이자 김민재 선수가 활약했던 갈라타사라이 홈구장은 ‘아타튀르크 스타디움’으로, 태기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이름을 따고 있다. 우리가 김민재의 이름을 연호하며 아타튀르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 뿐만 아니라, 향후 건립 예정인 전주의 신역사(新驛舍)와 전주 컨벤션센터, 조선 왕실의 땅에 지어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등을 ‘전주 이성계역(驛)’, ‘전주 이성계 컨벤션센터’, ‘전북대 이성계 국제컨벤션센터’까지! 뉴욕의 빅 애플을 넘어서는 전북의 빅 애플, 태조 이성계로 물든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대해 본다.

2024년 5월 29일 전북도민일보

국내 유일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주목해야

전북은 지금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
새만금이 한중산업협력
단지를 발판으로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생명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시(关系)의 이해와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중국 문화에서 판시는 단순한 인맥 네트워크를 넘어서 상호의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판시는 'Give & Take' 형태의 '얹은 판시'와 상호신뢰로 구축된 '깊은 판시'로 구분할 수 있다. '얹은 판시'는 중국식 '만만다'로 충분한 소통과 상호 검증의 시간을 거쳐 신뢰를 구축해야 만들어진다.

2024년 5월 28일 대한민국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대통령은 중국 리 총리와 상호화담의 시간도 가졌다. 중국과의 신의 기반을 공공이 다지기 위해서이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중국 장쑤성(江蘇省)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지난 5월 6일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장쑤성을 공식 방문하는 등 올해는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은 지난 30년간 이른바 판시를 공고히 하여 왔다.

장쑤성은 지방정부이지만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2조 8,200억 원(약 2,400조원)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중국 내에서도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이다. 또한 장쑤성은 중국 전체 도시(市) 중 한국과 가장 많은 교역이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전북자치도와 장쑤성 두 지역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깊은 판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은 자매결연 외에도 한중FTA산단으로 알려진 한중산업협력단지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한중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체결된 한중FTA 협정문을 근거로 지정된 바 있다.

이때 한중산업협력단지로 한국에서는 전북자치도 새만금이 유일하며, 중국은 장쑤성 연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세 지역이 지정되었다. 연타이를 비롯한 중국 세 지역에는 7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새만금에 입주 또는 투자협약을 맺은 중국기업은 10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대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하면 전북자치도 특히 새만금과 투자유치

를 상호 협력을 위한 가치는 매우 높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회로 전북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장쑤성과 교류 협력을 넘어 경제 협력의 관게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청사진으로 양 지역의 상호 이익을 위해 국내 유일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위한 두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자금지원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만금과 세 개의 중국 측 한중산업협력단지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만금과 연청의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특히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의 지난 30년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은 양 지역의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시작으로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이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새만금이 한중산업협력단지를 발판으로 한중교류를 넘어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생명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2024년 6월 20일 전북도민일보

지역인재 채용제도 광역간 경계 없애야

사회칼럼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
지역 청년과
지역의 우수 인재는
지역균형 발전의
마중물이자,
수도권 편중 해결의
실마리이다
”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은 우리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다.

전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가 거주하고 있고, 지역 총생산(GRDP)과 일자리도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수도권에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그 격차는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고,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였다.

2014년 10.2% 수준이었던 전국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률은 제도가 도입된 첫째(2018년)에는 23%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40.7%로 증가하였다. 의무 채용목표치 30%를 훌쩍 넘긴 수치이다.

한 해 청년 9만명 수도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9만 명가량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수도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비율도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실효성에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공공기관별도 채용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별 채용인원 수도 그 격차가 크다.

예를 들면 2023년의 경우, 대전 194명, 경북 140명, 광주·전남은 141명을 각각 채용한 반면, 전북은 고작 32명만이 채용되었다. 대전의 1/6, 경북과 광주·전남의 1/4 수준이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 총인원이 5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특정대학 출신 인재채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남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의 경우 채용인원의 67%가 경상대 출신이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여타의 경우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셋째,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채용되는 분야가 특정 전공영역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에너지분야 전공 졸업자에게,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가 소재한 부산은 상경계 졸업자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역 이전 정책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완화(특히 청년인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러한 취지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지역인재의 정의와 범위를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비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범위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초광역화 하면 일자리 늘이나

광역 간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화 한다면 지방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2023년 기준으로 전북지역 대학생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마련한 고작 32개의 일자리 채용고를, 그것도 상경계열과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들만 풀 수 있었던 것이 약 천여 개의 자리로 늘어나고, 전공분야도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는 특정분야 전공자들에게만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문제라든지, 공공기관들이 특정지역의 특정대학 출신을 위주로 채용하는 인적자원의 폐쇄성 등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청년과 지역의 우수 인재는 지역균형 발전의 마중물이자, 수도권 편중 해결의 실마리이다.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 범위를 광역의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화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필링 코리아, 필링 캠퍼스'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세계한상대회'로 더 잘 알려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다.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행사지만 '필링 코리아(Peeling Korea), 필링 캠퍼스(Peeling Campus)'의 컨셉으로 준비하면 매우 매력적인 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거주하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역 디아스포라'가 주요 참여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본래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전체 한민족의 13%에 해당하는 약 750만 명의 동포가 180여 개국의 나라에 진출하여 살고 있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명칭을 변경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전 세계 한인 기업인 3,000여 명이 오기 때문에 국내외의 관심이 매우 크다. 참가업체도 제조업, 4차산업, IT, 금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동로 기업과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인 기업도 참여하는 상생의 자리가 되었다.

이렇다 보니 유치경쟁도 아주 치열하다. 이번에도 인천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온갖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주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 지역의 경제영토를 세계 전

기고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역으로 확대시키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꼭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에 변변한 대형 컨벤션 하나가 없어서 대학의 운동장에 에어돔(Air Dome) 텐트를 치고, 큰 국제 행사를 치러야만 하는 점에 대하여 같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세마군 캠버리 사태의 악몽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적인 망신살을 뻗어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고,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발상을 전환해 보자. 오히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보자. 대학 캠퍼스에는 젊은 인재와 생동감이 넘친다. 전북대학교의 경우만 해도 무려 2만 명가량의 젊은 청년들이 상주하고 있고, 교직원을 포함하면 약 3만 명이 생활하고 있으니 생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도내 대학들과 연계할 경우 유사 이래 가장 활력이 넘치는 대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캠퍼스는 지·산·학(地·産·學) 연계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여 사회에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한상(韓商)을 꿈꾸는 한인 청년들의 롤 모델이 되고자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로서는 최적지가 되는 것이다.

또 결코 박봉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더 있다. 전북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로 유명하다. 정문, 건지광장, 국제컨벤션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건물들이 전통 한옥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게다가 주변의 덕진공원과 전주는 다른 도시들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한국적 정취가 넘쳐난다. 점차 한민족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한상(韓商)들에게는 한산음료와 같은 청량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2023년 세계한상대회는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심감을 안겨 주었다. 실주된 명예를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지역의 브랜드와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필링 코리아, 필링 캠퍼스'의 가치를 내걸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젊음이 넘쳐나는 대회로 준비하자. 그러면 컨벤션이 아닌 운동장에서 지를 수밖에 없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는 디태일이다.

로컬푸드 성공 DNA를 로컬에너지에도

사회칼럼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

전북은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로컬에너지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북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리며 주목받아 왔다. 완주에서 시작된 로컬푸드는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무척이나 단순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 없이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해 시민들의 먹거리와 장바구니 걱정을 덜어주었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푸드에서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로컬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2000년 중반 밀양 송전탑 사태를 토착이 기억할 것이다. 수도권은 사립과 기업이 집중되나, 필요 전기는 비수도권에서 공급받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민 기피 시설인 송배전장을 필수적으로 확충해야만 한다. 한재 체계가 유지된다면, 비수도권은 주민 기피시설만 증가하고 전력을 얻은 수도권은 기업과 인구, 소비가 집중될 것이다. 전력 수입의 불균형이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력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 분산에너지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유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지난 6월 시행되었다. 에너지를 멀리 운송하지 않으면 효율도 좋고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동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기를 많이 생산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도 있어 지자체는 효과적인 기업유치의 인센티브를 손에 쥐게 된다. 또한 오늘과 같은 불발더위에 전기로 폭탄에 냉가습을 않는 시민들의 격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로컬에너지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에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4개 시군에 크고, 작은 재생에너지가 조성되어 전북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1위이다. 더불어 전북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혁신기관도 보유해 새로운 모델 구상과 추진에 유리한 환경도 갖추고 있다. 때마침 전북은 지난 6월 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인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준비도 해나가고 있다.

다만 원자력, 화력 등 전통적 에너지 생산시설이 없어 전북의 전력 자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통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하는 시대에 전력 미자립은 에너지 전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이 에너지 분권 실현과 일련된 노력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로컬에너지의 자산·소유 모델도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촉진책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과 연계하여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전력소비가 많은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분산에너지 모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특례 등 고도의 자치권을 이미 확보했다.

전북의 햇빛, 바람자원을 경제 자산화하고, 부가가치의 이윤은 지역으로 환원하여 자치권을 통한 에너지 분권과 재정 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전북의 로컬푸드 성공 DNA를 로컬에너지로 확산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2024년 8월 1일, 전북일보

철의 왕국 가야, 그 정체성을 전북에서 찾다

지난 2023년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당당히 등재되었다.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는 고창 고인돌유적(2000년), 백제 역사유적지구(2015년), 한국의 서원(2019년), 한국의 갯벌(2021년)에 이은 다섯 번째 쾌거이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7개의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우리 전북의 남원시 아영면·인월면에 위치한 '두라리와 유곡리 고분군'이 당당히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의 대성고분군 등 영남지역 가야고분군에 비하여 그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북의 가야고분군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영남지역의 가야 고분군에 비해 결코 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OUV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변국과 자를 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와 가장 부합되는 곳이 바로 두라리와 유곡리 고분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혹은 '가장 큰 규모'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 전북이 거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올곧은

기고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역사성과 진정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에서 고대의 정치체인 '가야'를 수식하는 표현에는 100% '철'이 등장한다. 가야를 '철의 나라' 혹은 '철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다. 이는 그동안 이어진 가야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수많은 철제 농공구와 무기류, 마구 등이 출토되면서, 고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당시 사회의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철 문화를 바탕으로 가야가 성장 발전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철의 왕국 가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철 생산 유적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원 두라리와 유곡리 고분군이 위치한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수많은 제철 유적의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전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학술조사를 통해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확인된 제철유적(철 생산유적)의 수만

300여 개소에 달한다. 그 유적은 철 성분이 매장된 백두대간,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분포하며, 전국 어느 곳보다 그 밀집도가 높다. 철광석을 채광하여 철기를 생산했던 전 공정이 한 유적 내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 제철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미진하여 가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기에는 이만 감이 있지만, 최근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을 비롯한 다수 유적에서 가야 토기를 비롯한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된 바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처럼 전북 동부산악지대는 고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력의 기반이었던 철이 매장되었던 지하자원의 매개였다. 삼국시대 가야, 신라, 백제가 각축을 벌였던 이유도 바로 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된다.

한편,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은 가야라는 정치체가 지난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철의 왕국 가야의 DNA를 가장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 제철 유적을 모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는 가야와 철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건립이 주요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과정, 축제 등의 대중화 행사, 홍보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전북이 가진 가야의 정체성, DNA를 알릴 필요가 있다. '철의 왕국 가야, 그 뿌리지는 전북이다.'

2024년 8월 6일, 전북도민일보

독(毒)이 약(藥)이 되는 의료용 대마산업

사회칼럼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에서
의료용 대마 연구가
시작됐다
”

지구촌을 공포 얼어붙게 만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흔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바이오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각종 전염병과 인구고령화는 만성질환 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이 조직공학, 유전자 치료, AI 등 첨단 기술과 융합돼 진화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 바이오산업의 2030년 세계 시장규모는 약 4.4조 달러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화학제품산업을 합친 3.6조 달러보다도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분야 '바이오 복합단지' 지정에 도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가노이드는 장기유사체로서 산악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 인공장기 개발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비록 초격차 기술의 산업 전환이 아직은 이르다는 정부 판단으로 지정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값진 결실도 맺었다. 대규모 R&D 자금·창업펀드 등의 과감한 지원, 국내 바이오 선도기업의 투자유치,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혁신역량을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북만의 독보적인 바이오 '뎀발'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

대전환이 절실한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분야가 사실상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미답의 오가노이드와 '의료용 대마(헴프)'다.

의료용 대마는 통증 관리, 신경계 질환 치료, 암 관련 증상 완화 등 다양한 의학적 효능이 입증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마를 '마약류 관리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대마는 천연물 신약자원의 마지막 남은 보루다. 이런 점에서 의료용으로서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 각국의 법적 규제 완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글로벌 의료용 대마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2032년 시장 규모는 404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매년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캐나다도 국가가 나서 대마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추세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 등에서도 규제 개선을 통해 관련 연구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실상 미답상태인 국내에서 전북이

의료용 대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이미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에서 의료용 대마 연구가 시작됐다.

전북, 전북대 등에서 대마의 연구와 임상, 소재 공급 등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정읍에는 의료용 대마산업의 전초기지로 이어질 수 있는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은 의료용 대마의 소재 공급 기지로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및 인증,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특히 특례를 통한 규제특소특구 지정 등으로 다양한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특례를 만드는 일도 시급한 현안이다.

일부 위기에 직면한 전북이 의료용 대마산업을 통해 자본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 본다.

농촌의 '식품 사막화' 남의 일 아니다

사막 행성 아리키스를 배경으로 한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 '들풀(Dune)'은 물이 귀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을 묘사하고 있다. '들풀'에서 묘사된 사막, 즉 자원의 부족으로 생명이 유지되기 어려운 땅의 황폐함을 잊을 수가 없다. 얼마 전 우리 농촌지역이 '식품사막(Food Desert)'이 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평민들이 건강할 식품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마을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촌을 '식품사막'으로 표현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9만 753개 중 식품소재점이 없는 마을이 2만 7809곳(73.5%)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5,245개 행정리 중 83.8%인 4,388곳이 마을 내 식료품을 살 만한 점포가 없다. 기이 할랄 민한 수컷다.

180년대 스코틀랜드 사투에서 쓰인 용어 '식품사막'은 산업화되로 경제 협회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은 소매점이 폐업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구입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되버린 지역을 의미한다. 영국, 일본, 미국에서도 빈곤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한 지역이 식품사막으로 변하면서 해외에서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사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식품사막은 개인이 건강하고 영양이 있는 식품에 접근할 권리(먹거리 기본권)를 위협한다. 식품사막에서 지역 주민의 영양 섭취부족과 영양불균형은 아토피 질환에 비롯한 다양한 질병,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증

시론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농촌마을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점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제고 위한 정책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

”

가 등을 유발한다. 해외에서는 식품사막지역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푸드 허브(Food Hub)는 대표 사례이다. 디트로이트 푸드 허브는 식품사막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트럭이 전역을 순회하는 이동 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의 먹거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요리 교실, 영양교육, 농산물 재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6년 호주의 외딴 섬과 원주민 공동체에 신선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아웃백스토어(Outback Store)는 상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존 소규모 상점을 재장비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 물류 허

브를 운영하여 식품을 집결시킨 후 외딴 지역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장남 영광군 요양면에는 농촌이 식품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동락점령이 있다. 동락점령은 지역주민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매주 1회 42개 마을을 순회하는 1톤 트럭 이동점령이 운영되고 있다. 동락점령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농촌의 식품사막화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각한 전북자치도는 농촌의 식품사막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제 전북자치도 또한 농촌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식품사막 지도와 정기적 제작과 시민화지수 개발을 통해 도내 식품사막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식품사막은 '사회적 약자의 집중'과 '인간식량 공급 시스템의 붕괴'가 결합된 문제로, 대중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적인 식품 물류·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식품사막'은 농촌 주민의 식료품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이 맞춰져 이들의 사회적, 심리적 소외를 우리는 간과할 수 있다. 식품접근성 문제는 경제적 접근성, 식품가격, 교통시스템, 교육 수준, 먹거리에 대한 인식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사회취약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세만금국제공항을 물류 거점으로

경제판도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

복합화 항공물류산업 육성하기 위한 기업 유치, 산업생태계 조성 등 전략을 구상하고, 관련 상생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최근 국토교통부는 세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바 있다. 그 추진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여 올해 실시할 계획 후 2025년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세만금국제공항 재수립과 공사예산 증액, 여객 중심 공항 운영 전략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입지 강점과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 선정 등 항공물류 특성으로 지역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내 15개 공항의 후발주자로서 세만금국제공항은 건설에 필요한 시간 동안 기존 공항과 차별화되는 운영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항공물류 서비스는 한정된 적체 공간 한계로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을 담당한다. 전차상거래 제품, 의약품, 신선식품, 화장품, 반도체, 산업용 부품 등이 대표적이다.

수 수출입화물 처리에 강점

2023년 말 전체 항공화물 물동량은 약 365만톤이며, 인천공항에서 약 360만(99.1%)이 처리되었다. 인천공항은 주당 약 34,000톤 항공노선과 물류단위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나라 대표 공항이다. 세만금국제공항은 서해 중부

권에 위치하여 중국 수출입 화물 처리에 강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8개 국제공항과 31개 국제무여항을 단일 개발지역에 국제공항과 국제무역항, 산업단지,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은 세만금이 유일하다. 이는 항공·해상·육상 등 복합물류서비스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2023년 전차상거래 수출 규모는 약 340조 원으로 세계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차상거래 화물은 대부분 항공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한중 카페리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카페리는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빠른 서비스로 근거리에만 개설되며 물류 처리 속도가 빠르다. 세만금무시간에 도착한 국제카페리는 항공물류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 강점이 있다. 한중 카페리는 알국 정부가 합의하여 현재 인천(10만톤), 광택(5만톤), 군산(1만톤) 등 16개 항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북항운송(Sink-Air)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카페리와 항공물류를 결합하여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복합운송 물동량은 약 68,000톤(2022년)이며 이 중 28,291톤(38.2%)은 군산에서 처리하였다. 10개 항로에서 26,341톤(38.2%)을 처리하는 인천에 비해 단 한 개 항로로 이룬 농부신 선과다.

현재 수입 중인 세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계획에 따라 세만금 공항이 들어설 무렵에 별도의 푸드 허브 항공물류 플랫폼 서비스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제품 취급 유리

의약품, 신선식품 등 온·냉도 관리에 민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취급하는 산업에 유리한 기호인 것이다.

우리는 코도나19를 경험하며 여객 중심의 공항 운영에 한계를 경험했다. 여행금지 조치로 관련 산업의 어려움이 심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전차상거래 제품 등이 급증하여 항공물류산업은 오히려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였다. 여객이 줄어들고 공항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줄 만한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줄 만한 바 있다.

세만금국제공항이 여객과 물류가 조화로운 서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금이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복합화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유치, 산업생태계 조성 등 전략을 구상하고, 관련 상생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준비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2024년 10월 16일 전북도민일보

지방소멸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칼럼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
농촌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지방’의 ‘소멸위기’는 저출생, 인구 감소, 고령화가 주요 배경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거점 전략’이 야기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성장 거점을 개발해 수도권에는 사람과 재화(財貨, 財富)가 몰려들지만, 지방의 ‘낙수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수도권 ‘일국 사회’로 재편된 우리 사회의 기형적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은 개발과 성장의 ‘배후지’에 머물 뿐이다.

역사적으로 ‘도시’와 ‘농촌’은 유기적 결합관계였다. 농촌의 노동력과 먹거리 공급이 없었으면, 도시의 개발과 성장은 가능하지 않았다. 도시의 풍요를 이연하는 농촌의 화생이 전제돼 있다. ‘농촌이 뿌리요, 도시가 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이다. 그런 ‘농촌’이 지방소멸 위기의 상징이 되고 있다.

농촌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뒤따르는 것이 복지 인프라의 절대 부족이다.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시스템마저 충분하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복지 안포와 부족은 농촌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공허와 피폐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와 서비스를 ‘나’만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을 ‘사회적 배제’라 한다. 수도권-지방, 도시-농촌의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배제의 그늘에 지역 사회가 이미 들어간 것이다.

이런 현상은 향후 국가의 위기로 닥칠 공산이 크다. 이대로라면 ‘지속가능성’은 커녕 사회적으로 ‘회복력’을 갖기도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이 엄중한 질문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기본 사회’로 나아가는 실천방안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된다.

‘기본사회 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처하게 되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가는 실행 수단을 제시한다. 청년, 아이, 노인, 농민 등 ‘계층’에서부터 에너지, 주거, 먹거리와 같은 ‘필수 재화’까지 가능한 수준에서의 정책을 제시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아우른다. 그 선도 정책으로 떠오르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시-농촌 간의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농촌주민이 보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 여건과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소멸 위기는 더 크게 드려질 것이다. 이 시점에 전북자치도가 ‘농촌기본소득’ 선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농촌기본소득’은 ‘지역사회 유지 역할’에 대한 농촌주민의 ‘기여 보상’ 성격도 갖는다. 농촌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농촌과 지역의 자립’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행된 여러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비망으로 선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단언컨대,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었기에, 농촌의 기능과 지역을 유지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혁신적인 농촌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액을 분배해줘 매출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는 국가적 사회적 핵심 사안이다.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어도, 결정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관행적 정책의 관성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 돌파구가 농촌기본소득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24년 11월 18일 전북도민일보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

경제판도



이 남 호
전북연구원 원장

“
농업·농촌과 농민이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기(公器)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11월11일은 29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이었지만 자족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유지하는 생산자 농민의 역할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임에도 웃음보다는 사뭇 더 드리워진다. 과연 농촌과 농민은 행복한가. 농업인의 날을 지나치며, 농업·농촌 유지 수단을 지역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이 그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농산물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공급할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28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농업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그 기능은 생산자인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만 들어진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은 국민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우리 사회

를 지탱시키는 공공재로서의 선택가능성이 막대한데 농민이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에 그 가치가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국가가 나서 농업 유지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 역할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보상 지원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으로 일컬어지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이 정책은 2019년 농정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설계돼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농가당 연 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도 있다.

한편 농촌과 농민은 우리 사회의 ‘아흔 손가락’이 되고 말았다.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골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졌다.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촌의 피폐는 가장 먼저 ‘지역소멸 위기’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도시로의 사람과 자원의 집중은 많은 ‘경제적 비용’ 증가와 ‘사회적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과 환경, 주거와 생활, 건강과 복지 등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을 위한 ‘자원’,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 소비

한 이후의 ‘처리’는 농촌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도시만으로는 불완전한 ‘반쪽’일 수밖에 없다.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는 어느 한쪽에서 풀 수 없는 매듭이다. 농촌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혁신적 지역정책인 ‘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일차리가 없고, 생활하기 불편하여 모두가 등 돌리는 농촌지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달론이 담겨 있다. 농촌주민은 생활여건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 정책으로 그 불편과 차별을 완화하고자 어렵다. 농촌과 농민을 지켜내려면 어떤 방법으로는 보상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그래서 절박한 현안이다.

농업·농촌과 농민이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기(公器)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민은 농사만으로 가계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농촌에는 농민만 살지 않는다. 이미 시행중인 농민공익수당과 더불어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하는 명백한 이유다.

※ 이 글은 황영호 선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기필

익산칼럼

돈이 되는 녹색복원, 익산발전 新동력으로



천 전 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익산시가 왕궁 지역에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녹색복원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녹색복원은 생태계만 회복시킬 뿐 지역경제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녹색복원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욕시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인 프러워 힐스를 생태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영국 권윌주 에덴 프로젝트는 채석장을 식물원과 시민참여 정원으로, 네덜란드 오스트 바르데르스플라센은 간척지를 밭, 사슴, 새들의 나열으로 만들어 생태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반면 말하면 생태복원으로 생태계도 회복하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알아본 국제사회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은 2021년에서 2030년을 생태계 복원 10개년으로 제시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달성을 위해 자연을 회복하고 양(+)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천명하였다.

정부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산림,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익산의 여건은 어떠한가? 익산에는 왕궁에 한해선 집단 속사지역, 익산역을 কেন 채석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물론 훼손지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녹색복원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익산시 남쪽에는 황새와 독수리, 노랑부리백로가 활동하는 황새의 나열인 만경강이 있어 겨울철엔 탐조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등부에는 금마서등 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원앙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북부에는 금강을 따라 용안생태습지와 전북복원지지도 삼천리길이 조성되는 탐방로가 있다. 이런 자원들을 녹색복원과 연계한다면 지역사회에 다양한 생태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익산에서 추진된 녹색복원 사업은 생태계 회복만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점마음과 혁신포전에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사업은 공공 주도인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는 부족했다.

또한 국공유지 중심의 소규모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생태환경 회복에만 초점을 두어 지역경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익산이 추진해야 할 녹색복원 사업은 생태계 복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태계 서비스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효과가 큰 대규모의 녹색복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익산 왕궁 정착농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왕궁은 부지면적만 179만㎡로,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사업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따라서 산림-농지-습지-하천에 이르는 연속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민간기업은 ESG경영 차원에서 녹색복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공공과 민관이 함께하는 산계면의 K-녹색복원사업으로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고, 다양한 생태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많은 자원과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청사진에 불과할 것이다.

국가와 익산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 그리고 타 지역보다 앞서 익산의 녹색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익산시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력이 돌아나갈 소망해 본다.

전북 투자청 설립 시급하다

경제판도



김 시 벡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투자청을 통해 새로운 지역개발 및 금융모달을 구축하여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

오늘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

자유투자진흥기구(IPA: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명 '투자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새만금 개발과 이천단지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지정 등으로 경제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들어서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와 같은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 부족하다. 서울, 경남, 대전 등 국내 타지역에서는 이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자치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점차 축소되고 민간 자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전북은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투자청은 단순히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 유입, 국제 행사 유치, 해외 유학생 등의 인재 유치 등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전담 기구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전북자치도 역시 투자청 설립을 적극적인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성공 사례로서 런던의 London & Partners는 2022년 설립된 시장 지속 기관으로, 국제 투자유치와 관광,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89,000개의 일자리와 원화 기준 약 6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런던의 브랜드를 글로벌화하는데 성공했으며, 해외 유학생 유치와 대규모 국제 이벤트 유치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 베를린의 Berlin Partner는 베를린의 5개 핵심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기술 이전, 투자 촉진 등의 다양한 업무 수행으로 2020년에는 223개의 기업 유치와 1조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베를린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민선 8기는 공격적인 기업 유치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 기업유치를 위한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17일-18일 무인 전담 애로해소 지원, 신성장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가치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유치 성과가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관련 기관의 정보와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투자청 설립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투자청은 투자유치 및 홍보 창구를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기업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기업 만족도 제고로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투자자와의 협력 및 자본 유치를 통한 재원 마련 필요를 확보할 수 있다. 즉, 투자청을 통해 새로운 지역 개발 및 금융 모델을 구축하여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글로벌 대도시에서부터 투자청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약 2천여개의 도시 및 지역에서 투자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투자청 설립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4

JEONBUK STATE INSTITUTE
ARCHIVE 2024

발 행 인 | 이남호
발 행 일 | 2025년 2월 25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기 획 | 장세길·박자경·신지원
주 소 |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전 화 | 063-280-7100
팩 스 | 063-286-9206

제작 및 디자인 | 더이룸 063-251-3080

ISBN 978-89-6612-556-2 9306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4

JEONBUK STATE INSTITUTE
ARCHIVE 2024



ISBN 978-89-6612-556-2